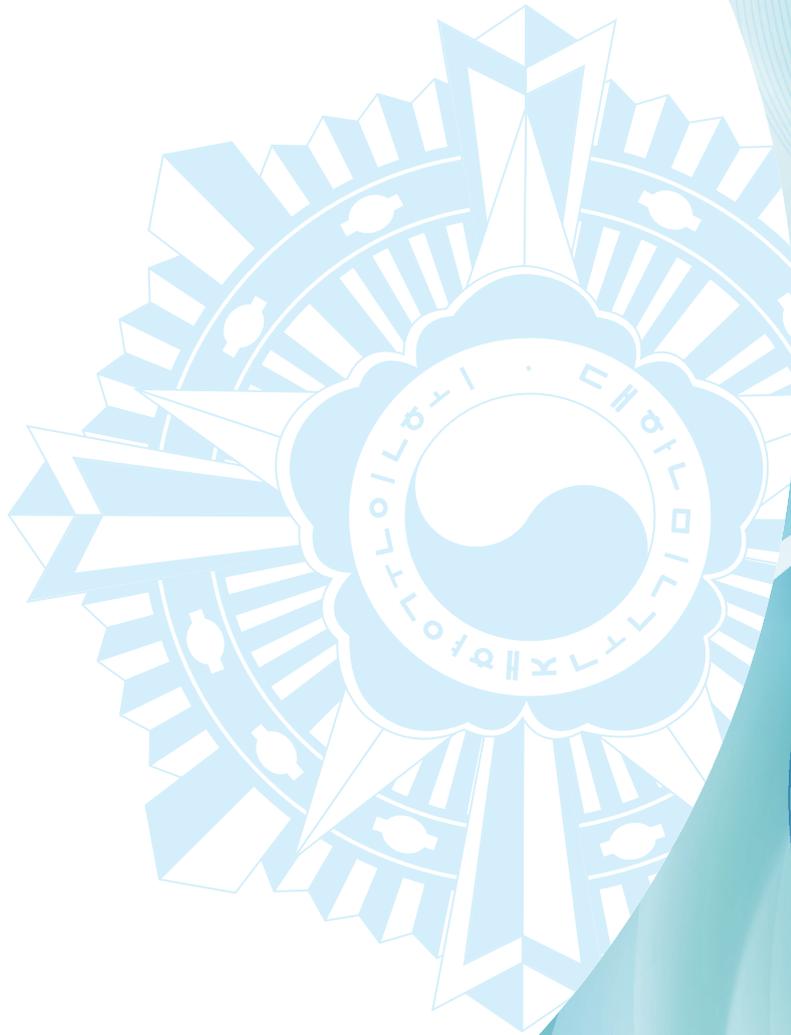


<http://www.korva.or.kr>

ISSN 2672-040X

안보전략연구

2023.10. (제10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http://www.korva.or.kr>

ISSN 2672-040X

안보전략연구

2023.10. (제10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

제10호

본지는 연2회 발간되는 심사제 학술지입니다.

발행 2023년 10월 8일
발행인 신상태(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편집인 이화수(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장)
편집위원장 문성목(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나태종(충남대학교)
이영찬(영남대학교)
이성춘(원광대학교)
장광열(국방대학교)
최규상(강릉원주대학교)
최윤철(상명대학교)
편집간사 문근형(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발행처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전화 02-499-0201
팩스 02-417-5527
이메일 korvass0201@naver.com

ISSN 2672-040X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이며 재향군인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에 실린 논문내용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 (<http://www.korva.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 **북한 급변사태 시 자유화 지역에서의 민군작전(CMO) 수행방안**
 - 안정화사단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중심으로 -
 | 김성진 | 1

- ❖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현안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 박동순 | 45

- ❖ **중국의 패권화 전망에 대한 분석적 평가**
 | 박상중 외 | 85

- ❖ **MZ세대 장병 중복세력 인식 및 대적관 교육 방안**
 - 공군용사를 중심으로 -
 | 손창현 | 123

- ❖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발전방안**
 | 최승우 | 151

북한 급변사태 시 자유화 지역에서의 민군작전(CMO) 수행방안

- 안정화사단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중심으로 -

김 성 진 *

- I. 서 론
 - II. 안정화 작전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 III. 주요 민군작전 사례 진단 및 분석
 - IV. 안정화사단의 민군작전 수행절차 및 행동화 방안
 - V. 결 론 및 시사점
-

*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박사),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전)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초빙교수 / E-mail: btnksj@naver.com

논문 요약

구소련이 붕괴(1991)하고, 냉전(Cold War)이 종식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되었다. 그러나 국지 분쟁과 새로운 감염병, 테러, 마약 등을 비롯한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끊이지 않는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이라크 전쟁(2003) 간 군사적으로 승리하고도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최근의 러-우 전쟁(2022)에서 발생한 러시아 내부의 반란은 중지되었지만, 급변(불안정) 사태가 재발할 개연성은 여전하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반격작전은 푸틴의 리더십을 추락시키고, 내부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것이다. 김정은은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와 독일의 히틀러가 개혁·개방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정(神政) 통치를 강화하며 핵·미사일 도발로 핵보유국을 추구하고 있지만, 민심 이반과 급변사태의 개연성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 결국, 유사시 한국군의 민군작전 투입 시기와 수행 수준은 동북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내용상으로 안정화사단의 민군작전 수행방법·절차를, 시대적으로 6·25전쟁~최근 사례를 역사적 비교연구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독립변수는 '급변사태', 매개변수(작전변수)는 '정치(P)·군사(M)·경제(E)·사회(S)·기반시설(I)·정보(I)·물리적 환경(P)·가용시간(T)', 종속변수는 '민군작전'으로 설정했다. 관련 교리의 개선과 수행절차·방법이 발전하기를 바란다.

주제어 : 안정화 작전, 민군작전, 민사작전, PMESII-PT

I. 서론

국제사회는 갈등과 대립,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변화되는 분쟁(전쟁) 양상을 극복(주도)한 국가는 패권국이 되었고, 실패한 국가는 패망하거나, 영향력이 감퇴(減退)하였다. 전쟁사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은 전면전의 절정기였고,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2014)과 이라크 전쟁(2003~2010)은 또 다른 양상으로의 전환기였다. 이전까지는 물리적 파괴와 상대국의 전쟁 의지를 없애는 노력이 군사작전의 중심이었다면, 점차 민심의 안정 및 수습이 전쟁의 최종 승리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동되면서다.¹⁾

김정은의 신정(神政) 통치체제는 여느 공산주의 국가와 다르게 인위적인 정권 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²⁾ ‘최고 존엄’을 결사옹위하기 위해 주민들의 삶은 얼마든 희생할 수 있음과 핵의 선제 사용을 겁박(劫迫-threat)하고 있다. 핵 무력을 법제화하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5대 핵심 전략무기’의 개발도 완성단계다.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는 올해를 ‘핵무기 전략 강화의 해’로 선언했다.³⁾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25기에서 30~45기로 높여 평가하고 있다.⁴⁾ 또한, 대북 제재 움직임에 중·러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⁵⁾ 북한의 반복된 무자비한

- 1) 김성진, 『군사혁신론』 (서울:백산서당, 2023), p. 149.; 조기형, 『동시·후속 안정화 작전 수행방안』 (서울:한국전략개발연구소, 2011), p. 180.; HQs, 『FM 3-07 Stability Operations and Support Operations』 (Washington:U.S.Army, 2003), p. 1-2~1-3.
- 2) 천영우, “대북 역제가 실패할 상황에 대비하라,” 『조선일보』 칼럼, 2023. 6. 9.; 최연진, “DJ 참모 장성민 "신정체제 北서 위임통치? 김정은 코마 상태,” 『조선일보』, 2020. 8. 21.
- 3) 김민정, “미 정보위원장 “북한, 핵탄두 소형화 성공…뉴욕 타격 능력 보유,” 『KBS NEWS』, 2023. 6. 5.; 김성진,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관성: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의 지혜,” 『월간 KIMA』(성남: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3년 4월), pp. 38~43.
- 4) 이성훈,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위협 양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 『INSS 연구보고서 2022-17』 (서울: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년 2월), pp. 33~35.; SIPRI Yearbook 2022: Arms Control Association, “Nuclear Weapons: Who has What at a Glance,” Fact Sheet & Brief, 2021.; 권영은, ““북한에 핵탄두 40발 있다” 일본연구소 추산,” 『한국일보』, 2023. 6. 5.; 박일중, “스웨덴 싱크탱크 “북한 핵탄두 30기 보유, 50~70기 조립 가능”, 『KBS NEWS』, 2023. 6. 12.
- 5) 김성진,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한국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효율성 증대방안: 통합방위체계

속청, 군부 실세들의 계급 강등 및 복직 등을 통해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여기에다 강압적인 주민 통제에도 비정상적인 응집력을 보이고, 복종(순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관성 등에 따른 변화 요인도 적지 않다.⁶⁾

한편 러시아 바그너 용병 그룹(예브게니 V. 프리고진)은 독재자(푸틴)의 특성과 군 내부의 갈등이 반란(급변사태)을 시도한 유인(誘因)임을 내세웠다.⁷⁾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에서 “~통일이 갑자기 올 수 있지만, 준비된 경우에만 실현할 수 있다.”라며 급변사태에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⁸⁾ 美 합참의장(마크 A. 밀리)이 “한반도는 즉각 대응태세가 필요하며,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경고한 대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

북한(이하 자유화 지역) 급변사태는 동북아를 격랑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며,¹⁰⁾ 안정화 사단(SD) 또는 지정부대의 민군작전(CMO) 투입 시기 결정과 숙련도 즉, 민군작전의 전환절차 및 기준, 수행방법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¹¹⁾ 군사작전과 연계되어 ‘통일부(이하 자유화 통합본부)’ 주도의 민사작전

를 중심으로,” 『한국군사』 Vol. 12. (서울: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2), pp. 45~47.

6) 장희준, “140kg 넘긴 北 김정은…한반도 앞날 달린 '건강 이상설',” 『아시아경제』, 2023. 6. 6.; 김성진, “군사비 부하(負荷) 공약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역량 고사(枯死)시켜야,” 『KONAS』 안보칼럼, 2023. 2. 16.

7) 천영우, “대북 역제가 실패할 상황에 대비하라,” 『조선일보』, 2023. 6. 9.; 김성진, “한·미동맹 70주년과 6·25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글로벌국방』 (서울:글로벌국방연구포럼, 2023년 6월), pp. 41~44.

8) 조지현,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상황, 북한 주민들도 알게 해야,” 『중앙일보』, 2023. 1. 27.; 박현주, “北 급변사태 시 대규모 보트 피플?…예상 시나리오,” 『아시아경제』, 2023. 5. 27.

9) 류재민, “미 합참의장 “北 미사일 위협 현실적, 한반도는 전쟁 가능 지역,” 『조선일보』, 2023. 7. 22.

10) 본 연구는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급변사태가 발생 시 자유화 지역에서 수행하는 민군작전의 절차·방법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 RAND Corporation, 2013. pp. 259~262.; 김성진, “한반도의 역학관계와 지정학(地政學), <국방혁신 4.0>의 현주소,” 『KONAS』 안보전략논단, 2023. 1. 2.).

* ‘자유화 지역’은 ‘한국이 수복하거나, 북한 남침에 응전·반격하여 수복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다(통일부, <자유화 지역 안에서의 정부 업무 운영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2010. 7. 28.).

11) 안정화 작전은 ‘Stabilization Operations’, 민군작전은 ‘Civil Military Operations’,

으로 전환하는 핵심과업이어서다. 그러나 안정화 작전(민군작전+민사작전)에 관한 교리 및 개념은 분명하지 않으며, 민사작전은 ‘민군작전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¹²⁾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질적·기술적 방식을 채택하되, 세 가지 방향에 집중하고자 한다.

첫째, 안정화 작전과 민군작전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둘째, 6·25전쟁-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크 전쟁의 민군작전 사례와 급변사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작전변수(PMESII-PT)를 활용하여 민군작전의 수행절차·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¹³⁾

본 연구는 5개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2장은 안정화 작전에 관한 선행 이론을 검토하고, 제3장은 6·25전쟁-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크 전쟁 사례를 진단하며, 제4장은 안정화사단의 민군작전 수행절차 및 행동화 방안을 구체화하였고, 제5장에서 결론과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II. 안정화 작전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1. 급변사태의 개념 및 의미

급변사태를 비롯하여 전·평시 군사작전과 연계되는 안정화 작전에 관한 연구는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기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미

안정화사단은 ‘Stabilization Division’, 민사작전은 ‘Civil Affairs Operations’의 약자다.

- 12) 합동교범 3-12(2016)는 민사작전이 ‘민군작전 일부’라지만, 민군작전은 합참의장 책임의 ‘작전 유형’이고, 민사작전은 자유화 통합본부장(통일부 장관) 책임의 ‘기능 과업’으로 주체와 역할이 다르다. 따라서 무엇이 일부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미군은 안정화 작전을 정부 기능의 일부로 보지만, 합법적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군의 역할로 적시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3-12 『합동 안정화작전』(서울: 합동참모본부, 2016), p. 1-7.; The Joint Chiefs of Staff, JP 3-0 『Joint Operations』 (2011), p. V-4.; The Department of the Army, FM 3-07 『Stability Operations』 (2008), p. vii.).
- 13) 심리적 마비 등의 행동효과를 동반하는 성과를 창출하려면, 유기적으로 연계 및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8개의 작전변수 즉, 정치(Political), 군사(Military), 경제(Economical), 사회(Social), 기반시설(Infrastructure), 정보(Information),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가용시간(Time)을 채택하였다.

를 부여하고 있다.¹⁴⁾ 2000년대 이전까지는 동구권(東歐圈)의 붕괴를 원용(援用-claim)하여 급격한 변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점차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개념적으로 구분하거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의미 및 개념을 달리하기에 본질적 측면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남만권(1997)은 “북한 내부의 체제 위기 요인이 상승 작용을 통해 급속히 표출되고, 정치·경제·군사·사회적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중앙지도부의 체제 유지 능력에 위해가 가해지는 비상사태”로, 김일영(2003)은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외부의 군사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된 상태”로, 세종연구소의 송대성(2007)은 “북한에서 현재의 정치 권력 구조 혹은 사회 질서가 교란 및 붕괴하는 등의 심각한 사태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붕괴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2009)는 “북한에서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정치·외교·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⁵⁾ 세종연구소의 정철호(2014)는 ‘체제 붕괴로 인해 북한 정권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 외부 개입이 불가피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개입요건을 군사적 유형-전개 과정-대응전략으로 구분하였으나, 중국-한·미 간 충돌에만 주목했을 뿐, 북한 특성과 내부의 반발 요인은 배제하고 있다는 측면은 아쉬운 부분이다.¹⁶⁾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내용과 최근의 동북아 정세 및 국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급변사태’는 “북한의 내부 환경과 조건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한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1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급변(急變)’은 ‘상황이나 상태가 갑자기 달라지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고’로 ‘사태(事態)’는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나 상황 또는 벌어진 일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검색일: 2023. 8. 27.).; ‘급변’이란 용어는 1990년 2월 23일 당시 국토통일원(지금의 통일부) 장관(이홍구)이 청와대 고위 당정회의에서 “북한에서 동구(東歐)와 같은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라고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15) 남만권, “북한 급변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내적 대응방안,” 『국방부 군비통제 세미나 자료집』 (서울:국방부, 1997년 7월) p. 29.; 김일영, “북한 붕괴 시 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 『국방연구』 제46권 제2호(2008), pp. 138~139.; 송대성,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전망,” 『비상기획보』 제81호(2007년 12월) p. 44.; 김열수,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 방향,” (국방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09) p. 13.

16) 정철호, 『북한 유사시 중국 군사개입 대응 한국의 안보전략』 세종정책연구 2014-5 (성남:세종연구소, 2014), pp. 34~41.

2. 안정화 작전의 개념 및 특징

미국은 영화 ‘블랙호크다운’으로 잘 알려진 소말리아 내전(1991~)과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2014), 이라크 전쟁(2003~2010)을 치르면서 군사적 승리가 전쟁의 최종 상태(End-state)가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성되었다. 이후 군사작전에 그치지 않고 안정화 작전에 성공해야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체득하면서 2003년 처음 개념을 도입하였다.¹⁷⁾

한국군은 2005년까지 정부의 5대 기능 위주로 민사작전을 수행하다가 2006년 처음으로 고유의 민군작전 개념을 개발하였다.¹⁸⁾ 이후 전·평시 국내에서 수행하는 개념이었으나, 2016년부터 자유화 지역에서 수행하는 과업 중심의 작전개념으로 변경하였다.¹⁹⁾

3. 미군의 안정화 작전개념과 인식

미군은 본토 이외 지역에서의 원정작전(Expeditionary Operation)을 통해 민간요소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체득하였고, 점차 작전개념을 발전시켰다. 1943년 야전교범(FM) 27-5 『Military Government and Civil Affairs』는 ‘군정(軍政)’으로, 1962년 개정판은 ‘민사작전(CAO)’으로, 2001년 합동 교범(JP)에서 ‘민군작전(CMO)’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지정된 민사부대나 기타 부대가 수행하는 활동으로 부대-현지 주민-기관 간의 관계 설정, 유지, 영향을 확대하고 어떤 지역 또는 국가 내에서 안정을 재구축 및 유지하기 위한 목표 달성을 직접 지원한다.”라고 정의하며 전장 환경과 여건에 부합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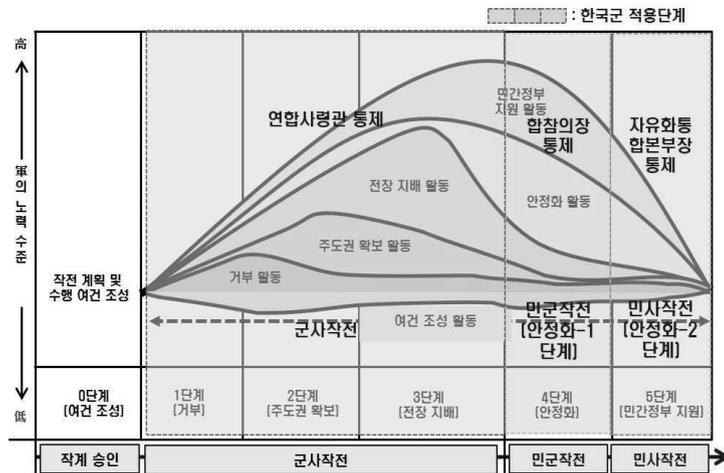
17) 안정화 작전은 ‘인간안보와 함께 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 기존체제를 복구 및 건설’하는 개념으로 주둔국이 내부적으로 안정화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The Joint Chiefs of Staff, JP 3-07(2011), p. 1~3.); 오세민·배광용, 『효과적인 안정화 작전 수행을 위한 전력 발전 방향』 (대전:육군교육사령부, 2008), p. 2.; 장보선, “안정화사단 편성방안 연구,” 『군사논단』 제98호 (서울:한국군사학회, 2019), pp. 131~133.

18) 필자는 2006년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한국군의 민군작전 개념을 최초로 만들었으며, 군사작전-민군작전-민사작전으로의 전환 기준 및 절차·행동 방안을 수립하였다. 미군의 작전 여건과 수행방식이 한국군과 달라서 작전의 연계성과 효과 창출이 불가능해서였다. 육군본부 정책연구원(오상택)은 민군작전은 주민(住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표현함이 타당하지 않나 싶다(오상택, “6·25전쟁 작전 시기별 민군작전 사례 연구: 민간인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34집 (대전:육군 군사전략연구소, 2012), pp. 113~114.).

19) 합동참모본부, 앞의 책(2016), p. 부-45.

록 발전시키고 있다.²⁰⁾

미 육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사후검토(AAR) 과정을 통해 안정화 작전이 전쟁 종결의 요건임을 인식하고도 정립하지 않은 채 이라크 전쟁에 투입하였다. 당시 도널드 H. 럼즈펠드(Donald H. Rumsfeld) 국방부 장관의 오판은 오바마 행정부를 전쟁의 수렁에 빠뜨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정화(Stabilization) 또는 안정화 작전(Stability Operations)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시기다. 여기서 안정화 작전과 민군작전은 독립된 작전이 아니라 전략적 수준의 작전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목표를 부여받을 경우, 일체화된 조치(unified action)”가 필요하며, 정부 기능의 일부이지만, 합법적이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땐 군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안정화 작전을 민군·민사작전의 상위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서로 연계 및 통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²¹⁾ <그림-1>은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단계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그림-1>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단계 비교

* The Joint Chiefs of Staff, JP 3-0(2011), p. V-7.에 필자가 한국군의 군사작전-안정화 작전(민군작전-민사작전) 단계를 추가하였음.

2003년 육군은 FM 3-07 『Stability Operations and Support

20) The Joint Chiefs of Staff, JP 3-57 『Civil-Military Operations』(Washington D.C.:DoD, 11 Sep 2013), p. ix.

21) The Department of the Army, FM 3-07(2008), p. vii.

Operations』을 교리로 채택하였다. 초기엔 독립적 개념보다 전쟁 이외의 평화 작전(MOOTW), 대테러작전, 비전투원 후송 작전(NEO) 등 저강도 분쟁을 수행하는 하나라는 부분적 요소로만 취급하였다. 그러나 군사작전 이후에 지역 안정과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과업이 전쟁 승리에 결정적인 요소로 입증되면서 발전하였다.²²⁾ 따라서 “안전(안정)한 환경을 유지 혹은 회복하고, 필수 공공서비스와 기반시설 복구,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타 요소들과의 협조를 위해 본토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군사작전, 과업, 활동을 포함하는~”으로 정의하고 있다.²³⁾ 이는 특정 단계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작전단계에 적용하는 개념으로서 전쟁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를 망라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격·방어 작전과 다르게 제대 및 시간, 장소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며, 제반 활동 및 단계에서 통합-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한국군의 안정화 작전개념과 인식

2006년 이전까지 한국군은 한미연합사령관(이하 연합사령관)이 주도하는 군사작전을 구체적인 전환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부(이하 자유화 통합본부)가 주도하는 민사작전으로 전환하였다. 즉, 민군작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에 주도(Supported)-지원(Supporting) 관계와 전환 기준을 설정하는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후 2006년 UFG 연습 시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안정화 작전본부 상황실’을 설치하였다. 2010년 합동 교범 3-12 『합동 안정화작전』이, 2015년 육군 교육회장 15-3-1 『안정화작전』이 발간되며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²⁴⁾

2016년에 발간된 합동교범 3-12는 “자유화 지역에서 안정된 환경의 조성과 통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군이 정부·민간 분야와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기반시설 복구, 민간의 안전·통제체계를 구축하는 제반 군사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⁵⁾ 두 가지 목적 때문이다. 첫째, 군사작전과 국가정책 목표를 달성하

22) 합동교범 JP 3-07(2011).; 합동교범 JP 3-0(2011).; 육군교범 FM 3-07(2014)을 통해 완전한 독립작전 개념으로 정착하였다.

23) The Department of the Army, FM 3-07(2008), p. vii.

24) 합참, 합동교범 3-12『합동 안정화작전』(서울:합참, 2010), p. 서-2.;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회장 15-3-1 『안정화 작전』(대전:육군교육사령부, 2015), p. 1-1.

25) 합동 교범 3-12(2016), pp. 1-5, 부-45는 안정화 작전 시기를 민감하다며 제시하지

기 위해 자유화 지역을 안전(안정)한 작전환경이 되도록 조성하고, 적대세력을 축출하기 위함이다. 둘째, 합법적인 정부·기관에 책임을 이양하여 조기에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그림-2>는 안정화 작전-민군작전-민사작전의 상호 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림-2> 안정화 작전과 민군·민사작전의 관계도

* 합참, 앞의 책(2016), pp. 1-12~1-13.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하였음.

안정화 작전은 초기엔 민사 5대 기능(function) 위주로 진행하였으나, 고유의 민군작전 개념이 형성된 이후 과업(task)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때 민군작전의 주체 및 역할은 군이 주도(supported)하고, 자유화 통합본부가 지원(supporting)하는 관계로 설정하였다. 민사작전으로 전환되면, 자유화 통합본부가 주도하고, 군이 지원하는 관계다. <표-1>은 안정화 작전-민군작전-민사작전의 특성을 정리하였다.²⁶⁾

않았지만, 하위 개념인 민군작전은 ‘전·평시’로 적시하고 있다.
26) 합참, 앞의 책(2016), pp. 부-28~부-30.

〈표-1〉 안정화 작전-민군작전-민사작전의 특성 비교(2016)

구분	안정화 작전	민군작전	민사작전
대상	주민, 적군	적군, 주민	주민
시기	- * 2016 합동교범에 미제시	전·평시	
지역	자유화 지역	한반도 전체	
가용 전력	작전부대, 민사부대, 안정화사단, 민·관 요소	작전부대, 안정화사단, 민사부대	민사부대, 민·관 요소
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의 안전 확립 •민간 통제체계 확립 •필수 공공서비스 복구 •경제 및 사회 기반 시설 발전 지원 •정부 통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군 정규소대급 이상의 저항 활동 제거 •주민과 자원 통제 •자원획득 및 지원 •인도적 지원 •주민홍보와 선무활동 •민사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사 5대 기능 * 행정, 치안, 구호, 선무, 자원 관리

* 합참, 앞의 책(2016), pp. 1-11~1-13.을 토대로 하여 필자가 정리하였음.

안정화 작전은 민군작전과 민사작전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 대상과 시기, 지역, 가용전력, 과업의 구체화 정도가 작전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안정화 작전을 “전·평시 자유화 지역의 안정(안전)을 회복 및 민간 정부로의 이양 여건을 조성하는 군사·비군사적 활동의 전반(全般)”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하위개념인 민군작전은 합참의장 책임으로 수행하며, 자유화 통합본부장이 주도하는 민사작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로서 작전부대와 함께 임무를 담당한다. 민사작전은 ‘민군작전의 일부’라는 한정된 인식에서 벗어나 합참과 자유화 통합본부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안정화-1단계인 ‘민군작전’이 완성된 다음 전환하는 단계가 ‘민사작전’이어서다.²⁷⁾ 〈표-2〉는 한국군이 안정화 작전 간 수행하는 6대 핵심과업과 27개 세부과제다.

27) 합참, 앞의 책(2016), pp. 1-6~1-7.

〈표-2〉는 한국군의 안정화 작전 6대 핵심과업과 27개 세부과제

핵심과업	세부과제
① 안정화를 위한 군사작전	• 중요시설 방호 • 대테러작전 • 병참선 방호 • 수색 및 정찰 • 부대 방호태세 유지
② 민간의 안전 확립	• 주민 성분분류 및 통제 • 소요사태 방지 및 통제 • 주요시설 및 인원보호 • 무장·동원해제, 재통합 • 국경 및 해안 통제 • 피난민·주민 이동통제 • 폭발물 및 위험 물질 제거
③ 민간의 통제체계 확립 및 지원	• 치안체계 확립 • 사법체계 확립 • 교정체계 확립
④ 필수 공공서비스 복구	• 민생물자 확보 및 분배 • 공공보건 활동 • 학교 교육 지원 활동 • 인권보장 활동
⑤ 경제 및 사회기반시설 발전 지원	• 민생 경제활동 인정 • 천연자원 및 환경보호 • 사회기반시설 긴급 복구
⑥ 정부 통치지원	• 적대 정권 유지기구 해체 • 선무·홍보 활동 • 주요 시설 및 자원관리 • 대중매체 통제 및 운용 • 주민 자치기구 및 임시행정기구 조직

* 합참, 앞의 책(2016), pp. 1-10~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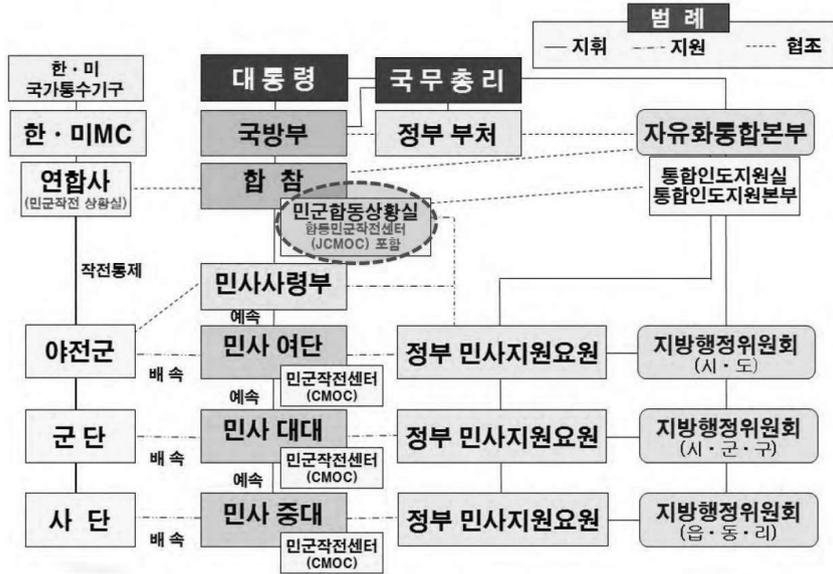
〈표-2〉의 안정화 작전 핵심과업과 세부과제 도출 간 민군·민사작전 단계가 혼용(混用)되어 있어 작전 수행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²⁸⁾

5. 한국군의 민군작전 개념과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민군작전(CMO)에서 ‘민군(民軍)’은 ‘민(民)과 군(軍)의 상호 관계’를 뜻하며, 군사 측면에서는 군대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이다. 합동교범 3-12(2016)는 “전·평시 군사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군이 정부, 국제기구(이하 IGO), 비정부기구(이하 NGO), 주민과의 관계를 구축·유지·확대하기 위한 제반 군사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

28) 안정화 작전은 군사작전(연합사령관 책임)에서 안정화-1단계인 민군작전(합참의장 책임)으로 넘어온 상태이기에 ‘안정화를 위한 군사작전’은 혼란스럽다. 이때는 군사작전으로 북한군 중대 규모가 조직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다. 따라서 연합사령관과 합참의장이 민군작전으로 전환 또는 전환을 협의하는 시기로서 군사작전이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즉, 안정화-1단계(민군작전)는 북한군 소대 규모가 조직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도록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후 자유화 통합본부가 주도하는 통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민사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합동교범 3-12(2016), p. 1-11.의 과업 명칭 중 ‘① 안정화를 위한 군사작전’은 다르게 표현함이 바람직하다.

나 연합사령관이 통제하는 군사작전에서 합참의장이 통제하는 민군작전, 자유화 통합본부장이 통제하는 민사작전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²⁹⁾ <그림-3>은 한국 합참의 민군작전 수행체계다.



<그림-3> 한국 합참의 민군작전 수행체계

* 합참, 앞의 책(2016), pp. 2-14~2-16.; 합참, 『민군작전 시행지침서』 (서울:합참, 2012), p. 개-9-4.

이때 민군합동상황실에 ‘합동 민군작전센터(JCMOC)’를 운영함은 임무 및 역할에 대한 교리적 이해, 효과·타당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³⁰⁾

29) 합동 교범 3-12(2016)는 안정화 작전의 적용 시기도 민감한 표현이기에 삭제했다지만, 하위개념의 민군작전은 전·평시로 적시되어있기에 혼란스럽다(합참, 앞의 책(2016), pp. 1-6~1-7, 부-48~부-49.); 안정화 작전과 민군작전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전환절차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합동참모본부, 앞의 책(2016), pp. 1-6~1-7, 3-17~3-25.).

30) ‘합동 민군작전센터(JCMOC)’는 정부·민간 요원이 현장에서 협조·조율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특히 편성 상 대대급까지 민사 요원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민사부대도 자유화 통합본부 소속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민사지원팀과의 관계 정립이 불분명하다. 통제 목적이라면, 현장부대로 전환함이 타당하다(The Joint Chiefs of Staff, JP 3-57(2013), pp. II-20.); 장보선, 앞의 논문(2019), pp. 124~125.).

6. 소결론

안정화 작전에서 민군작전은 연합사령관 책임의 군사작전과 연계되지만, 한·미 간 개념은 차이가 있다. 미군은 안정화 작전을 전·평시 본토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하는 통합작전이고, 한국군은 단기 과업으로 적용 시기가 모호하다. <표-3>은 한·미군의 안정화 작전을 정리하였다.³¹⁾

<표-3> 미군-한국군의 안정화 작전개념과 차이점

구분	미군	한국군
군사작전 범주	'Unified Land Operations'을 수행하는 작전 요소	지상 작전 유형의 하나
작전목적	취약국가 → 정상국가	통치 질서 확립여건의 조성
작전중점	통치 행위를 포함하는 범(凡)정부적 활동	군사작전 및 정부 지원 활동
작전시기	전·평시	-(적용 시기 미제시)
작전과업	비살상, 건설적 활동 * 전투작전 미포함	전투작전, DDR ³²⁾ 등 포함
작전지역	본토 이외의 지역	북한(자유화 지역)
인식	점령(occupy) 작전	수복(recovery) 작전
과업	식별	5대 과업 ³³⁾
	노력통합	일체감 유지가 가능
	인식정도	매우 힘든 과업(長期)
		5대 과업 + 정부 통치지원
		연계성이 제한
		동포의식+희망적 인식(短期)

* 한·미 교범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하였음.

미군은 전·평시 통합 및 일체화를 강조하는 장기 과업이지만, 한국군은 자유화 지역의 단기 과업이다. 안정화 작전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군사작전과

31) 장보선, "미래 한반도에서의 안정화 작전 수행방안," 『한국군사논총』 제6집 제1권 (2017년 6월), pp. 121~122.

32) 'DDR'은 'Disarmaments, Demobilization, Reintegration'의 약자로 무기를 반납하는 '무장해제', 민간으로 복귀하는 '동원해제', 정착하는 '재통합'이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안정화 작전』 (서울:국군인쇄창, 2015), p. 172.).

33) 5대 과업은 ① 민간의 안전 확립, ② 민간 통제 확립, ③ 필수 공공서비스 복구, ④ 정부 통치지원, ⑤ 경제·사회기반체계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다.

민군작전-민사작전 적용단계 및 시기가 다른데도 민사작전을 ‘민군작전 일부’로 해석하고 있다.³⁴⁾ 한·미 간 개념적 공감대와 인식의 공유, 교리 발전이 필요하다.

Ⅲ. 주요 민군작전 사례 진단 및 분석

1. 6·25전쟁 간 민군작전³⁵⁾ 사례

6·25전쟁 초기, 한국(이하 남한)은 피난민 통제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치안 질서 확립 및 유지가 어려웠고, 대량 피해로 이어졌다.³⁶⁾ 인천상륙작전(Operation Chromite)에 성공한 이후에도 자유화 지역의 통치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정국(政局)은 더 복잡해졌다. 한국군(이하 국군)은 북한을 남한의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UN·미군은 국제법 적용 지역으로 판단했다. 이는 군사작전과 민군작전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와 관계기관 협력에도 차질을 빚었다.³⁷⁾

북한군은 2개월여간 남한을 점령하며 조선노동당과 706 치안여단 48개 대대(24,000여 명)를 투입했다.³⁸⁾ 이들은 행정구역 단위로 행정·치안 질서를 장악한 다음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하고, 양민 학살을 자행하였다. 한편 UN·국군은 40여 일간 북한을 점령했다. 이때 UN·미국은 남한 정부의 주권을 38도선 이남으로 제한하고, 군정(軍政)은 제24군단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지역

34) 함참, 앞의 책(2016), p. 1-7.

35) 1950년 당시의 명칭은 ‘군정(軍政-Military Government)’이었으나, 2006년부터 고유의 민군작전(CMO) 개념을 새롭게 형성했기에 ‘민군작전’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고자 한다.

36) 북한이 남침하자 한강 이북지역은 피난민(이하 난민)과 전방지역으로 보충 및 추진되는 병력(차량)이 몰리면서 전방지원에 혼란과 장애가 발생했다(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1950.5.1.~1951.6.30.)』 (서울:문명사, 1951), p. B-12.).

37) 강만길, 『고쳐 쓴 한국 현대사』 (파주:창비, 2015), p. 265.; 오상택, 앞의 논문(2012), pp. 115~137.; 국방 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中)』 (서울:국방 군사연구소, 1996), p. 164.; 양영조, “피난민 정책,”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1945-1950』 (서울:한국학술정보, 2007), p. 26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제4권 (서울:군사편찬연구소, 2008), pp. 43, 75.;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 (군수편, 1955), p. 57.

38) 함참, 앞의 책(2016), p. 부-6.

적 특성과 민족주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행정 능력은 저조했으며, 국군과의 협조·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³⁹⁾ 물론 국군도 민군작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웠다. <표-4>는 남북한의 민군작전 실태를 정리하였다.⁴⁰⁾

<표-4> 6·25전쟁 시 남북한 지역의 민군작전 수행실태 비교

구 분	남한지역(북한군)	북한지역(UN군+한국군)
기 간	1950.06.25.~09.15(82일)	1950. 10월~12월(40여 일)
수행부대	조선노동당, 706 치안여단	미8군, 미 제1·10군단 + 국군 3사단, 수도사단
수행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참선 확보 • 민간인 통제 및 행정지원 • 국군·UN군 섬멸 • 대대 단위 전투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군이 각기 별도의 점령작전을 수행 • 한·미군이 각기 민군작전을 수행 * 기능별 전문가 미편성(공통)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치안 질서 확립 • 정부 행정조직의 조기 구축 • 점령지역 민군작전 수행을 사전 준비 • 무차별적인 주민 동원, 양민 학살 • 공포와 반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에 대한 UN·미군-국군의 시각이 상이(相異) • 행정업무 능력 및 북한 실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 • 민군작전 수행준비 부족 * 군정 요원 선발·교육, 현지 주민 관리·임용 등(공통)

* 합참, 앞의 책(2016), p. 부-6~부-17.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필자가 정리하였음.

UN군과 국군의 민군작전이 실패한 요인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유화 지역주민들이 국군과 UN군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등 호의적이었으나, 일부의 일탈 행위가 반복되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⁴¹⁾ 둘째, 국군은 북한을 ‘수복지역(Recovery Area)’으로, UN과 미국은 ‘점령지역(Occupation Area)’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전면전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UN군과 남한 정부 모두

39) Grant M.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York:King's Crown Press, 1951), p. 47.; 합참, 앞의 책(2016), p. 부-13.

40) 김남권·김철희, 『안정화 사단 운용』 (대전:육군교육사령부, 2011), p. 2~58.

41) 중앙일보사, 『한국전쟁 실록 민족의 증언』 제3권 (서울:을유문화사, 1973. 1월), pp. 125~128.; 육군본부, 『한국전쟁 사료』 제65권 (1988), p. 212.; 육군본부, 『육군본부 훈령』 제101호(국군 비행 엄금에 관한 건) (1950. 11. 13.).

민군작전 준비가 부족했으며, 주민(난민) 통제대책은 수립하지 못했다.⁴²⁾ UN에서 파견한 군정(軍政) 요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은 없었고, 전문가도 편성하지 않았다. 넷째, 군사작전 중심으로 하면서 민군작전에 소홀했다.⁴³⁾

2. 아프가니스탄 전쟁 간 민군작전 사례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하자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국가전략을 수세적 방어개념에서 공세적 방어개념으로 바꿨다. 이후 탈레반 정권과 알카에다를 붕괴시켰다. 이후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며, 2014년 겨울이 되고서야 마무리되었다. 초기부터 군사적 측면에서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지도부를 생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안정화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후과(後果)다.⁴⁴⁾

미 의회가 전폭적으로 예산(400억\$)을 지원했지만, 당시 도널드 H. 럼즈펠드(Donald H. Rumsfeld) 국방부 장관의 뇌리에 군사작전 이외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자마자 곧바로 이라크 전쟁으로 전환하면서 전쟁의 종결과 최종 승리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쳤다.⁴⁵⁾ 실패한 요인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최초 목표와 최종 상태에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았다.⁴⁶⁾

둘째,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민족적 특성상 군사작전만으로 적대세력을 완전히 격멸 및 소탕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선무(宣撫)활동, 재건 및 구호 등의 복구 활동이 지체되었다.⁴⁷⁾ 2002년 12월에 지방재건팀(PRT)⁴⁸⁾을 편성할 때도

42) 국방부정훈국 전사편찬회, 앞의 책(1951), p. C-48.

43) 합참, 앞의 책(2016), p. 부-16.; 육군 군사문제연구소, 『기록으로 본 6·25 전쟁 시 민군작전』(대전:육군본부, 2012), p. 291.;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1996), p. 164.

44) 합참, 앞의 책(2016), pp. 부-21~부-27.

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15), pp. 151, 218~223.

46) Christopher N. Koontz, 『Enduring Voices. Oral History of U. S. Army Experience in Afghanistan 2003-2005』(Center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 C. 2008), P. 3.

47) 정태식, “아프가니스탄 국가건설의 불안정에 대한 역사 사회학적 고찰,”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3권 2호(대구: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p. 57.

48) ‘지방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은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의 정통성 확보, 치안 유지 및 안정화, 군벌세력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편성된 민사부대의 하부 조직이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15), pp. 138~145.).

인원이 부족했고, 능력은 부실했으며,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는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다.⁴⁹⁾

셋째, 파병 교육 간 민군작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작전부대-안정화사단-민사부대 간 협조·연계는 지체되었고, 현장의 요구와 상충(相衝)되는 결과가 반복되며 혼란을 자초했다. 경찰조직을 재창설 수준으로 계획하고도 우선순위를 늦추면서 활용하지 못했다.⁵⁰⁾

넷째, 민간조직과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다. 병력 투입은 지체되었고, 현지 군벌(軍閥)은 동참을 거부하며 치안 질서 확립에 차질을 빚었다.

다섯째, 미국은 9·11테러 이전까지 전통적 안보위협을 중심으로 대비하였다. 즉, 국경을 초월하는 테러집단(알카에다 등)의 등장을 간과했기에 안정화 작전 간 일원화된 명령체계, 분권화 지휘체계를 갖추지 않았다.⁵¹⁾

3. 이라크 전쟁 간 민군작전 사례

2003년 3월 19일 핵·대량살상무기(이하 WMD) 회수, 테러 지원세력의 제거와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대통령을 축출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하였다.⁵²⁾ 전쟁을 개시한 지 2주 만에 후세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5월 1일 ‘이라크 자유 작전(Operation in Iraq)’을 종료했지만, 핵·WMD를 회수하지 못했다. 결국, 명분은 퇴색됐고, 전황(戰況)도 악화하며,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우(愚)를 범했다. 실패한 요인은 열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역계획을 4단계(억제 및 개입-주도권 장악-결정적 작전-작전의 전환(안정화 작전))로 수립하였다. 그러나 ‘결정적 작전’에 중점을 두면서 ‘작전의 전환(안정화 작전)’ 단계는 수행하지 않았다.⁵³⁾ 이들은 이라크 국민과 경찰이 호의적일 거라는 기대감만 있었을 뿐,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기 회수는 등한시하였고, 자원을 제공하는 데도 미온적이었다. 여기에 높

49) Christopher N. Koontz, 앞의 책(2003), pp. 479~481.

50) 홍성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교훈 분석,” 『군사사 연구총서 제3집』 (서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 6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15), p. 124.

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15), p. 124.

52) 조영갑, 『테러와의 전쟁』 (서울:북코리아, 2004), pp. 179~198.

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라크 전쟁과 안정화 작전』 (서울:국군인쇄창, 2014), p. 126.; 합참, 앞의 책(2016), pp. 부-21~부-22.

은 실업률(60%)과 경제 침체는 반미시위를 격화시켰다. 현지 문화와 종교 특성을 무시한 강압적 검문검색은 반미감정과 종파·종족 간 갈등을 증폭시켰다.⁵⁴⁾ 결국,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확증편향, 안이한 가정(假定)이 재건·복구를 실패로 돌려세웠다.⁵⁵⁾

둘째, 재건지표와 장·단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려는 인식이 부족했다. 따라서 관계기관 간 협동·합동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작전부대-민사부대 간 지휘·지원 관계도 구축하지 않았다.

셋째, 복수의 민사여단 본부를 전개하면서도 통합 또는 연합임시정부로의 증원, 민사부대의 경호체계는 통합(통일)하지 않았다. 다양한 종파(宗派) 및 부족들과 임시정부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조정은 없었고, 현지인들과의 정서 교류 및 사고(思考)를 이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⁵⁶⁾

넷째, 작전·민사부대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고, 장비 지급은 중복된 데다 시스템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특히 사단급에서 방호태세를 결정하는 통제 방식이 현장 여건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⁵⁷⁾

다섯째,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부족(部族)-정부 기구의 관계 정립에 소홀했고, 종교지도자와의 만남을 지체시켰다. 이라크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은 종파·부족 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⁵⁸⁾

여섯째, 연합군세력에 반대하는 부녀자(아이)들의 투항 및 회유, 이슬람 사원의 저항 및 적대 행위 등 법적 책임 소재에 관한 기본 교육을 진행하는 데 소홀했다.⁵⁹⁾

일곱째, 기본 화기와 통신·기동장비 등 편제 장비의 보급이 지체됐고, 안전관리 및 취급법을 숙지하는 데 소홀했으며, 우월감으로 반미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⁶⁰⁾

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14), pp. 339, 349.

55) 합참, 앞의 책(2016), pp. 부-21~부-22.

56) 합참, 앞의 책(2016), p. 부-22.

57) Paul F. Dicker, "Effectiveness of Stability Operation During the Initial Implementation of The Transition Phase for OPERATION IRAQ FREEDOM," U.S Army War College (July 2004), p. 710.

58) 합참, 앞의 책(2016), pp. 부-22~부-24.

59) Patrick J. Donahoe, "Preparing Leaders for Nation-Building," Military Review(May-June 2004), pp. 24~25.

60) U.S. Center for Army Lessons Learned, "Leader Challenges: Operations

여덟째, 민간정보 획득을 위한 민군작전팀(CMOT), 우호 주민, 작전부대,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IGO 및 NGO 등과 협조하는 절차 및 과정에 소홀함으로써 지원 소요를 판단 및 평가하기가 어려웠다.⁶¹⁾

아홉째, IGO·NGO와의 협조 간 세부적인 과업목록을 판단 및 구체화하는데 소홀했다.

열 번째, 전력공급, 식수 및 식량 지원 시스템 복구, 치안 및 안전확보 등 민사지원 및 지원 소요를 산출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더욱이 민간정보 및 판단 결과를 적시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4. 소결론

〈표-5〉는 6·25전쟁-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크전쟁 시 민군작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영향력을 정리하였다.

〈표-5〉 민군작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영향력 비교

구분	영향 요인	6·25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전쟁
국제 환경	UN 개입	△	○	△
	동맹국의 지지	△	○	△
현지 환경	대체 정치세력	-	-	-
	기존의 정부기구	-	-	-
	군사적 위협	○	△	△
	민심(民心)	-	-	△
	반란·폭동	-	△	○
	인도적 위기 (정당성에 의문)	△	△	△
자국 환경	점령정책	○	△	○
	안정화 작전 능력	△	△	○

6·25전쟁 시 UN군은 군사작전 중심이었고, 한국군과 UN군의 불협화음은 일관된 정책을 어렵게 하였다. 더욱이 미 제1·10군단의 작전 범위에 대한 혼선으로 목표는 통일되지 못했고,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은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개시했으나, 군사적

Enduring Freedom and Operation Iraqi Freedom(May-June 2004),” p. 29.

61) James, Quinlivan, “Burden of Victory: The Painful Arithmetic of Stability Operation,” RAND Review, Vol. 27, NO. 2.(Summer 2003), pp. 28~29.

개입에 집착하며 효과적으로 종결짓지 못했다. 더욱이 곧바로 이라크 전쟁에 투입하면서 군사적으로 승리하고도 전쟁에선 승리하지 못하는 우(愚)를 반복하였다. 이후 군사작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며 마찰요인을 최소화하고, 치안 질서의 회복 및 유지, 갈등관리 등의 분야를 개선하였다. 관련 사례를 종합해 볼 때 한국군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팁(Tip)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불시에 사태가 발생할 것이기에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완성도는 최대한 높여야 한다. 주도(Supported)·지원(Supporting) 관계 설정은 분명해야 하고, 인식 공유와 지휘 통제체계는 일원화되어야 한다.

둘째, 작전부대-민사부대 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작전부대는 ‘유형별 작전’을, 민사부대는 ‘기능별 작전’을 수행하기에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전환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명령체계의 분권화·협조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작전 간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특히 치안 질서 유지 및 통제체계의 확립, 수용 및 보호 대책은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정화사단의 소요 기준은 현실에 부합되도록 재판단해야 하며, 임무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끔 관계기관 간 통합·연계가 필요하다.⁶²⁾ 란체스터 법칙(Lanchester's Laws)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교리와 계획 수준으로는 군사작전-민군작전의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⁶³⁾ 아울러 북한의 행정구역(2021년 기준)은 3개 특별·직할 시와 9개 도로 되어있다.⁶⁴⁾ 즉, 관련 분야의 계획 수립-개선-변화에 관한 대응방안을 조기에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 전문요원의 양성 및 준비교육의 필요성이다. 국군은 정규전 중심으로 배비(配備)하고 있다. 즉, 자유화 지역에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평시 준비되어

62) 국방개혁(국방혁신 4.0)이 추진됨에 따라 개선 및 변화가 필요하다. 2023년 기준으로 상비사단은 13개 보병사단과 3개 기계화·기동사단, 1개 신속대응사단이 존재하지만, 학령·징집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국방부 정책기획관실, <2022 국방백서> (서울: (주)다니기획, 2022년 12월), p. 334.).

63) ‘란체스터 법칙’은 영국의 항공공학자(윌리엄 W, 란체스터)가 제1·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개발한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상대적인 힘을 계산하는 수학적 공식’이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 조밀도(稠密度), 양(量)과 수(數)에 의존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국군의 경우, 안정화사단(현역+예비역)을 적절한 규모로 편성해야 하고, 민군·민사작전에 관한 교리 정립, 질적 수준이 북한의 통치 질서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64) 3개 특별·직할 시는 평양 특별시, 남포·나선직할시이고, 9개 도는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 량강도, 강원도다.

있지 않기에 즉각 대응하기는 제한될 것이다. 교리-작전개념-수행방법이 각기 다르다는 현실도 한몫하고 있다. 군사작전과 민군작전의 전환절차(기준)-방법-수단을 구체화하지 못하면, 정말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없으며, 상당한 한계로 나타날 것이다.

IV. 안정화사단의 민군작전 수행절차 및 행동화 방안

1. 자유화 지역주민의 의식 성향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래 억압적·폐쇄적 체제에 변화가 없다. 루마니아(Nicolae Ceaușescu)·독일 독재자(Adolf Hitler)의 몰락과 러시아 내부의 반란은 개혁·개방을 기피(忌避)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⁶⁵⁾ 2011년부터 시작된 ‘최고 존엄’의 신정(神政) 통치체제는 주민들에게 절대복종과 순응을 요구하지만, K-문화(한류 드라마 등의 영상물)를 접하면서 한국이 발전한 모습을 알고 있다. 따라서 자유화 지역에 안정화사단을 조기에 투입하고, 북한에 한류가 유입되는 현상을 활용하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군이 단독으로 또는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 간 6·25 전쟁 당시 부정적 트라우마를 가진 일부가 작전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대적 행동 및 반감을 표출할 것이다.⁶⁶⁾ 또한, 생활과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가치관에 혼란이 올 것이며, 치안 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변질 수 있다.⁶⁷⁾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어 체제 모순(불만)이 확대될 수 있지만, 무기력증과 전장 공황(Panic)도 같이 발생할 것이다.

물론 K-문화(韓流)를 동경하는 우호계층이 존재할 것이다.⁶⁸⁾ 이들은 ① 최고

65) 김성진, “김정은의 神政 통치와 급변사태, 한국군 대비 수준은?,” 『문화일보』, 2023. 7. 17.; YTN 뉴스, “바그너그룹의 반란 지켜본 北... 쿠데타 일어날까,” 『YTN 뉴스』, 2023. 6. 28.; 김성진, “6·25전쟁 73주년과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KONAS』 안보칼럼, 2023. 6. 22.

66) 합참, 앞의 책(2016), p. 1-4.; 육군본부, 앞의 책(1988), p. 212.; 육군본부, 「육군본부 훈령」 제101호(국군 비행 엄금에 관한 건) (1950. 11. 13.).

67)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서울:나눔출판, 2003), pp. 598~600.

68) 구가인, “김정은, K-POP은 북한 젊은이들 타락시키는 ‘악성 암’,” 『동아일보』, 2021.

존엄 체제와 4대 세습에 대한 반감,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일부 핵심계층, ② 기초생활과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우호적인 동요(動搖) 계층, ③ 당에서 처벌받은 전력(前歷)이 있거나, 혜택에서 배제 및 소외된 적대계층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우호적인 지방행정 요원과 민간 계층을 우군의 전위세력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

2. 자유화 지역의 군사작전-민군작전 간 연계성

전국시대 후기 철학자(荀子)는 “전쟁의 기본은 먼저 민심을 통일하는 데 있다. 민심을 통일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군비(軍備)와 전략을 갖추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했다. 6·25전쟁 간 군정기(軍政期) 때 국군의 역할은 주체가 아닌 객체였다.⁶⁹⁾ 수많은 전쟁 경험이 축적된 미군도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반복하였다. 국군이 간과해선 안 될 명제가 있다. “여건이나 상황이 조성되지 않아 민군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다. 계획을 수립하고도 관계기관(기능) 간 협력·협업이 지체되거나, 적시에 판단 및 결심을 하지 못해 민군작전 투입 시기를 지체하거나, 인도적 지원 시기를 놓칠 경우, 유사한 우(愚)를 범할 수 있음을 진중하게 새겨야 한다.

연합사령관 책임하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거나, 합참의장 책임하에 민군작전을 수행할 때 주체는 국군이며, ‘같은 민족(자유화 지역주민)’이 대상이다. 따라서 자유화 통합본부-합참 간 난민 수용 및 후송의 개념적·행위적 인식을 통일해야 한다. 작전부대가 군사작전과 민군작전(안정화 작전)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 있어서다. 북한군의 조직적 저항을 통제하지 못해 군사작전이 종결되지 않으면, 민군작전과 난민 수용은 지체될 것이다. 결국, 재건 및 인도적 지원, 주민 구호 등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미치게 됨을 고려해야 한다.

6. 14.

69) 일부에서는 세계 30개국에 총 6만여 명의 국군이 파견되어 국제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경험이 많기에 안정화 작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제 평화유지 활동은 비군사적 분야이고, 자유화 지역의 안정화 작전(또는 민군작전)은 반정부 및 준(準) 전쟁 수준의 평화 강제작전을 병행해야 한다(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책(2022년 12월), pp. 309~316.).

3. 민군작전 수행 시 고려할 사항

1) 정치적(Political) 측면

① 적대세력의 악의적·선동적 보도와 방해 활동으로 적대적 언론·신문·출판사의 폐간 또는 시설 접수가 지체될 수 있다.

② 지역 공무원들의 동참 거부 및 현지 이탈로 행정체계가 마비되고, 경찰서·행정기관, 공공(문화재)시설 접수가 지체될 수 있다.

③ 인터넷과 지하방송을 포함한 불법적·비합법적인 국내·외 민간언론·방송단체들이 난립할 수 있다. 일부 작전부대의 군기 문란과 이탈 행위, 주민재산이 강탈당하고 있다는 악의적 선동이 난무할 수 있다. 또한, 알 권리를 주장하며 국군의 작전계획과 진행 경과를 공개하라고 압박하면서도 합법적 통제는 거부할 수 있다.

④ 반전세력과 NGO가 포로 학대·반인권 행위를 항의 및 규탄으로 변질 수 있다. IGO 및 국내·외 환경단체도 불법 촬영 행위 및 인권규탄 집회 등을 개최 및 작전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부 단체가 김일성과 김정일 기념물, 김정은의 개인 우상화와 관련한 문화예술품의 무조건 존치(存置-maintenance)를 요구할 수 있다.

2) 군사(Military)·시간(Time)·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측면

① 북한군·경찰·행정기관의 재조직이 지체되고, 현지 우호세력의 규합 및 동참 노력이 지체될 수 있다. 또한, 현지 경찰과 민간지도부에 관한 행적 관리 확인이 소홀하고, 순찰·수색 정찰 간 투항한 북한군과 현지조직·우호세력의 성분분류가 지체되면서 활용도도 저조해질 수 있다.

② 게릴라·오열(五列)·적대세력의 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⁷⁰⁾ 적대세력을 지원하거나, 우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주요 직위자(우호계층)에 대한 저격 및 테러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 군복·경찰복류의 유출(착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할 수 있다. 적대계층의 무장폭동과 국군을 타도하자는 선동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⁷¹⁾ 총기·탄약, 폭발물류 회수 시 보상금 미지

70) 적대세력(=지역 군벌)의 활동 유형은 크게 ① 김정은 정권의 복구를 위한 저항, ②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저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물리적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세력을 조기에 장악하거나,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게 될 경우, 소말리아 내전(1991~)과 같은 복잡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71) 아이티 소요사태(2022~)처럼 도로 파괴 및 식량 보급 지연 등이 발생하면, 대규모 기

급으로 부정적 기류가 확산할 수 있다.

③ 이적 행위자의 처벌은 미약하고, 주민과의 격리조치가 소홀해질 수 있다. 특히 제보자가 피습 및 협박당하는 사례가 반복되지만, 보호 및 대응책 마련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

④ 통행 금지시간과 식별표식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통제지역을 이탈하는 현상이 증가할 수 있다. 경계부대도 근무 이탈자가 발생하는 등 군기가 해이한 현상이 늘어날 수 있다.

⑤ 국군의 후방지역으로 대량 난민(북한 주민)이 이동하는 데 따른 통제 및 보호 대책 수립에 소홀해질 수 있다. 편의대(便衣隊)⁷²⁾는 운영하지 않고, 야간 불빛·소음에 대한 통제는 느슨하게 된다. 난민 대열에 침투한 게릴라·오열의 색출이 지체되면서 공포와 불안감이 확산할 수 있다.

⑥ 대량 피난민(최소 20만 명 이상)이 유입되면서 정부와 국군이 계획한 수용시설 및 통제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⁷³⁾ 그러나 추가적인 시설 공사가 지체되고, 설비물자 및 긴급구호품은 부족하며, 인도적 지원물자·구호품 조달(획득)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병참선도 복구·협조가 지체될 수 있다. 전방지역의 군사작전이 종결되지 않으면서 수용소를 경계(관리)하는 부대가 부족하여 경계 및 지원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⑦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주민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포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가 난감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보건 위생 및 생활 환경의 개선 사업, 민심 안정을 위한 계도 교육 등이 지체될 수 있다.

3) 경제적(Economical)·사회적(Social) 측면

① 구호 및 배급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데다 구호 및 배급기관 직원들의 고압적·권위적인 태도가 주민들의 원성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구호예산 및 구호

아(飢餓), 시장경제 파괴, 물 공급 제한, 전염병 창궐 등이 동반될 수 있다(이재림, “아이티 갭단 폭력사태 계속 악화…대사관, 교민에 철수 권고,” 『연합뉴스』, 2022. 9. 29.).

72) ‘편의대’는 ‘주변 환경에 맞도록 농민 또는 약초 채취꾼, 주민 등으로 위장하여 책임 지역 내에 침투하였거나, 침투하는 적을 탐지·색출하기 위해 운영하는 특별 부대’다.

73) <총무계획 3300>과 <총무계획 9000>, <작계 5015>는 휴전선에 인접한 6개 임시 수용소(수용소당 2만 명 기준)와 제1·2합대 사령부 영내에 수용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평도 포격전(2010) 시 피난민(연평도 주민) 통제 및 수용 문제로 행정부-지자체 간 갈등이 분출된 상황이 재연될 개연성이 많다.

품을 전용(轉用)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사례, 주민 제보자의 보상금을 착복(着服)하는 사례, 특정인에 대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준다는 소문으로 변질 수 있다.

② IGO 및 NGO 일부는 작전부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호 활동을 벌이며, 일부 매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할 수 있다.

③ 민간범죄자(부랑아) 방치, 살인·방화·약탈·폭력·강간·사체 및 환자의 방치(유기)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다. 여기에 국군 일부의 민가 절도·강(약)탈, 부녀자 겁탈, 매춘행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고아·과부·실업자 증가, 인신매매, 절도 및 도박행위의 확산도 예상된다. 비합법적 집회 개최 및 여론재판을 통한 즉결처분과 집단학살에 대한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지만, 출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④ 생필품 유통이 정상화되지 못해 암거래 위주의 장마당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매점매석(買占賣惜)과 일부 치안요원에 의한 부정 축재(蓄財), 편의점 등에 대한 약탈, 구호·배급기관 요원 일부에 의한 착복 및 뒷거래 행위가 적발될 수 있다.

⑤ 금융시장은 마비되고, 위조화폐가 유통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및 사기, 임야·농지의 사적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온적인 조치가 계속되며, 불법행위도 증가할 수 있다.

⑥ 문화재 시설을 훼손 및 파괴하는 행위가 예상된다. 경계 및 관리부대가 지정되지 않으면서 무단침입·방화·약탈·파손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 및 대책에 소홀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4) 기반시설(Infrastructure)·정보(Information) 측면

①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건 및 복구가 지체될 수 있다.

* 시설 파괴: 발전·변전소, 정수장, 유류저장소, 통신 시설, 관공서

* 기능 마비: 전기·가스·급수·통신·방송·교통망, 폐차량·장비

* 시내·변두리 지역의 오물 방치·투기 등에 대한 형식적인 소독·방역으로 수질 오염, 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수두) 등이 증가

② 주민-작전·민사부대 간 농아(聾啞)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우, 일상 용어의 차이점을 이해 및 공감하는 노력이 예상외로 저조할 수 있다.

③ 불법 종교단체의 음성적 포교(집회)가 이뤄지며 내부 충돌과 주도권 분쟁이 잦고, 주민 봉기 및 저항을 선동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4. 민군작전 수행 간 행동화 방안

행동화 방안은 기존의 연구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에 동·서양 전쟁(분쟁) 사료(史料)와 공개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도출하였다. <표-6>은 민군작전은 8대 과업을 핵심적으로 제시하였다.

<표-6> 민군작전 수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8대 핵심과업

작전변수	명 칭	핵심과업
P·M·T	과업#1	공고(경고)문 선포, 주민 통제
P·M·S	과업#1	중요시설·공공기관의 장악 및 접수
M	과업#3	불법 무기 및 탄약·폭발물 회수
M·I	과업#4	적대세력의 색출·격리, 치안 질서 확립
E·S	과업#5	긴급 인도적 지원 활동 전개
E·I·I·P	과업#6	도시기능의 회복 및 기반시설 복구
P·M·I	과업#7	선무활동과 계도·계몽 교육 진행
P·E·S	과업#8	기타 관심사항

과업#1) 공고(경고)문 선포, 주민 통제

① 사단급 이상 지휘관은 책임 지역을 점령함과 동시에 공고문을 게시한다. 작전부대의 권한, 무기·탄약·폭발물류에 대한 자진 신고 및 회수방법과 보상 수준, 주민의 유동(流動)·통행 금지시간, 이동·통제지역 지정, 법과 질서 유지, 공공보건 및 위생대책을 이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기동 홍보반(유인물)은 도(직할시)-시(구역)·군-읍·리(노동자구·동) 단위로 활동한다.

② 작전부대와 군사경찰·특전(특공)요원은 책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통제를 담당한다. 적대세력과 우호계층을 분리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무장 해제’다. 전방지역은 주민 소개령을 선포하고 소개된 주민과 피난민은 임시로 수용 및 격리해야 한다. 후방지역은 방송·전단(傳單-포스터) 등으로 선무활동을 하면서 게릴라·적대세력을 색출해야 한다. 이때 우호적인 치안·행정 요원 및 동조 주민 등을 민간 정보조직으로 활용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관료조직은 즉각 해제 및 성분을 분류하고, 치안·행정조직을 재건해야 조기에 치안 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다.⁷⁴⁾ 이때 준군사조직과 노동당, 국가안전보위성·사회안전

성 등은 즉각 해체하고, 투항자·우호 주민(공무원)을 활용해야 한다.75) 작전부 대장(연·대대장)은 차단지대를 점령함과 동시에 민간인 통제소를 설치 및 운용하며 통행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때 작전부대와 우호 주민을 같이 편성해야 한다. 통제지역을 무단·임의로 이탈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일벌백계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전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언론단체·종군기자단의 취재 허용은 군단급 이상 지휘관이 판단 및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과업#2) 중요시설·공공기관의 장악 및 접수

① 각종 시설은 접수 대상과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이때 동원·군수 분야는 현지 징발계획과 연계해야 하며, 시설을 접수할 때는 2단계 상급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사 중요시설의 확보 여부는 용도·작전 수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표-7>은 각종 시설의 확보 및 소요 현황을 예시하였다.

<표-7> 각종 시설 확보 및 통제 소요 현황(예)

• WMD 관련 시설

구 분	독성물질연구시설	화학탄	
		저장시설	생산시설
규 모	소대급	분대~중대급	

• 무기·탄약 저장시설

구 분	소화기 저장시설	소화기 탄약고	박격포·포병탄약고
규 모	소대급		소대~중대급

• 방송·언론시설

구 분	지역 중앙방송국	지역 TV 방송	지역 라디오방송
규 모	중대급		분대~소대급

74) 공산당 정치범의 등급은 1급(공산주의 신봉자 및 공산조직 활동 의욕이 있는 사람), 2급(공산조직에서 활동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 3급(공산조직에서 활동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 4급(공산조직에서 활동할 위험성이 희박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75) 주민 성분은 A급(핵심계층 중 악랄한 인물)은 포로수용소로 후송하고, B급(핵심계층 중 개전(改悛)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동향감시 및 요시찰 인물로 지정하며, C급(동조계층 중 용공성이 있는 인물)은 동향감시 및 요시찰 인물로 계도(啓導)해야 하며, D급(동조계층 중 자유주의 경향이 있는 인물)은 동향감시 및 계도 또는 요시찰 인물로 지정, E급(적대계층 중 협조에 소극적인 인물)은 신분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활용, F급(공산조직 등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희박한 인물)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행정·공공·생산시설을 신속하게 확보 및 통제한다. 부비트랩이나, 급조폭발물(IED)⁷⁶⁾의 설치,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표-8>은 위협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는 시설과 부대의 운영 규모를 예시하였다.

<표-8>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위협요인 제거부대 운영 규모(예)

접수시설	규 모	
	작전부대	전투지원부대
행정·언론기관	수색·특공소대	공병 1개분대+EOD 1개반
도시기반시설	소총소대	
공공·생산시설	소총소대~중대	공병 1개분(소)대+EOD 1개반

④ 합동 주민 성분분류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작전부대장이 민사부대와 정보·방첩 요원, 우호조직(필요할 때)을 편성한다. 분류심사는 현지에서 확보한 성분 참고문건 등을 활용하되, 특전(특공)요원들이 작성한 자료도 심의 간 활용할 수 있다.

⑤ 개인 우상화와 관련한 시설 및 기념물은 선별적으로 제거 및 폐쇄한다. <표-9>는 대상물의 처리방법과 승인권자를 예시하였다.

<표-9> 대상물별 처리방법 및 승인권자(예)

대상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기념물(비), 대미·대남 비방 및 선전시설	역사유물, 사적지, 유·무형 지방문화재
처리방법	선보고 후조치	
승인권자	군(사)단장	군사령관

과업#3) 불법 무기 및 탄약·폭발물 회수

① 저인망식 정밀수색을 통해 무기·탄약·폭발물을 회수한다. 대대 단위로

76) 'IED'는 'Improvised Explosive Device'의 약자로 '급조폭발물'로 통일된 용어다(김성진, "급조폭발물(IED)과 한국군 대응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 고찰: 전·평시 軍의 예방·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97호 (서울:한국군사학회, 2019), pp. 128~131.).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되, 전장(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소총 1개 소대와 군사경찰 1개 분대, 임시치안대, 폭발물처리반(EOD)을 합동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도(직할시)-시(구역)·군-읍·리(노동자구·동)의 작전부대·임시치안대는 단속 차량을 운용한다. 책임 지역은 바둑판식으로 할당하여 가가호호(家家戶戶) 단위로 수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주민 계몽 활동은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한다. 대대급 이상 부대는 행정 구역 단위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할 대상자는 명확해야 하며, 포상금과 식량, 생필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되는 현상을 예방해야 한다.

③ 우호 주민·우호세력을 활용하여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적대세력을 색출한다. 무기 밀반입과 거래는 금지하고, 관련 동향의 감시를 강화한다. 이때 주민 제보와 주민 성분조사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과업#4) 적대세력의 색출격리, 치안 질서 확립77)

① 작전지역 내의 적대세력을 신속하게 색출·격리한다. 연·대대장 책임하에 중대 단위로 책임 지역을 할당하고, 기동타격대는 대대별 1개 소대 규모로 운용한다. 작전부대와 군사경찰·방첩 요원, 특전(특공)요원, 현지 우호 주민을 같이 편성함이 바람직하다. 성분분류가 끝난 주민들은 계층별로 격리 및 후송할 필요가 있다. 적대계층은 의법(依法)처리하고, 동요 계층은 피난민 집결지로 수용-분리-동화교육을, 우호계층은 임시치안대 또는 첩보 전위조직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표-10>은 성분분류 및 처리기준을 예시하였다.

<표-10> 관련 계층의 성분분류 및 처리기준(예)

구분	북한군 투항자	당·정 잔류간부	극렬저항· 선동 주도세력	단순가담 및 동조세력
방법	임시포로수용소 로 격리·후송	격리 수용, 개별심사 처리	즉시 격리·후송	격리 수용 후 선무활동(계도)

77) 서용선 외, 『한국전쟁 연구(점령정책, 노무 운용, 동원)』 (서울:국방 군사연구소, 1995), pp. 13-65.; 한관수, “북한의 급변사태와 군사대비,” 『전략연구』 제16권 제3호 (2002년 11월), p. 83.; 장보선, 앞의 논문(2017), pp. 125~149.; 차돌, “북한 급변사태 시 안정화 작전에 관한 연구: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68호 (서울: 한국군사학회, 2011년 겨울), pp. 180~188, 190~191.

② 행정구역 단위로 민사부대가 주도하는 현지 우호세력을 활용하여 치안·공안 기관을 재조직한다. 읍·리(노동자구·동) 단위는 임시치안대를, 시(구역)·군 단위는 경찰서 급으로, 도(직할·특별시) 단위는 지방경찰청 급 임시치안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우호 세력에겐 보수 및 피복을 지급하는 등의 동기 유발대책이 필요하다. 도(직할시)·시(구역)·군 지역은 임시행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사단장(연대장) 책임하에 상시 개설하되, 임시주민증을 같이 발급한다. 투항한 북한군과 공무원은 소집하되, 제한될 경우 현지 우호계층과 함께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③ 범죄 및 범법 활동은 강력하게 단속하여 민심의 이반을 사전에 제거(억제)한다. 사단장(연대장)은 폭동 선동자·유언비어 날조자·약탈자는 치안 저해 사범으로 조치한다. 도박 및 부동산 투기, 음성적 성매매, 위조화폐, 무기 암거래 등은 강력하게 단속한다. 특히 사적 보복 및 테러에 대비하고, 주민 제보자와 우호세력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④ 주요시설에 대한 방호 및 경계대책을 강화한다. <표-11>은 주요 방호대상물에 대한 편성 및 운영 현황을 예시하였다.

<표-11> 주요 방호대상물에 대한 편성 및 운영 현황(예)

구 분	무선중계소	교량 및 철교	터 널
운영 규모	분~소대급		
비 고	작전부대	임시치안대	

기동순찰반과 안전점검반은 작전부대와 임시치안대, 민방위대를 합동으로 편성해야 하며, 경계작전은 군사적 차원의 3지대 방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⑤ 각종 집회 시 허가제를 도입하여 불법 지하집회나 음성적 활동을 억제 및 강력히 통제한다. 집회 장소엔 치안요원을 배치하고, 집회 결과를 확인한다. 우호 주민을 활용하여 종교단체 내부에서 암약하는 적대세력 및 게릴라 동향을 탐지한다. 종교·종파 간 주도권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⑥ 적대세력·게릴라들의 피난민 이동 방해 및 혼란에 대비한다. 경계부대와 별도로 편의 복장을 갖춘 분~소대 단위의 작전·정보·민사 요원들이 첩보 수집 및 피난민 이동을 유도한다. <표-12>는 지정된 표식을 활용하거나, 아군에 의한 오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표-12> 부대별 식별표식을 활용한 피해 최소화 대책(예)

- 책임부대: '목' 위주로 검문소 또는 교통통제소를 설치 및 운용
- 철수로 부대: 피난민 규모의 증감을 확인, 교통통제소는 추가 운용
- 피난민수집소: 응급치료, 신원 확인, 구호물자 분배, 수용인원 등

과업#5) 긴급 인도적 지원 활동 전개

① 구호와 관련한 소요 기준은 전재민과 피난민, 환자로 구분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화해야 한다.

② 사단장은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자·보급품을 우선 지원한다. 구호물자는 현지획득-예비 군수물자-정부 및 외부 단체가 지원한 구호 물품 순으로 조치한다. 수송 순서는 민사부대의 민수 차량-군 차량-지원 헬기 등의 순이어야 한다. 사단 민군작전본부(CMOC)는 민사 중·소대와 행정 요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 생활물자와 병참선을 확보해야 하며, 도로·터널·교량 등의 수송로는 우선 복구해야 한다. 현지의 물자 획득(확보)은 특전(특공)요원과 투항·동조 공무원, 우호 주민들의 제보가 필요하다. 군수·관수(官需)·민수물자는 확보(획득)하되, 현지에서 징발한 물자도 같이 사용해야 한다.

③ 최소 20만 명 이상의 피난민(또는 탈북 난민)이 예상되므로 10개 수용시설을 조기에 확보해야 하며, 1개소당 최대 20,00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⁷⁸⁾ <표-13>은 접수시설의 재활용 용도를 확정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78) 다수의 전문가는 탈북 난민의 규모를 최소 20만 명에서 최대 400만 명까지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① 막연한 불안감(심리적 공포) 때문에 위협은 피하고 보자는 단순한 심리에서 이동하거나, ② 자유와 경제적 이득(생계)을 위해 무작정 남쪽으로 이동하는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전병득 외, “탈북사태 오나…北 체제 흔들리면 난민 최대 400만 명,” 『매일경제』 (2011. 12. 20.)).

〈표-13〉 접수시설에 대한 재활용 용도 확정(예)

구분	현지 시설	전환이 가능한 용도
세부 항목	도청, 시청, 지방행정관청	민사부대 지휘소, 정부지원시설
	교통·통신·급수·전기·연료	교통·통신·급수·전기·연료시설
	학교, 병원, 대형호텔, 체육	생활안전 지원시설
	식품공장, 대형극장, 백화점(대형마트), 아파트	진료소, 피난민 구호소(집결지), 임시 포로수용소, 의료기관
	정미소, 양곡저장소	양곡 저장 및 분배소

학교·체육시설·대형극장(마트) 등은 사단급 피난민수용소로, 공설운동장·대형호텔·아파트 등은 군단급 피난민 집결지로, 야전군 후방지역의 반영구시설은 지자체장이 책임지는 피난민수용소로 활용할 수 있다. 잉여(剩餘) 군사시설 또는 대형극장, 체육 경기장 등을 확보한다.

④ 인도적 지원물자의 통제·관리부대를 지정한다. 민사대대는 구호과(5~6명)에서, 민사중대는 작전반(4~5명)에서 지원물자 소요를 판단하여 추가 보급을 요청·획득·분배하게 한다. 주민 구호용 물포(物布)는 사단장 책임하에 1일 세대별 4명을 기준으로 설정한다.⁷⁹⁾

⑤ 장기 작전에 대비한 추가 지원 소요를 요청한다. 연대장 책임하에 민사중대급 이상 부대는 식량·물자를 비축할 분배소를 운영해야 한다. 군수품 활용 또는 기초 생활물자는 군사령관이 승인하여 즉각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관수물자는 조기에 보급되도록 정부에 일찌감치 건의해야 하며, 현지획득이 가능한 민수물자는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⑥ 공공보건 및 전염병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표-14〉는 지역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양성기관의 접수 및 재활용 규모를 예시하였다.

79) ‘물포(物布)’는 심리전 용어로 ‘물품 살포 작전’의 줄임말이다. ‘대형기구(풍선)에 라면, 과자 등을 포함한 생필품을 매달아 북쪽으로 띄워 보내는 활동’을 뜻하고 있다.

〈표-14〉 지역 의료기관·의료인력 양성기관 접수 및 재활용 규모(예)

구 분	국가급 병원	의과대학	지역 인민병원
규 모	의무대대, 야전병원		의무(중)대

작전 초기엔 군군 의료시설(의무부대)에서 현지병원을 활용한 응급 진료체계를 유지하되, 민간 의료시설은 별도로 운용한다. 시(구역)·군 단위의 기동의료반과 간이진료소는 전재민과 피난민 수용지역에 있는 응급환자의 치료·후송에 집중한다. 이때 1개 반(6~7명)은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보건·검사 요원 2~3명, 운전 1명으로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초기 진료와 혜택에 관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되, 주민의 채혈을 비롯한 필수 혈액의 수급대책과 민간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수용·취약시설은 정기 방역 소독(주 1회 이상)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유기된 사체, 환경오염과 폐기물 처리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및 계몽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과업#6) 도시기능의 회복 및 기반시설 복구

① 군사작전과 주민 또는 피난민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때 통신·전력·전기시설→급수시설→도로·철도→병원→피난민 수용시설→생산시설 등 복구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조기 지원은 현지 여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기에 국군의 가용 물자·장비로 우선 복구해야 한다.

② 기반시설 복구사업은 공병이 교량 보수와 도로 확·포장, 학교·공공시설 등에 대한 보수를 진행한다. 청·장년 계층에겐 기초 기술을 전수하고 군표(軍票-military currency) 지급을 병행한다. 파괴 및 소실(燒失) 가옥은 軍(공병)·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보수·개선한다. 상·하수도 시설 보수, 마을 주변 정리, 오·폐기물과 사체 처리 등은 읍·리(노동자구·동) 단위에서 조직한 애향청년회 등을 활용해야 한다.

과업#7) 선무활동과 계몽 및 계몽 교육 진행

① 보도기관·방송시설은 조기에 접수한다. 특히 신문(언론)·출판·방송 관련 시설은 핵심과업이다. 지역신문사는 중대급, 지역출판사·지역 방송국(사)은 분~소대급 규모로 운영해야 한다.

② 〈표-15〉는 합동 선무활동을 위한 군단·사단급 선무 대책위원회 편성으

로 설치 및 운용 규모를 예시하였다.

〈표-15〉 군단·사단급 선무 대책위원회 편성(예)

구 분		군단급	사단급
위원장		정훈공보참모	
위원	군	심리전 중대장, 정훈공보장교, 선무과장, 방첩요원	심리전 대표자, 정훈공보장교, 민사중대장, 방첩요원
	민간	정부지원요원(홍보처·교육부): 2명, 우호적 언론·지식인: 2명	

사단급 이상은 언론 보도통제·사전 검열을 강화하고, 주민지지 획득에 필요한 선무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확성기·방송중계소는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뉴스 속보 및 전통가요 등을 송출한다. 조판·인쇄시설은 통제하고, 현지 신문은 폐간하되, 한국의 일간지와 공보물을 배포한다. 특히 주민 통제·피난민 안내 관련 포스터, 전황 뉴스 및 투항 권고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한다. 기동 선무·확성기 홍보반은 지역 단위 활동에 집중한다. 기동 선무반은 주민 홍보 및 문화·종교 활동을, 확성기 홍보반은 도(직할시)·시(구역)·군의 전황을, 중군기자단은 전황과 주민 생활 취재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③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계도 및 계몽 교육을 통해 우군화를 유도하며 도(직할시)·시(구역)·군 단위에 지역발전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자문위원은 지역 유력인사, 종교지도자, 행정기관장, 주민대표자로 구성하며 대민봉사 및 홍보, 구호사업과 관련한 의견 수렴, 중·장기 지역발전 사업, 기타 건의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정기·수시회의를 개최하면서 명예 출입증 등을 발급하여 상호 공감대와 유대감, 신뢰를 형성한다.

④ 기동 선무반과 예술단은 순회공연 및 계몽운동을 전개한다. 이때 도(직할시)·시(구역)·군 단위의 통합된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기계 대여 및 영농기계·가전제품 등을 수리하고, 정비·용접·가공기술을 전수한다. 대학교와 고등중학교, 인민학교는 폐쇄하되, 종파별 종교 활동과 집회 장소는 정상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과업#8) 기타 관심사항

① 과도한 항의·규탄 행위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되, 포로 학대 및 반(反)인권 행위 등에 대한 통제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때 작전부대가 주도하는 법

규·교전규칙 교육, 작전보안지침 준수, 통제·제한구역 출입 교육, 종군기자단 활용, 공세적 공보 교육, 일일 단위 전황(戰況) 브리핑 등은 정례화·활성화가 필요하다.

② 합동 조사위원회의 사실 규명 조치와 현지촬영·보도통제 등의 검열 활동을 강화한다. 이때 국내·외 환경단체 및 언론 매체의 발표에 관한 사실 규명 절차 및 대응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② 접수 대상으로 지정된 문화재의 훼손 및 파괴행위를 차단 및 예방한다. 군·관(민사행정, 자유화 통합본부 현지 채용인원+정부 민사지원 요원)은 합동으로 현장에 입회하는 등의 공식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문화재 주변은 출입 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특히 경고 표지판 설치와 경계·순찰 활동은 정례화하고, 화력 제한지역(RFA)과 금지구역(NFA)은 설정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화폐·어음제도는 잠정 폐지하고, “군표(軍票)”로 통합한다. 위조화폐의 음성적 유통은 차단하고, 범법 및 치안 질서 문란행위, 불법행위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6·25전쟁-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크 전쟁, 최근 러시아의 내부 반란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승리가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는 공식이 아님은 이미 입증되었다. 김정은의 신정(神政) 통치체제가 갑작스레 붕괴할 개연성은 상당하다. 따라서 급변사태가 발생 시 자유화 지역으로 민군작전을 투입하는 시기 및 작전 수준은 동북아 정세 변화에 엄청난 파랑(波浪)을 몰고 올 것이다.

미군은 군사교리와 계획을 통합하였지만, 국군의 안정화 작전-민군작전-민사작전 교리(계획)는 개선 및 발전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안정화사단이 민군작전을 수행 간 軍·관·민의 통합 및 일체화가 필요하기에 군사작전-민군작전의 전환절차 및 수행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자유화 지역에서 군사작전-민군작전-민사작전이 전환될 때 주도(supported)-지원(supporting) 관계를 분명히 했고, 작전변수(PMESII-PT)를 활용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핵심과업은 여덟 가지다. 첫째, 군사작전에서 민군작전으로 전환과 동시에 즉각 준비된 공고문을 선포하고, 주민 통제대책을 마련한다. 둘째, 중요시설·공공기관을 장악·접수한다. 셋째, 불법 무기와 개인이 가진 탄약·폭발물 등은 보상금(Buy-back) 제도를 채택하여 저항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한다. 넷째, 적대세력의 색출 및 격리, 치안 질서를 확립할 때 우호계층을 전위세력으로 포함한다. 다섯째, 인도적 지원 활동 간 일탈 행위는 민심이 돌아서게 됨을 유념한다. 여섯째, 도시기능 회복과 기반시설의 조기 복구를 통한 지역·민심을 안정시킨다. 일곱째, 적극적인 선무활동과 계도·계몽 교육을 진행한다. 여덟째, 합법적 통제가 필요하며, 초기부터 과도한 항의 및 규탄 행위, 문화재 훼손·파괴 행위, 미풍양속 저해 행위 등은 일별백계 차원에서 엄단(嚴斷)해야 한다.

급변사태 시 민군작전 투입 시기와 숙련도는 통일 여건 조성 및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국제적 명분을 축적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징집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한계가 존재하지만, 민군작전의 수행절차·방법 연구는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한다.

[논문투고일 : 2023.08.07]

[논문심사일 : 2023.08.21]

[논문수정일 : 2023.08.31]

[게재확정일 : 2023.09.11]

〈참고문헌〉

1. 국내·외 저서

- 강만길, 『고쳐 쓴 한국 현대사』, 창비, 2015.
김성진, 『군사혁신론』, 백산서당, 2023.
박명립,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눔출판, 2003.
조영갑, 『테러와의 전쟁』, 북코리아, 2004.
중앙일보사, 『한국전쟁 실록 민족의 증언』 제3권, 을유문화사, 1973.

2. 국내·외 논문 및 연구서

- 김성진,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한국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효율성 증대방안: 통합방위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군사』 Vol. 12,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2.
———, “급조폭발물(IED)과 한국군 대응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 고찰: 전·평시 軍의 예방·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97호, 한국군사학회, 2019.
김열수,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방향,” 『국방위원회 정책연구용역결과 보고서』, 2009.
김일영, “북한 붕괴시 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 『국방연구』 제46권 제2호, 2008.
남만권, “북한 급변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내적 대응방안,” 『국방부 군비통제 세미나 자료집』, 국방부, 1997.
서용선 외, “한국전쟁연구(점령정책, 노무운동, 동원),” 국방 군사연구소, 1995.
송대성,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전망,” 『비상기획보』 제81호, 2007.
양영조, “피난민 정책,”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1945-1950』, 한국학술정보, 2007.
오상택, “6·25전쟁 작전시기별 민군작전 사례 연구:민간인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34집, 2012.

- 오세민·배광용, 『효과적인 안정화 작전 수행을 위한 전력 발전 방향』, 육군 교육사령부, 2008.
- 이성훈,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위협 양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 『INSS 연구보고서 2022-1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 장보선, “미래 한반도에서의 안정화 작전 수행방안,” 『한국군사논총』 제6집 제1권, 2017.
- , “안정화사단 편성방안 연구,” 『군사논단』 제98호, 한국군사학회, 2019.
- 정철호, 『북한 유사시 중국 군사개입 대응 한국의 안보전략』 세종정책연구 2014-5, 세종연구소, 2014.
- 정태식, “아프가니스탄 국가건설의 불안정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제3권 2호)』, 2010.
- 조기형, 『동시·후속 안정화 작전 수행방안』(서울: 한국전략개발연구소, 2011
- 차돌, “북한 급변사태시 안정화 작전에 관한 연구: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68호, 2011.
- 한관수, “북한의 급변사태와 군사대비,” 『전략연구』 제16권 제3호, 2002.
- 홍성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교훈 분석,” 『군사사 연구총서 제3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 Bennett, Bruce W.,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 RAND Corporation, 2013.
- Dicker, Paul F., “Effectiveness of Stability Operation During the Initial Implementation of The Transition Phase for OPERATION IRAQ FREEDOM,” U. S. Army War College, July 2004.
- Donahoe, Patrick J., “Preparing Leaders for Nation-Building” Military Review, May-June 2004.
- Koontz, Christopher N., 『Enduring Voices. Oral History of U.S Army Experience in Afghanistan 2003-2005』, Center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2008.
- Meade, Grant M.,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York:King’s Crown Press, 1951.

Quinlivan James, “Burden of Victory: The Painful Arithmetic of Stability Operation,” RAND Review, Vol. 27, NO.2, Summer 2003.

U.S. Center for Army Lessons Learned, “Leader Challenges: Operations Enduring Freedom and Operation Iraqi Freedom,” May-June 2004.

3. 국내·외 간행물 및 기타 자료

김남권·김철희, 『안정화사단 운용』, 육군교육사령부, 2011.

김성진, “한·미동맹 70주년과 6·25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글로벌국방』, 글로벌국방연구포럼, 2023. 6월.

———,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관성: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의 지혜,” 『월간 KIMA』,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3. 4월.

———, “한반도의 역학관계와 지정학(地政學), <국방혁신 4.0>의 현주소,” 『KONAS』 안보전략논단, 2023. 1. 2.

HQs, 『FM 3-07 Stability Operations and Support Operations』, Washington: U.S.Army, 2003.

The Joint Chiefs of Staff, JP 3-57 『Civil-Military Operations』, Washington D.C.: DoD, 11 Sep. 2013.

The Joint Chiefs of Staff, JP 3-0 『Joint Operations』, 2011.

The Joint Chiefs of Staff, JP 3-07 『Stability Operations』, 2008.

The Department of the Army, FM 3-07 『Stability Operations』, 2008.

SIPRI Yearbook 2022: Arms Control Association, “Nuclear Weapons: Who has What at a Glance,” Fact Sheet & Brief, 2021.

국방 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中)』, 국방 군사연구소, 1996.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2022 국방백서>, (주)다니기획, 2022년 12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4권, 군사편찬연구소, 2008.

- _____,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안정화 작전』, 국군인쇄창, 2015.
- _____, 『이라크 전쟁과 안정화 작전』, 국군인쇄창, 2014.
-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1950. 5. 1.~1951. 6. 30.)』, 문명사, 1951.
-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회장 15-3-1 『안정화 작전』, 2015.
- 육군 군사문제연구소, 『기록으로 본 6·25 전쟁 시 민군작전』, 육군본부, 2012.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 (군수편), 1955.
- _____, 『한국전쟁사료』제65권, 1988.
- _____, 「육군본부 훈령」 제101호(국군 비행 엄금에 관한 건), 1950. 11. 13.
- 통일부, <자유화 지역 안에서의 정부 업무 운영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2010. 7. 28.
- _____, 『민군작전 시행지침서』, 합동참모본부, 2012.
- _____, 합동교범 3-12 『합동 안정화작전』, 합동참모본부, 2010.
- _____, 합동교범 3-12 『합동 안정화작전』, 합동참모본부, 2016.

Abstract

Implementation of CMO in liberalized areas in case of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CMO of the Stabilization Division-

Kim Sung Jin

With the collapse of the Post Soviet Un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inflated with expectations for peace. However,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cluding limited regional conflicts, new infectious diseases, terrorism, and drugs, continue to exist. Although the U.S. has won military victories in the Afghanistan War & the Iraq War, it has not won the war.

The recent Russian internal rebellion in the Russian-Ukrainian War (2022) has been stopped, but the possibility of a sudden change (instability) situation remains. Therefore, although they are strengthening their theocracy and striving to become nuclear powers through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it is difficult to avoid the possibility of dissent in public sentiment and sudden changes. In the end, the timing and level of implementation of civil-military operations by the South Korean military in case of emergency will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end, the timing and level of implementation of civil-military operations by the South Korean military in case of emergency will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his study adopts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civil-military operations in terms of content, and the Korean War and recent cases in terms of time as a historical comparative study method. Independent variable is 'sudden change', parameter is

Politics, Military, Economy, Society, Infrastructure, Information, Physical environment, Available Time',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set to 'CMO'. It is hoped that the relevant doctrines will be improved and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practice will be developed.

Key words : SO, CMO, CAO, PMESII-PT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현안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박 동 순 *

- I. 시작하며
- II. 한미동맹의 역사와 변화
- III.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현주소
- IV.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
- V. 맺으며

* 한성대학교 교수(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정치학박사,
e-mail: pds3692@hanmail.net

논문 요약

2023년은 동맹을 체결한 지 70주년이 되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동맹이다. 한국은 미군정 하에서 1948년 정부를 수립했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6·25전쟁을 겪었다. 유엔군 참전으로 미국과 군사적 관계를 맺은 한국은 불안정한 정전협정의 조건으로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냉전시대의 한미동맹은 군사동맹과 경제지원 위주였으나, 탈냉전을 맞으면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과 체제 변화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먼저 한미동맹 변천과 70년을 맞는 현주소에 대해 공간사를 통해 진단해 보았다. 병행하여 한미동맹의 인식에 대해 전문 기관의 여론조사와 동맹의 당사자와 제3자 및 상대편들의 정성적 평가를 분석하였다.

한미동맹은 국제질서의 재편과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핵 위협 증가 등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요구됨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전망해 보았다. 첫째, 북핵 위협의 대응으로 '워싱턴선언'과 동맹의 역할이다. 둘째,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과제 셋째,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대한 문제와의 복합적 연계성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결과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며, 현안인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장차 한반도의 분단 극복을 위해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전략과 연계하여 역내의 평화 정착과 지구촌 번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호혜적이고 건전한 동맹관계로 발전함으로써 새로운 한미동맹 100주년을 지향하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 한미동맹, 주한미군, 연합사, 유엔군사령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I. 시작하며

동맹(alliance)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홀스티(O. Holsti)는 동맹을 “둘 이상 국가 사이에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공동 협조하기 위해 체결된 공식적 합의”라고 말했다.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는 『군주론』에서 “원군(援軍)은 그 자체로서는 유능하고 효과적이지만, 원군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거의 항상 유해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왜냐하면 그들이 패배하면 당신은 몰락할 것이고, 그들이 승리하면 당신은 그들의 처분에 맡겨지기 때문이다.”¹⁾라고 동맹을 설명했다. 현대적 의미로 동맹은 ‘안보 보험’과도 같아서 평상시에 조금씩 상호간에 신뢰와 공동의 대응을 준비하여 유사시 함께 대처하기 위한 ‘생명을 가진 유기체’와도 같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현대사에서 6·25라는 참혹한 전쟁을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과 함께 치르고 정전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파생된 실체이다. 한미동맹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이며, 그런 면에서 마키아벨리의 관점에서 ‘원군’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동맹의 일방인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강력한 축으로 존재했고, 또 다른 당사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게 되었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상수(常數)가 되었다. 한미관계는 매우 복잡적이며 다층적이다. 특히 지정학과 역사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동시에 분단국의 역학이 반영되어 있다. 한미동맹은 글로벌, 동아시아, 한반도, 그리고 정권의 차원까지 네 개의 층구조를 가지고 있다.²⁾

지난 70년 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왔으며, 한미동맹은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동맹으로 발전하였다. 그동안 한미동맹의 내외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현재의 동맹 현안으로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연착륙, 유엔사 재활성화 문제의 참여 등이다.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더 강화된 양국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양국은 미래를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1) Niccolò Machiavelli저, 강정인외역, 『군주론(IL PRINCIPE)』, 도서출판까지, 1977. p. 97.

2) 김준형,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창비, 2021. p. 124.

한미동맹의 역사와 현주소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연구한 것이다. 먼저 한미동맹 70년의 역사와 변천에 대해 짚어 보고, 현재의 동맹이 처한 현주소를 진단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최대 현안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첫째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이며, 둘째는 동맹형태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략권 전환문제, 그리고 셋째는 정전협정의 관리와 향후 한반도의 분단구조 해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유엔사 재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해 볼 것이다. 이후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방향을 논할 것이다.

II. 한미동맹의 역사와 변화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 이전인 1882년 ‘조미통상수호조약’³⁾을 체결한 이후 올해로 141년 동안 외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미국은 1945년 2차 대전 전승국으로 한국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켰고, 군정을 시행하면서 정부의 수립을 도왔다. 1950년 공산세력이 남침하자 유엔군을 조직하여 참전하였고, 1953년 정전협정의 후속조치로 ‘한미상호방위조약’⁴⁾을 체결하여 군사동맹관계를 이어온 지 70년이 되었다.

한미동맹의 역사와 발전 단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다양한 분류가 있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한미동맹 60년사』에는 한미동맹의 성립기, 한미동맹의 성장기, 한미동맹의 강화기, 한미동맹의 발전기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⁵⁾ 이 논문에서는 한미동맹의 발전과정에 대해 한국 정부의 외교사적

3) 1866년 7월 27일 미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조선에 통상을 요구했다가 불태워졌으며, 미국은 1871년 6월 1일 자국민 살해와 선박 방화에 대한 항의로 군함으로 강화도를 공격(신미양요)하였다. 이후 1882년 5월 22일 인천부 화도진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국방부, 2013. p. 394. 김준형,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창비, 2021. pp. 29-34.

4)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이며, 1953년 8월 8일 한국(변영태 외무장관)과 미국(델레스 국무장관)간에 가조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 서정식 조인되어, 1954년 11월 18일부터 발효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 6조이다. 외교통상부《한국의외교의 50년 : 1948-1998》외교통상부, 2007.

5) 한미동맹 발전 단계는 ① 성립기(한미관계가 시작된 조선 말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

시각에서 정리하여 살펴볼 것이다. 2008년 외교통상부에서 발간한 공간사인 『한국외교 60년(1948-2008)』의 제1장 ‘주변 4국 및 지역외교’ 중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의 과정을 추적해볼 것이다.⁶⁾

1. 한미동맹의 형성기

정부 수립 초기 한국 외교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1948년 5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감시 하에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다. 미국은 1949년 1월 1일 한국정부를 승인하고 무초(John J. Muccio)를 주한 대사로, 한국정부도 1949년 3월 주미 한국대사관을 개설하고 장면(張勉)을 주미 대사로 임명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희망했으나, 미국은 1949년 6월 군사고문단 500여명을 남겨놓고 철군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한국 방위에 앞장섰다. 신생국인 한국은 소련과 중공의 사주와 지원을 받은 북한 공산 집단의 침략을 받았고, 유엔(UN)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유엔군사령부(UNC)를 탄생시켰다. 전쟁은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1,129일)간 지속되었고, 미국은 전체 유엔군의 91.4%에 해당하는 연인원 1,789,000명을 파견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는 33,686명의 전사와 92,134명의 부상, 3,737명의 실종 등 총 129,557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⁷⁾

이 체결된 시기) ② 성장기(1953년 정전 후 1970년대 중반까지 동맹의 발전과 자 국방 기반이 조성된 시기) ③ 강화기(1970년대 중반 이후 주한미군 철군의 갈등 연합사 창설 및 한국군 현대화시기) ④ 발전기(1990년대 이후 탈냉전으로 소련 과 동 구권 붕괴 및 테러 등 새로운 위협,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로 구분하고 있다. 군 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국방부, pp. 6-8.

6)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1948-2008)』, 외교통상부, pp. 55-61. ① 정부 수립 과 한국전쟁을 치루면서 이뤄진 한미동맹의 형성기, ② 냉전체제의 변화와 한미동맹 발전기, ③ 한미 안보동맹에서 경제관계로의 확장기, ④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의 공 조기, ⑤ 한미동맹의 재조정기 등 5단계이다.

6·25전쟁은 종전이 아닌 정전 협정으로 체결되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멈추었으나 양극체제의 최첨단이 되어 불안한 평화가 존재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고자 했다. 양국은 정전협정 과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1953년 10월 1일 체결함으로써(1954년 1월 15일 국회 비준, 1월 26일 미국 상원비준) 조약에 근거한 한미 동맹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2. 한미동맹 발전기

1961년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반공(反共)을 내세워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1961년 11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경제 지원을 확보하였다. 한편, 한국정부는 미국의 베트남 파병 요청에 따라 1964년 9월, 1차 월남 파병을 시작하였다. 1969년 7월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은 ‘괘 독트린’을 발표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방위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도록 선언했다.⁸⁾

이에 따라 주한미군도 1971년 3월부터 6만 1,000명의 병력 중 2만 명이 감축되었으며, 1972년 4월, 윌리엄 로저스(William P. Rogers) 미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1975년부터는 한국에 대한 무상 군사원조가 종료될 것임을 밝혔다. 당시 세계적 차원의 테탕트와는 달리 한국은 국내적으로 오히려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1974년 11월 포드(Gerald R. Ford) 대통령이 방한하여 월남 파병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면서 미군 감축 등으로 야기된 불편한 관계가 회복했다. 양국은 1978년 11월, 주한 미 지상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완하고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미연합사령부(CFC)’를 창설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미국 레이건(Ronald W. Reagan)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기치로 대소 군사력 우위확보를 국가정책의 우선으로 삼았다. 이에 우방국과의 결속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한미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7) 박동순, “6·25전쟁과 전쟁의 인적 피해가 미친 영향”, 『한국보훈논총』 제62집, 한국보훈학회, 2022. pp. 143-148.

8) 김준형, 위의 책, pp. 130-134.

1990년대 초에는 탈냉전을 맞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겪게 되었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아시아 미군 감축문제가 제기되었다. 미국은 1990년 4월 동아시아 지역 미군 단계적 감축안인 ‘동아시아 전략구상(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EASI)’을 발표하고, 1992년 1단계 계획에 따른 7천 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했으나, 이후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1994년 보류되었다.

3. 한미동맹 확장기

1950년대의 한미관계는 안보위주였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획득한 구호와 전후 복구 및 경제 부흥을 위한 무상원조는 12억 1,400만 달러에 달했다. 한국이 미국과 경제에서 쌍무적 관계를 갖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자립경제 목표로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서였다.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자본 및 기술협력, 투자 유치 및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에 대한 경제외교를 적극 전개했다. 그 결과, 1978년에 이르러 한국은 미국의 제11위 수입시장인 동시에 제13위의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여, 교역량이 70억에 달했다. 이후 한미 경제관계는 일방적 수원국(受援國)에서 탈피, 호혜적인 파트너로 바뀌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미국으로 수출이 급증하자 무역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1988년에 한국이 86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 흑자를 달성하자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는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연간 최대 11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후, 1998년부터 IMF 극복 과정에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면 통상마찰은 줄어들었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하였다. 양국 간 교역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미국은 한국의 4위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한미 경제관계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어졌으며, 한미 FTA는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강화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협정으로 평가되었다.

4. 한미동맹 공조기

1990년대 탈냉전의 시대가 되면서 한국 정부는 북방 외교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하면서 한미 간의 협조가 필요했다. 또한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의 핵개발 징후가 포착되면서 한미 간에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했다. 1993년 3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위기 국면을 조성하였다. 이후 북한은 1993년 중 개최된 1, 2단계 미·북 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4년 3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거부 및 탈퇴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후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하여 김일성과의 면담을 통해 상황타개를 위한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북한은 3단계 미·북 회담을 통해 1994년 10월 21일, '미·북 간 기본합의문(일명 '제네바 합의')'를 타결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이 주축으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를 설치했다. KEDO는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 2기를 건설해 주고 경수로 1호기 완공 시까지 매년 중유 50만 톤의 대체에너지를 공급하기로 하여 북 핵문제는 일단 안정화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다.

1998년에는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 의혹이 제기되고, 대포동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였다. 미국은 페리(William J. Perry)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하고, 소위 '페리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에 관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계속되었고, 미·북 간에는 1999년 9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잠정중단을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조명록 북한 특사의 방미와 미·북 공동성명발표, 그리고 2주 후 올브라이트(Madeleine K. Albright) 국무장관 방북 등이 이뤄졌다.

2000년 6월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첫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화해무드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2001년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9.11테러 이후 변화된 미국의 세계전략에 입각하여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고 대북정책을 재검토했다.⁹⁾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

9) "North Korea is a regime arming with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그럼 추진 문제로 제2차 북핵 위기가 초래되었고, 한미 양국은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긴밀하게 공조하였다. 2003년 8월부터 ‘6자회담’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를 이끌어냈다.

동맹은 2006년 7월의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10월의 제1차 핵실험 등 위기 상황에 공동 대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공동성명’과 이후 합의에 따른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는 비핵화 2단계(불능화) 조치 완료를 위한 검증 문제에 북한의 비협조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5. 한미동맹의 재조정기

탈냉전 이후의 안보환경의 변화와 9.11테러 등 새로운 위협과 도전을 맞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발전과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및 세계화 조류에 맞춰 동맹을 발전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한미 양국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수차례의 협의를 추진하여 서울 지역에 있는 주한미군 및 관련 부대를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고 전국의 군소 미군 기지를 2단계에 걸쳐 중부 및 남부 등 2개 권역으로 통폐합하게 되었다.

또한 양국은 2006년 9월 16일,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하였다. 이후 2007년 2월 23일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한국 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동맹은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14년 10월 23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협의하여 ‘동맹 재조정 사업’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2008년부터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맹은 안보협력 분야에서 주한미군 28,500명 수준 유지, 한국의 미국 대외군사판매차관(Foreign Military Sales, FMS) 격상, 정상차원에서 확장역지 및 공고한 안보태세 강화 확인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한편, 2017년

destruction, while starving its citizens...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VOA뉴스(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 검색일 2023.5.7.

1월 20일 취임한 미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관하여 미국의 안보지원에 상응한 부담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각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동맹(asymmetrical alliance)의 기본적 특성이었다.¹⁰⁾ 이후 2021년 1월 20일 바이든(Joe Biden)이 취임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질서 주도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21세기 들어 북한 핵능력이 현실적 위협의 되었고, 중국이 군사적·경제적으로 강대국으로 급부상하여 한미동맹에게 새로운 도전을 부여하였다. 한국은 70년간의 분단체제와 정전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변영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북핵 문제와 대중국 관계를 둘러싼 한미 동맹 간 인식과 해법의 차이로 인해 ‘한반도 딜레마’를 종종 경험해 왔다.¹¹⁾ 한미동맹은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의 인도-태평양정책과 NATO의 확산 등으로 인해 지역동맹으로부터 ‘글로벌 동맹’으로의 변화에 따른 동맹 정체성 딜레마에도 직면하였다.

6. 한미동맹의 역사와 변화에서 산출된 문제들

한미동맹의 출발은 3년간의 6.25전쟁을 국제연합군의 형태로 함께 수행한 후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인 정전협정의 조건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동맹은 비대칭동맹으로 출발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은 군사적으로 한국을 지원하여 안보를 보장하는 대신 자율성을 제한하는 형태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유엔사 재활성화에서 완화와 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발전기의 한미동맹은 한국이 경제발전을 시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동맹이 심화되었다.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기치로 월남전에 전투병력을

10) 알트펠드(Michael Altfeld) 교수는 동맹의 “자율성-안보교환(autonomy- security trade-off)” 모델에서 비대칭 동맹은 강대국이 안보를 지원하고, 약소국이 자율성을 양보하여 비용분담 등 강대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교환관계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주장하였다. 박휘락, “트럼프 행정부 시대 한미동맹 분석: 자율성 양보의 요구와 저항”, 『국가정책연구』제35권 제1호, 한국국방연구원, pp. 155-176

11) 이수형,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제228호, 2020.12.14.

파병함으로써 6.25전쟁의 국제적 도움을 값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군대의 철수를 방지하고 경제적 지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동맹의 딜레마인 방기(放棄, abandonment)를 기제로 한국을 대하였고, 한국은 월남파병이라는 연루(連累, entrapment)의 시기를 겪게 되었다.

한미동맹의 공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비핵화를 유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KEDO체제의 추진 및 6자 회담의 가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게 되었다. 21세기 들면서 미국은 새로운 위협인 테러문제에 대응하면서 약 20년을 소모하여 북한은 핵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ICBM을 개발하여 동맹과 주변 국가를 위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북핵 문제는 동맹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동맹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지난 70년 동안 유지해 왔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이며 동시에 한미연합사의 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및 주변 상황이 악화되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이와 동시에 미국은 ‘유엔사 재활성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동맹관계와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제IV장에서 세부적으로 논할 것이다.

Ⅲ.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현주소

한미동맹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 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등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에 기여해왔다. 주한미군은 동맹의 상징으로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다. 또한 동맹은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미군 증원전력과 유엔사 전력제공을 투사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대변해왔다. 2023년은 6·25전쟁의 정전 협정과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여기서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과 현상을 짚어보는 것은 향후의 동

맹 발전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

1. 한미동맹의 협력 확대와 심화

가. 글로벌 협력 확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2022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동 비전에 합의하였다.¹²⁾ 양국 국방 장관은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국방·안보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과정에서 한미 양국 국가 이익의 접점을 확대하고,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 대통령은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구현해 나간다는 비전과 ‘포용·신뢰·호혜의 3대 원칙’을 밝혔다. 12월에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토대로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안보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유용한 공조를 하고 있다.

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의 심화

동맹은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도서국들과 한미 양국의 국방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유럽국가들 과도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역내 및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s, GPS)’ 구상에 발맞춰 국방 차원의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다. 글로벌 중추 국가란 가치와 규범의 연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이다. 특히 글로벌 중추 국가의 핵심은 한미동맹 강화

12) 국회(<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9858>), 입법조사처, 검색일 2023.5.7.

와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이다.¹³⁾

한국은 미국과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에 기반하여 우주협력 모든 분야에 걸쳐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주상황인식정보공유체계를 포함한 동맹의 우주능력을 강화하고,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특정 국가가 배후에서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 당국 간 긴밀한 정책공조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발전

한미동맹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정례안보협의체를 내실화하면서, 수시 정책협의를 통해 긴밀하게 공조해왔다. 양국 국방부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보다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식별하고 확대해 나감으로써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고위급 정책협약과 정보공유 협력 및 3자 훈련과 인적교류 등을 추진했다. 한·미·일 3국의 공동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억제효과를 달성하고 도발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2.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향상과 우호 증진

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의 추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표상이다. 한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전국

13) 한석희, “윤석열 정부의 對中정책: 글로벌 중추 국가비전과 한중관계의 재정립”, 「KDI 북한경제리뷰」 제11호, 2022.

에 산재된 미군 기지를 평택 및 대구 지역으로 통합 및 재배치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강화함은 물론 한반도 무력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국방부는 2007년 11월 미군기지 이전공사에 착수한 이후 이전 대상 건물들의 준공과 함께 미군부대의 이전을 진행하였다. 2022년에는 서울의 용산에서 평택으로 주한미군 핵심 지휘시설과 연합사령부 본부의 이전을 완료하였다. 향후 기지이전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은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무력분쟁을 방지함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을 보장할 것이다.

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부담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 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의 예외 조치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에 따라 지원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당시 양측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세 가지 항목에 배정, 편성, 집행하고 있다. 양국은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와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이행약정에 합의하였고, 2021년 9월부로 발효되었다.¹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특히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개선해왔다.

14) 협정은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하며, 한미 양국은 기간 중 분담금 총액을 2020년 1조 389억 원, 2021년 1조 1,833억 원,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표-1 : 방위비분담금 연도별 합의액〉

차수	1·2차					3차			4차			5차		
	연도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액수	1.5	1.8	2.2	2.6	3.0	3.3	3.6	3.9	3.3	3.9	4.4	4.7	5.5	6.2

단위: 억 달러

차수	6차		7차		8차				9차					
	연도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액수	6,804	6,804	7,255	7,415	7,600	7,904	8,125	8,361	8,695	9,200	9,320	9,441	9,507	9,602

단위: 억 원

차수	10차		11차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액수	10,389	10,389	11,833	12,472	전년도 우리 국방예산 증가율 적용		

*제6차 협정 이후로는 원화로 지급방식 변경

출처 : 국방부, 『2020 국방백서』, 국방부, 2023.2. p. 158.

다. 한미동맹 우호 증진 노력의 지속

한미양국은 전통적 우방으로서 다양한 우호증진 사업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존의 한미 친선 단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규모 탐방으로 전환하였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민속촌 방문, 판문점 JSA 및 도라 전망대 견학, 서울 ADEX(Aerospace and Defense Exhibition) 참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동맹의 최첨단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유대감을 제고하였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한미 대표단과 정부 주요 인사, 주한미군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장병, 카투사 등 200여 명을 초청하여 ‘한미동맹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찰스 랭글(Charles Rangel) 전 하원의원이 제9회 백선엽 한미동맹상¹⁵⁾을 수상하였다. 한편 제10회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미 상원 군사

15)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국방부가 2013년부터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한 미국 인사에게 수여해 온 포상으로, 워커(Walton Walker)예비역 대장, 웨버(William Weber)예비역 대령, 밴플리트(James Van Fleet)예비역 대장, 싱글라브(John Singlab)예비역 소장, 베시(John Vessey)예비역 대장, 클라크(Mark Clark)예비역 대장, 티렐리(John Tilelli) 예비역

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관련 입법 활동을 주도한 댄 설리번(Dan Sullivan) 미 연방 상원의원이 수상했다.¹⁶⁾

3. 한미동맹에 대한 여론과 평가

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발표 자료

1) 아산정책연구원 조사(2023년 3월)

아산정책연구원은 2022년 3월, 한국인들의 대미(對美)인식과 한미관계 및 동맹 등에 대한 국내 여론을 조사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¹⁷⁾

먼저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군사력을 꼽은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에 대한 신뢰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88.9%가 미국이 한국을 위해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국인은 한미동맹이 계속 필요하다는 답이 90%였고, 통일 후에도 필요하다는 비율은 80%였다.

주한미군에 대하여는, 주한미군이 향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80% 내외였고,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022년 62.3%로 나타났다. 동맹의 현안으로, 한국인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70.2%가 지지했으며,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를 59%가 찬성했다.(반대 38.3%) 그리고 한국인은 한미관계 현안으로 고조된 북한 핵위협 대처 등 안보 협력이라는 대답이 37.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무역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16.1%, ‘남북·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14.3%, ‘중국 부상에 대한 공동 대응’ 12.6%, ‘전작권 전환, 연합훈련 등 동맹 운영’ 10% 순이었다.

2) KINU 통일의식조사 2023(2023.4.15.~5.10)

대장, 매티스(James Mattis)전 장관 등에게 수여했다.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910>), 검색일 2023.5.7.

16) 댄 설리번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논의 시 ‘주한미군의 철수·감축문제는 반드시 의회와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 포함시키는데 앞장섰으며, ‘추모의 벽’ 건립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17) 아산정책연구원, 『아산리포트: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2022.3.22.

통일연구원은 한국의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주제는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이었으나, 세부 항목에는 한미관계와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먼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에 62.2%가 신뢰한다, 37.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7.2%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미국이 한국의 국익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답은 46.4%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는 90%가,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54.3%로 나타났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은 72.1%가 신뢰하며, 27.9%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는 70.8%가 찬성하였으며,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45.1%가 걱정스럽다고 했으며, 북한과의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10점 만점의 가능성에 대해 4.05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¹⁸⁾

3) 국가보훈처와 동아일보, 전경련의 조사 결과

국가보훈처(2023.6.5. 국가보훈부로 승격)와 동아일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인 1,037명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상호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인에게 ‘미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유’(24%) ‘강대국’(8%)순이었고, 미국인에게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좋은 감정’(7%), ‘음식’(6%) 순으로 답하였다.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미국’하면 떠오르는 기업은 ‘애플’(49%)이었으나, 미국인에게 한국하면 떠오르는 기업은 ‘삼성’(16%)을 답하여 한미 간에 상호 인식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¹⁹⁾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70년 전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현재의 경제대국 한국이 가능했는지’의 질문에 64.6%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답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안보적지지(52.3%)와 원조 등 경제적 지원(32.6%) 순으로 답해 한미동맹의 안보적 기여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여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한국이 가장

18) 이상신 외, “KINU 통일외식 조사 2023”, 통일연구원, 2023.6.2. pp. 37-43.

19) 동아일보/국가보훈처.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상호 인식 조사”, 2023.3.12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미국(89%), 중국(35.2%), 일본(23.4%)순으로 답했다.²⁰⁾

4) 한미동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시사점

앞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본 것처럼 2023년은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을 맞는 해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알 수 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여 전쟁의 재발을 억지하였고, 경제적 원조와 지원을 통해 ‘한강의 기적’에도 일조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고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데다 북한의 핵개발과 위협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한국의 국민들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군의 군사주권인 전작권의 전환 및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하는 데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핵 확장억제와 유엔사 재활성화는 매우 긴요한 한미동맹의 현안임에 틀림없다. 또한 한미동맹은 미래를 지향하는 글로벌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건전한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 다양한 입장에서의 정성적 평가

1) 한미동맹의 내부적 평가

동맹은 ‘양날의 보검’과도 같다고 하는데, 당사국가의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²¹⁾ 2023년 4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에서 “70년 전 한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이 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동반자”라고 말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라고 말했다. 블링컨(Antony John Blinken) 국무장관은

20) ZDNet korea news print, “국민 65% 한미동맹 없이 경제대국 불가”, 2023.4.16.

21) ‘양날의 보검’이란 말은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을 가진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보검이라는 단어는 검술에서 사용되는 검을 뜻하는데, 양날의 보검은 검의 양날이 무기로서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즉, 한쪽에서는 장점이 되지만 다른 쪽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동반자이자 친구이며,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동맹 내부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례도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한미동맹을 “한국의 외교적 지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2016년 대선 경선 당시 트럼프가 “한미동맹은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쏟아 부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2) 한미동맹에 대한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평가

유엔 안보리는 2020년 6월 25일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동맹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2020년 9월 30일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지구상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사례로 자민당 이시하라 사토루(石原 慧) 의원이 발언한 사례가 있다. 그는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2020년 국방백서』에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안보 동반자이며, 미국과 한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보호해나가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도 맞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동맹을 결성하게 했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줄기차게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를 주장해 왔다. 2020년 6월 1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미동맹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매국백성들이 만든 악마의 수탈기”라며 그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돈으로 만들어진 남조선 군사력과 재정력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21년 2월 15일, 북한 김영철은 “한미동맹은 동맹 강화 대신 대북제재를 위한 수단”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조종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북한의 후원자 격인 중국 또한 성주기지 사드배치에서 반발하여 한국에 경제 보복한 사례와 같이 미국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투사되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2019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이 중국의 군사적 발전을 억제하고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2021년에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 안보와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소련과 러시아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해 다양하게 비판 해왔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 정책이 강화되면서 러시아는 한미동맹을 악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을 비난하기도 했다.

IV.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

2022년 1월과 5월에 한미 양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양국은 2022년 5월과 2023년 4월에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70년을 지내온 한미동맹이 제반 안보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향후 지향해야 할 미래 의제로 다음의 세 가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둘째,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연착륙, 셋째, 유엔 군사령부의 재활성화에 대한 합의와 참여이다.

1. 북한 핵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

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동맹대응의 진화

북한은 지난 30여 년 동안 국제사회의 제재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고도화하고 군축을 위한 외교적 관여를 거부해 오고 있다. 북한은 2022년 한 해에만 100여 건이 넘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고 고체연료를 포함하는 미사일의 다양화, 잠수함 발사 미사일, 핵탄두 소형화 등을 추진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지목하여 핵 위협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1978년 최초로 ‘핵우산(nuclear umbrella)’ 공약을 도입한 이래 보다 넓은 개념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한반도에서 핵 확장억제와 관련한 논의는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시작되었다. 동맹은 2010년에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2015년에는 '억제 전략 위원회(DSC)'를 운영해 왔다. 이후 2016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 실험을 계기로 억제와 압박,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대북 억제 장치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²²⁾로 진화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에게 기존의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²³⁾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술핵의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23년 4월 26일, 한미 양국 정상은 확장억제의 진화조치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였다. '워싱턴선언'에서 한미 정상은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약속은 지속적이며 철통같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²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핵우산)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고, 윤대통령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양국 정상은 워싱턴선언의 이행으로 차관보급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창설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고 핵 억지 접근법을 논의하기로 했다.²⁵⁾

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한미 외교·국방의 '2+2' 형태로 한미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6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10월 19일, 외교·국방장관(2+2)회담을 갖고 미국의 대한민국 확장억제 제공에 한국 측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신설을 결정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2018년 1월 제2차 EDSCG 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은 EDSCG에 대해 반발했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대화 무드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등으로 EDSCG는 열리지 않았다. 이후 북한의 핵위협이 가중되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후인 2022년 9월 16일, 2차 회의 이후 4년 8개월 만에 3차 EDSCG를 열고 북한 안보 위협 등 현안을 논의했다.

23) 김정섭,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회의의 평가 및 제언", 세종연구소 글로벌 NK논평, 2022.10.24.

24)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o.kr/www/brd/m_24806/view.do?seq=185), 검색일: 2023.6.13.

나. 워싱턴선언을 통해 본 북핵 대응의 전망

핵협의그룹(NCG)은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이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를 강화하여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핵협의그룹(NCG)’은 나토의 ‘핵기획그룹(NPG)’²⁶⁾ 만큼 권한과 위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는 비중 있고 내실 있는 협의가 가능한 기구로서 북한 핵 억제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억제의 강화 측면에서 실질적 진전이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행동을 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했으며,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한국에 오지 않았던 SSBN을 보낸다는 것은 한국이 핵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가진 모든 전략자산을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²⁷⁾

25) 워싱턴 선언은 2023년 4월 26일 열린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선언문이다. 선언에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차관보급 한미핵협의그룹 NCG의 신설, 둘째, 실제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 정기적 한반도 전개, 셋째, 대한민국의 핵확산금지조약,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 의지 재천명 및 명문화 등이다.

26) NATO 핵기획그룹(NPG)은 1966년 12월에 설립되었다. 나토의 NPG는 핵 운영 계획(planning), 의사 결정(decision-making), 사용 시 핵무기 운반과정(delivery) 등에 대한 동맹 간 협의체이다. 나토는 핵무기 사용 최종 권한만 제외하고 핵정책, 사용관리, 운영 등 모든 것을 5개 핵 공유 회원국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특히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운영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planning(계획)'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NPG에는 3가지 레벨이 있는데, 장관급 레벨은 NPG 참여국 국방 장관으로 구성되며, NATO 사무총장이 의장을 맡는다. 회의에서 핵 기획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하위 레벨에서 수행한 작업을 검토하며 향후 계획을 고려한다.

27) 중앙일보, “미국이 보낸다는 전략핵잠수함(SSBN), 한미·일 지휘관 함께 탔다”, 2023.5.5.

다. 워싱턴선언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준비

북한의 '워싱턴선언'에 대한 반응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계속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한 발 더 진전을 이뤘다는 '워싱턴선언'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차이와 또 다른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 공유'에 대한 논란이다. 워싱턴선언 직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사실상 핵 공유'라고 했는데, 케이건 백악관 선임국장은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²⁸⁾ 이는 관점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핵무기 자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고 '핵무기를 운용하는 작전'을 공유하는 것이며, 최종 결정권도 변함없이 미국에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의 핵 자강론에 대한 문제이다. 그동안 한국 내 여론조사에 70%가 넘는 국민들이 핵무기의 독자적 개발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는 연구자들의 수준을 넘어 정치인들까지도 다양한 기회에서 논의를 표면화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약속과 한국의 비핵화 약속은 바늘과 실의 관계에 있었다. 이는 미국이 확실하게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하면 한국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독자적 핵 무장 여론에 호응하기보다 미국의 핵무기 및 확장 억지 의사결정 과정에 최대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 것이 바로 NCG 이다.

그러나 '워싱턴 선언'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위협 강도를 높일 경우, 미국의 대응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워싱턴선언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핵 무장론이 정쟁의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8) 핵무기는 공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탄생한 NCG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은 이런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고, 미국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핵 공유를 얘기한 것이다. 나토에서도 '핵 공유(nuclear sharing)'라는 말을 쓰지만, '핵무기 공유(nuclear weapon sharing)' 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것처럼 '핵 공유'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

세 번째로, 독자적 핵 무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는 미국이 한국 국민들에게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대응하고 보복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원하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장래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습을 하는 것은 나토 모델(5개국에 전술핵 배치)에 더 근접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 한 후 유사시 핵사용을 위한 확신의 증거로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 사용 장치의 열쇠를 한국과 나눠 갖는 '이중 열쇠(Dual Key)' 체계에 합의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동맹국가인 호주 모델인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시도했다가 무산되었지만, 미국의 신뢰가 높은 현 정부에서 전략적 복안을 갖고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일본 모델(농축과 재처리를 위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로 가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유용하다.

2.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연착륙 추진

국가는 군대를 보유하여 국가의 주권과 생존을 수호하며, 군사력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는지의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핵심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특징과 한국의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미동맹 70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력이 성장하였고, 전작권 전환의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가. 전작권 전환의 시각과 추진 변천

전작권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작권이 주권의 문제인가 여부이다. 이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외국 군대에 위임된 전작권이 행사되는 순간(주권적 권한의 일부를 외국군 지휘관이 행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권적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적확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인가의

여부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며, 미군이 가진 전략자산을 한국 안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이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여부가 일방적으로 한국 안보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국지도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미군의 과거 행태를 고려할 때, 전작권을 미군에 위임하는 것이 반드시 더 효과적 대응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셋째, 미중 전략경쟁의 확대·심화 등 국제질서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이 한국의 안보에 더 유리한지 여부이다. 북한을 포함한 다층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동북아 각국의 군비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국방력 강화 역시 불가피한 문제이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 국방력 강화에 대해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대중 군사보세정책에 대한 편입으로 판단한 과잉반응을 우려해야 한다. 물론 한국의 안보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구도에서 한국이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미국에 전작권을 위임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정책적 융통성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된 논의는 탈냉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해왔다. 안정적인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고 전환계획을 발전시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환능력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북 핵의 위협은 고도화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었고,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여 전작권 전환에 새로운 변수가 출현하게 되었다. 2021년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양국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였지만, 전작권 전환의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²⁹⁾

29) 전작권 전환조건은 ①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확보, ② 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 ③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과 각 조건에 세부 요구능력 및 평가가 수반된다. 김정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p.14.

나. 전작권 전환 추진 과정에서의 논란

전작권 전환 논의가 한창 이루어진 200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논쟁이 재생산 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쟁점이 있지만 크게 보면 정치적 논리 대 군사적 효율성 문제, 그리고 한국군의 북한 위협 억지 및 방어능력 등을 둘러싼 세가지의 이슈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작권 전환이 군사적 효율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논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 한국군이 독자적 북한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작권은 명백하게 국가 주권에 속하는 사안이며, 이미 한국군은 핵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군을 압도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가? 미국의 생각이 변화는 없었는가? 미래에도 변화가 없을 것인가?' 하는 미국 입장과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 이유는 '미중 전략경쟁이 전면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 이외 안보이슈와 전작권 전환 문제는 관련이 없는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이다.

셋째,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수행능력에 대한 문제로 전환능력 검증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현재의 한미연합지휘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한미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국적만 바뀌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이라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게 될 지휘관의 지휘능력 평가가 전환능력 검증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재처럼 한국군의 군사능력 전반을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한미동맹은 기존의 전작권 전환 관련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최근의 안보환경 변화가 전작권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한미 당국의 정책이 상당부분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과거 전작권 전환 합의는 수차례 변경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 변화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한반도 내외의 안보상황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분단 극복과 평화 정착을 위해 긴요한 문제이다.

다. 미-중 전략경쟁의 관점에서 전작권 전환과 연계된 문제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거대한 요소는 미중 경쟁과 동북아 질서의 재편이다. 2019년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같은 해 6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하였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목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다차원적인 대비태세, 동맹들과의 파트너십, 지역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이 핵심요소로 지적되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중 전략경쟁의 지정학적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³⁰⁾

미중 전략경쟁이 ‘한·미·일 vs 북·중·러’ 라는 신냉전 구조의 강화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핵심 사안인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미중 간의 정치·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에서도 새로운 이슈가 파생될 것으로 본다. 북한의 핵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날로 예민해지는 현실은 전작권의 전환 문제를 북한 위협 억지보다 더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안보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동북아 군비경쟁 증가 추세는 대비가 필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전략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3년 4월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성장한 국력을 인정하고, 한국을 글로벌 파트너로 대접하였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성장한 국력에 부합하는 국제사회의 책임을 주문하였다.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미국이 인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일이나,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한국의 국제적 부담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한미 간에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의 문제는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긴밀히 대응하며, 양국의 이해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30) 최용환,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전작권 전환”, 「2021 INSS Research Report」pp. 44-45.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 실무적으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하되 한국군의 전환능력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는 과제가 남아있다.

3.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의 이해와 참여

가. 유엔군사령부의 역사와 안보상황 변화

유엔사는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를 근거로 7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창설됐다. 미국은 유엔사에 파견된 16개 국가의 부대를 통합 지휘하였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6·25전쟁 수행을 지휘했다. 이후 유엔군사는 정전협정 준수 및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를 운영해왔다. 유엔사는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이전하였고 유엔군사령관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관리·통제하고 유사시 연합사령관에게 전력을 제공(Force Provider)하게 된다.

21세기 들어 한반도에는 북핵 위협이 증가하고 동북아에는 중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급부상했다.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미국은 유엔사를 강화해 이들에 대한 견제 구도를 강화하려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표출되고 있으나, 그 구상의 핵심에는 유엔사가 있다. 왜냐하면 유엔사는 미국 외 17개 국가라는 전력 제공국이 있으며, 일본에 후방사령부와 7개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럽의 NATO가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처럼 유엔사를 통해 아시아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유엔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의 지지와 전력 제공은 동맹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작전권 전환과 관련하여 유사시 증원되는 69만 미군을 비롯한 17개 전력 제공국이 파견한 전력을 제공하는 유엔사령관과 이를 운용하는 미래연합사령관 간의 세밀한 절차와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주변국들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는 다층적·복합적이어야 유용할 것이다.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령관과 평시작전통제권을 가진 한국군 합참의장, 데프콘-3부터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연합사령관의 지휘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른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나. 미국의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 추진

미국은 2006년 최초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고,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동의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전작권 전환의 최종상태로 설정하였다. 이후 미국은 전작권 전환과 미래연합사 창설에 대비해 유엔군사의 위상과 역할 조정을 준비해 왔다. 미래연합사와 ‘새로운 유엔사’로 재편되는 문제는 향후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근간이 되는 기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유엔사 내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18년 역사상 최초로 미군 장성이 아닌 제3국 출신의 유엔사 부사령관이 취임하였고, 주한미군사 참모장이 겸임하던 유엔사 참모장에 별도의 인사가 임명되는 등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에 나섰다. 이처럼 유엔사 운용에 관해 권한을 가진 미국이 유엔사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것은, 미래연합사 창설과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엔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직해 왔고, 부사령관은 통상 미 7공군사령관이 겸직해 왔으나 최근 들어 캐나다와 호주 장성을 기용한 것은 다국적군으로서 유엔사를 재활성화하려는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연합사 참모장과 미8군사령관이 겸직하던 유엔사 참모장도 별도의 장성을 임명하였다. 향후 미국의 복안은 유엔사 참모부를 한국·미국·회원국을 적정한 비율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장성급 지휘부에 한국군은 배제되어 있다.

다. 전작권 전환과 연계된 유엔사령부 재활성화의 고민

미국은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유엔사의 고유 임무인 정전체제 관리와 유사시 회원국 전력 제공과 관련한 실행 능력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78년까지는 위의 두 가지 임무를 유엔사가 직접 담당해 왔으나, 연합사 창설 이후 유엔사는 정전체제 관리 지침만 연합사에 하달하고 실질적인 작전 및 병력운용지침은 연합사가 발전시켜왔다. 이 같은 구조와 관련해 평시에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으나 정전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³¹⁾ 미래연합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으로

31) 예를 들어,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 도발’한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평시작전권을 가진

전작권을 행사하고, 부사령관은 미군 장성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면서 유엔군 사령관 지위를 겸하게 될 것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통합지휘와 관련해 경우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연합사령관은 전쟁 준비 및 수행에 필요한 전력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유엔군사령관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은 주도적 지위이고, 부사령관인 미국군 대장은 지원적 지위가 된다.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주도(supported)와 지원(supporting)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하는데 주도-지원의 협조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³²⁾

라.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참여

미국은 유엔사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유엔사를 ‘동아시아의 나토(NATO)’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전작권이 전환되고 미래사가 창설될 때를 대비해 유엔사 재활성화를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은 북한, 중국 등이 과거에 전략적으로 유엔사의 법적 지위를 문제 삼아온 사실을 주목해 왔다.³³⁾ 이들이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유엔사 실제

한국 합참의장 통제로 국지도발 대응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연합사령관(유엔사령관 겸직)은 정전관리 지침에 따라 위기가 전쟁으로 발전할지 파악한다. 국지도발이 전쟁으로 발전하거나 위기가 증폭돼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대비해 연합사령관은 평시에도 연합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및 발전, 연합 연습 등 6개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관리하는데, 이것은 전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고안된 안전장치다. 김기호, “미, 유엔사 재활성화 ‘동아시아판 나토’ 만든다”, 신동아 2019년 11월호.

32) 한미동맹 파열음이 커질 경우 미래연합사의 미군 부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직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미국이 미래사 부사령관을 대장이 아닌 중장으로 보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 7공군사령관이나 8군사령관이 미래사 부사령관을 겸직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그 대신 현재 연합사령관이 겸직하는 주한미군선임장교와 유엔사령관의 직책을 연합사와 분리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맡길 가능성도 있다.

33)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을 때 유엔사 해체 문제가 불거졌다. 1971 중국이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안보리상임이사국이 되면서 공산진영에 동조하는 비동맹국들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했다. 또한 1975년 8월 페루에서 개최된 비동맹 국가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과 베트남이 비동맹에 가입함으로써 비동맹 내 공산권의 영향력이 최고조였다. 이를 배경으로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남·북 지지세력 간 외교 대결이 전개됐다. 1975년 9월 22일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은 남북 대화 촉구, 휴전협정 대안 및

에 대한 부정 논리나 해체 주장이 이슈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유엔사 강화 계획에 대해 동맹차원에서 유엔사 내에서 입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은 유엔사 재활성화가 전작권 전환을 유명무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소극적으로 대응보다는 실익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엔군부사령관을 한국군이 맡아 유엔사 지휘부에 한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다거나, 참모부에 한국군 장교가 대폭 참여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 안보는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윈셋(Win-set)을 과감히 확대하여 미국의 노력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 주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³⁴⁾

4. 글로벌 포괄동맹을 지향하며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 5번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익과 실용의 외교 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한미관계를 정상의 상호 방문 등 고위급 협의와 분야별 소통을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 협력 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제안보, 인도태평양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한미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³⁵⁾

국방부 차원에서는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의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향구적 평화 보장을 위한 협상 개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제출했다. 북한은 유엔사의 무조건 해체, 주한 외국군 철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두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한국 측 결의안(제3390 A호), 북한 측 결의안(제3390 B호)이 동시에 통과됐다.

34) 장광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 아주대 박사학위논문, 2019. p. 203.

35)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96번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외교부)

을 확대하여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미 양국은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³⁶⁾

2022년 5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서 한미동맹 비전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구상을 소개하는 한편, 2022년 6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023년 4월의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이 전통적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구체화한 ‘핵 협의단(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했다.³⁷⁾

‘공동성명서’에서는 지금까지 한반도에 집중되었던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글로벌 이슈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해 ‘새로운 제도적 프레임워크(new institutional framework)’를 구축한다고 선언하였다.³⁸⁾

36)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05번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국방부)

37) Leaders’ Joint Statement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ROK and US, April 26, 2023; Washington Declaration, April 26, 2023; Remarks b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Joint Press Conference, April 26, 2023; US NPR, April 26, 2023; Korea JoongAng Daily, April 28-May 1, 2023.

38) 예를 들면 한반도의 비핵화 구현에 추가하여 러시아의 유엔헌장과 국제법 위반 행위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전쟁행위에 대한 규탄,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에 공동 대응, 첨단 과학기술 개발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한미일 안보협력(DTT) 강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지향, 동남아 메콩 개발 지원, 반도체, 부품공급 체제 개편, 신소재 개발 주도,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SSCF)와 양국 우주청 간 협력, 양국 젊은 엘리트 지도자 양상 프로그램 기금 등이었다. 군사문제연구원,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과 핵 협의단 창설”, 「KINA Newsletter 제1449호」, 2023.5.2.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의 방향성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 정부의 의지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 기조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것으로 주요 방미 일정을 통해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의 외교가 한미동맹과 대일 위주로 진행되는 반면에, 대중국·대러시아 외교 정책은 분명하지 않다. 향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의 좌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러시아와도 일정한 정도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방미로 윤석열 정부는 미국으로 기울어지는 외교 정책이 더욱 확실해졌다. 그러나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주변 4강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포괄적인 국익을 위한 외교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미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동맹의 심화와 확대 과정에서 한국의 선택적 자율성이 어떻게 발휘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실리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정체성과 국익에 따른 대외정책 시행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리 관심이 되었던 중국과 대만문제에 대한 언급 및 우크라이나 사태의 무기 지원 참여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표명 등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V. 맺으며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형성된 한미동맹은 초기에는 동맹을 바라보는 한미 간의 시각차에 의해 많은 갈등이 내재되어 발전되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형성된 이후 70년이 지나는 동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과 미국의 정책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한미동맹은 늘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아 왔다. 글로벌화 된 국제사회와 중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 북한의 핵 개발과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 등은 한미동맹의 재조정 필요성 대두와 동맹의 성격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확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현재 동맹이 해결해야 할 세 가지의 현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먼저 북핵문제의 긴밀한 대응과 한국에 대한 미

국의 핵 확장억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발전시키고 심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맹에 대한 신뢰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고 각각의 국가 이익을 증진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의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추진이다. 이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의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임무수행 능력 구비 등이 함께 연계되어 있으며,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가 미래연합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세 번째는 유엔사 재활성화문제이다. 미국은 연합사의 미래지휘체제 전환을 준비하면서 유엔사의 역할을 증강하기 위한 조직과 인원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정전체제와도 밀접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장차 한반도의 분단구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의 유엔사 역할, 그리고 중국과 대만문제, 일본과 중국의 분쟁에 대해서도 관여하게 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용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사안이다.

마지막으로는 한미동맹이 비대칭성을 좀 더 극복하고 건전한 관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방위비분담금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도 연관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여 협력 관계를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³⁹⁾

현재로부터 미래로 연결된 한미동맹에게 중요한 요소는 산적해 있고 또 앞으로도 예상하지 못한 사안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선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장 긴급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연착륙과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대한 동맹의 공조와 참여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지향을 위해 수반될 주변 4강국과의 외교 전략과 한반도의 분단을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한미동맹 100주년을 준비해야 하는 긴요한 시기에 서 있다.

39) 김건홍,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포괄적 전략동맹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43-45.

한국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한편 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쟁점에도 예민할 필요가 있다. 동맹의 심화와 확대 과정에서 한국의 선택적 자율성이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와 그 과정에서 어떤 실리를 얻을 수 있을까하는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익에 따른 대외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23.05.24]

[논문심사일 : 2023.06.09]

[논문수정일 : 2023.06.30]

[게재확정일 : 2023.09.11]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계동 외, 『한미관계론』, 서울: 명인문화사, 2012.
- 김준형,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서울: 창비, 2021.
- 민태은 외,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서근구,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이상신 외,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제성호, 『한미동맹의 법적이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5.
- 한미안보연구회, 『한미동맹과 6·25전쟁 70주년』, 서울: 군편소, 2022.
- 한미안보연구회, 『2022년 한반도의 안보도전』, 서울: 한미안보연구원, 2022.
- 국방부, 『한미동맹 60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정책실, 2023.
-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1948-2008)』, 국립외교연구원, 2009.
- 한국국가전략연구소, 『북한 핵위협 상쇄를 위한 대안 마련과 동맹 100주년을 위한 준비』, 서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3.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 핵 미사일 실체적 위협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2.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과 핵 협의단 창설』, 서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3.5.2.
- Niccolò Machiavelli, 강정인외 역, 『군주론』,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7.
- George Friedman,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전략』, 서울: 김엔김북스, 2018.

2. 논문

- 김건홍,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포괄적 전략동맹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 김도희,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미동맹의 방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2022.
- 김성한, “한미동맹체제의 구조와 기능, 과거·현재·미래”, 「외교안보연구」 제2호, 1997.
- 김영호 외, “한미동맹의 현황과 도전(지난 4년의 교훈과 바이든 시대의 협력방향)”, 「ASAN REPORT」, 아산정책연구원, 2021.
- 김정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세종정책브리프」 2020-11, 2020.
- 김정섭,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회의의 평가 및 제언”, 세종연구소 글로벌 NK 논평, 2022.
- 박동순,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재인식”, 「軍史」제119호, 2021.
- 박병광, “바이든 행정부하 한미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INSS전략보고」제116호, 2021.
- 박원근, “한미동맹 미래 발전방안: 향후 30년을 위한 여정”, 제11회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국제회의, 2023.
- 박준수, “한미동맹발전에서 국방기술협력의 역할과 과제”, 한국국방연구원, 2018.
- 박휘락, “트럼프 행정부 시대 한미동맹 분석”, 「국가정책연구」제35권 제1호, 한국국방연구원, 2021.
- 우정엽, “미국이 바라보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세종연구소, 2017. UE BRIEF」 통권 228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 이춘근, “트럼프 시대의 한미동맹”, 「KIMS Periscope」제63호, 2016.
- 장광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 정성장, “대한민국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 국회 류성걸의원실, 2023.
- 제임스 김외,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ASAN REPORT」, 아산정책연구원, 2022.
- 최용환,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INSS연구보고서」2021-19,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 하영선,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EAI 외교안보연구시리즈 2」, 동아시아

연구원, 2007.

한석희, “윤석열 정부의 對中정책: 글로벌 증추 국가비전과 한중관계의 재정립”, 「KDI 북한경제리뷰」 제11호, 2022.

홍현익, “한미동맹 50년의 평가와 21세기 한미관계 발전 방향”, 「기억과 전망」 2003.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국정과제」, 대통령실, 2022.

3. 기타 자료

김기호, “미, 유엔사재활성화 ‘동아시아판 나토’ 만든다”, 신동아 2019년 11월호.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검색일 2023.5.6.

VOA뉴스(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 검색일 2023.5.6.

국회입법조사처(<https://www.nars.go.kr/report/view>), 검색일 2023.5.7.

아산정책연구원, 『아산리포트: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2022.3.22.

동아일보/보훈처.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상호 인식 조사”, 2023.3.12.

ZDNet korea news print, “국민 65% 한미동맹 없이 경제대국 불가”, 2023.4.16.

중앙일보, “미국이 보낸다는 전략핵잠함(SSBN), 한미·일 지휘관 함께 탔다”, 2023.5.5

Abstract

The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ROK-US alliance to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Park, Dong-sun

The year of 2023,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ROK-US alliance. It is concluded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based on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to respond to North Korea's aggression and military threats. South Korea established a government in 1948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system and suffered the Korean War less than two years later. South Korea, which had established military relations with the U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signed a mutual defense treaty on October 1, 1953 to prevent a recurrence of war as a condition of an unsafe armistice agreement. The ROK-US alliance in the Cold War era was focused on military alliance and economic support, but it has reached the present by expanding into various fields and undergoing changes in the alliance system as it faces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study first diagnosed the change of the ROK-US alliance and where it is headed in the 70th year through spatial history. In parallel, opinion polls by specialized organizations and qualitative evaluations of alliance parties, third parties, and opponents on the perception of the ROK-US alliance were analyzed.

Three prospects for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were built to defy the current challenges including shifts in the world order, intensifying great power competition, and increasing nuclear threats. First, the role of the 'Washington Declaration' and future

alliances in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second is the transfer of WT-OPCON based on conditions, and the third is the revitalization of the UNC, and these two tasks are intricately linked, which requires an extensive transformation of the alliance. And the future-oriented development plan of the ROK-US alliance was discussed.

The ROK-US alliance, which celebrated its 70th anniversary, aims to be a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and new preparations are needed to peaceful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overcom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The alliance should go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e region and prosperity in the global village in connection with the Indo-Pacific Strategy. To this end, wisdom and efforts are required to aim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new ROK-US alliance by overcoming asymmetry and developing into a mutually beneficial and healthy alliance.

<p>Key Words : ROK-US alliance, USFK, CFC, UNC, WT-OPCON,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p>

중국의 패권화 전망에 대한 분석적 평가

박상중 * 장미화 **

- I. 서론
- II. 강대국화 조건의 비교분석
- III. 중국의 패권화 의도와 미국의 대응
- IV. 중국의 패권화에 대한 평가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 육군본부 정책자문위원

** 공군본부 사무관

논문요약

중국의 시진핑은 중국몽(中國夢)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一帶一路 戰略)을 통해 강군몽(強軍夢)과 해양굴기(海洋崛起)를 선포하면서 해양 군사력 증강과 강력한 경제력 건설을 통해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의 강대국화 5대 핵심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향후 패권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있다. 먼저, 군사력 측면에서 중국은 세계 3위의 군사대국으로서, '해양강국'과 '강군몽'을 통해 해군력 강화와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미국과 같은 지구적 투사 능력 확보는 힘들 것이다. 둘째, 경제력 측면에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괄목상대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중국의 2020년 기준 1인당 GDP는 미국의 1/6 수준이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만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내부통제력 측면에서 중국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 소수민족 충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중국은 언론자유지수 177위, 부패인식지수 80위, 취약국가지수 92위, 세계행복지수는 94위 등 세계 최하위권으로 중국 내부가 건강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넷째, 대외환경에 대한 적응력 측면에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수의 다자협력 기구를 출범시키고, 대외직접투자(ODI)과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 악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연성권력 측면에서 중국은 강대국의 정체성을 연성권력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국력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하드파워 위주의 양적 증가에 치중한 결과로 국제무대에서 외교력과 소프트파워에 대한 영향력이 미흡하다. 또한,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 세계 정치경제와 안보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에도 중국은 미국을 따라가야 하며,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전략적 선명성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주제어: 중국몽, 강대국의 조건, 패권화, 일대일로 전략, 연성권력, 인도-태평양 전략, 전략적 선명성

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국제사회는 경제 규모와 인구수, 군사 외교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중국을 미국에 필적할 정도의 국가로 평가한다. 현재 세계 도처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자 미어샤이머(John Joseph Mearsheimer) 박사는 강대국의 현실적 목표는 역내 지역을 지배하는 패권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패권국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용납할 수 없어서 미중 분쟁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¹⁾

중국은 시진핑이 제3기 집권에 성공하면서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중국몽(中國夢)²⁾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은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제안하였고, 2014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유를 제안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도록 요구해왔다. 중국의 강대국화 의지는 현재 진행형으로 패권화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진핑은 중국 표준(Chinese Standard)으로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함으로써 세계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一帶一路 戰略)³⁾을 통해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고, 해양 군사력 증강과 원거리 투사력(Force Projection) 확보를 통해 강군몽(強軍夢)과 해양굴기(海洋崛起)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 특유의 국제질서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패권화 전략이 중국의 의도대로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패권국 미국은 자국의 쇠퇴 가능성과 함께 중국 중심의 세력균형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개입정책,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재균형 전략(Asia-Pacific Rebalance Strategy)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견제 정책 등 대

1) John J. Mearsheimer,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이춘근 역(서울: 김앤김북스, 2019), pp. 87~89.

2) 중국몽은 과거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기 위해, 경제와 군사 패권 강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전략이다.

3)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육상·해상 실크로드)을 통해 ① 국가 부강, ② 민족 진흥, ③ 인민 행복 등 중국몽의 3대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책을 강화하면서 지역 질서의 중심축을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서진시키고 있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패권화를 억제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국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본격적으로 개시함에 따라 중국의 강대국화와 패권화 계획은 차질이 예상되며, 동아시아의 안보도 악화할 가능성도 크다. 패권은 구체적인 힘을 의미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합의와 인식을 통해 형성된다. 중국은 국제질서를 미국 중심으로부터 중국 중심으로 전환하는 패권화 과정에 많은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이 사회주의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둘째, 역내 국가들과의 역사적 반감, 중화사상, 영유권 분쟁 등의 현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 셋째,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할 정도의 국가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 등이다. 중국이 이와 같은 제약요인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면, 중국은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패권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남북분단과 북핵이라는 안보 현실로 인해 양국의 기대를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놓여 있다. 과거 한국은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큰 곤욕을 치른 아픔이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 한국은 한가지 선택을 강요받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정 국가가 다른 강대국보다 훨씬 강하다는 이유로 패권국이라 볼 수는 없다. 한 국가가 강해지는 과정을 보면, 일정한 법칙성이 있고 강대국으로서의 부상을 도와주는 대내외적 공통조건이 있다.⁴⁾ 이 연구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여 패권화를 추구하는 현실에서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국가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이 강대국화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향후 패권화의 가능성을 전망함으로써, 나름대로 한국의 대응전략 방향성도 제시하겠다.

4) 정재호, 『중국의 강대국화: 비교 및 국제정치학적 접근』(서울: 길, 2006), pp.14~15.; 허리귀, 『강대국의 길, 중국의 길: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의 역사와 중국의 세계 패권 전략』 이재연 역(서울: 다른생각, 2017), p. 28.

2. 선행연구 검토

중국의 패권화 추구와 미·중 패권 경쟁과 관련한 연구는 패권 경쟁의 양상, 패권화 전망, 중국의 정체성 변화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양상을 국제질서 이론으로 분석한 연구⁵⁾ 중에서 이기현(2022)은 중국의 부상은 공세적일 확률이 높고 세력전이 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유동원(2018)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몽,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와 적극 외교 등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남궁영·양일국(2012)은 미국의 우세는 지속될 것이나 일방적 패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의 강대국 정체성 및 외교형상 변경에 관련한 연구⁶⁾ 중에서 반길주(2020)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따라 마찰이 전쟁으로 격화되는 촉발요인을 추적하는 것이 패권 경쟁 여부와 시점 판단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희복은(2017)은 중국이 국제경제의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을 강대국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하였다. 이기현·김애경·이영학(2014)은 최근 중국의 공세적인 주변외교를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 현상변경의 시도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군사혁신, 무역분쟁, 소프트파워 등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⁷⁾ 중에서 박상연(2019)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에 대응하여 미국의 모자이크전을 소개하였다. 서정경·원동욱(2019)은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강대국 외교는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해 평가 요소를 선정하여

-
- 5) 이기현, “중국의 불만족 증대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세력전이 이론에 대한 재탐색,” 『세계지역연구총론』 제38집 제4호(2020), pp. 33.; 유동원, “중국의 강대국 역할: 형성, 특징과 영향요인,” 『중국학연구』 제84집(2018), pp. 167.; 남궁영·양일국, “중국의 부상을 보는 두 시각: 현상유지국인가, 도전국인가? 미·중 국제구조의 현재와 미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2집 제2호(2012), pp. 277.
- 6) 반길주, “미중 패권전쟁의 충분조건 분석: 결정론적 구조주의 한계 보완을 위한 행위적 촉발요인 추적,” 『국제정치논총』 제60집 2호(2020), pp. 17.; 유희복, “신흥 강대국 중국의 국제질서 인식과 실천,” 『아태연구』 제24권 제3호(2017), pp. 147.
- 7) 박상연, “강대국 경쟁의 재부상과 미국의 군사 전략 패러다임 전환: 미국의 군사부문 혁신이 억제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77호(2019), pp. 67.; 서정경, 원동욱,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대국 외교와 미중 무역전쟁,” 『국가전략』 제25권 1호(2019), pp. 44.

강대국 평가를 실시한 연구는 식별되지 않았다. 또한, 오간스키(Organski)와 데이비드 싱어(David J. Singer)는 강대국을 판별하는 국력지표⁸⁾를 정의한 바 있으나 특정 국가에 적용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식별하기 위해 2개의 선행연구를 활용하였다. 정재호(2006)는 국제질서 관점에서 근대사에서부터 강대국화를 추진한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강대국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통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중국의 사회학자 허리궈 등 3인(2016)은 과거 500년 역사를 통해 패권화를 추진한 강대국들의 궤적 분석을 통해 중국의 시각에서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발전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거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국의 흥망성쇠 역사사례⁹⁾를 바탕으로 2개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여 중국의 강대국화를 진단하고 패권화 가능성도 전망하겠다.

II. 강대국화 조건의 비교분석

1. 국제질서 관점의 강대국화 조건

미어셰이머(Mearsheimer)는 패권이란 국제체제를 지배하는 것으로 강대국이 현실적으로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이며, 패권국은 국제체제의 모든 국가를 지배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 설명하였다. 정재호(2006)는 근대사의 강대국화 사례분석을 통해 강대국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통요소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능력(Capabilities), 의지(Will), 인식(Perception)을 제안하였다.¹⁰⁾

8) 남궁영, 양일국, “국제정치 구조와 극(Polarity) 체제 변화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72호(2014), pp. 157~159.; 오간스키는 인구와 제조업(자본투자, 기술혁신, 철강생산 및 제철공장의 건설)을 국력측정의 중요 지표로 제시하였고, 데이비드 싱어는 인구, 도시인구, 현역병력 규모, 국방비, 에너지 소비량, 철강생산량 등 6개 지표(COW 지수)를 강대국 평가지표로 제안하였다.

9) 포르투갈, 스페인, 네델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소련, 미국 등

10) 유럽(스페인, 네델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일본의 강대국화와 몰락의 사례를 들어 중국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표 1〉 국제질서 관점의 강대국화 조건¹¹⁾

구 분	세부내용
능력(Capabilities)	① 군사력 ② 경제력 ③ 내부통제력 ④ 대외환경에 대한 적응력 ⑤ 연성권력 (규범력)
의지(Will)	① 기존 구조와 규범의 수용 ② 최소한의 순응 ③ 대항적 입지 견지
인식(Perception)	능력 + 의지 ⇨ 기존 강대국과 주변국가들의 인지

가. 능력(Capabilities)

강대국화의 핵심적인 요소는 군사력이다. 역사적으로 군사력을 인정받지 못한 국가는 강대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유럽의 경우 해양 세력인 스페인과 영국, 대륙 세력인 프랑스 등의 사례에서도 군사기술의 개발 및 군 조직의 혁신을 통한 군사력 증강과 지역 패권 확보는 강대국화의 공통조건이었다. 또한, 미국과 소련이 반세기 동안 냉전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은 전략핵 무기 비축과 공포의 균형이었다. 군사력의 지속과 혁신, 증강을 보장하는 핵심은 경제력이다. 16세기 식민대국인 스페인, 17세기 대양강국 네덜란드, 19세기 산업혁명의 영국, 20세기 세계 공업생산량의 1/3을 차지한 미국의 사례에서 군사력 건설과 유지를 위해 경제력의 지원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강대국은 경제력 확대와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내적 안정을 위한 충분한 통제력이 필수이다. 구소련의 붕괴 원인은 군사력 약화, 대외적 영향력 부족이 아닌 경기침체와 소련 국민의 사회주의에 대한 실망감 등 대내적 통제력의 부재였다.¹²⁾ 국가는 대외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어야 한다. 18세기 유럽의 강대국은 전쟁을 통해 강대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19세기부터는 대규모 전쟁 대신에 외교적 노력을 통한 힘의 인식을 통해

11) 정재호, 『중국의 강대국화: 비교 및 국제정치학적 접근』 (서울: 길, 2006), p. 14.

12) 란코프, “소련 붕괴의 원인,”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0월 23일,

강대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은 기존의 패권국에 대항하기 위해 강력한 반패권 연대를 결성하여 다자주의 외교를 전개하였다. 또한, 연성권력(Soft Power)도 이념과 사회체제, 제도 및 규범의 중요성에 따라 능력의 한 요소로 선정되었다.

나. 의지(Will)

의지는 군사력, 경제력, 내부통제력, 대외환경 적응력, 연성권력이 성장한 국가가 기존 국제체제의 구조와 규범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의 선택의 영역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 미국 중심의 기존의 구조와 규범에 대해 적극적 수용과 자발적 확산을 선택할 것인지, 최소한의 순응만을 선택할 것인지, 오히려 대항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안적 규범과 연성권력의 창출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

다. 인식(Perception)

인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의 국가를 강대국으로 인지하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직접적인 영향력의 투사 없이도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인식은 능력과 의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하였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인식은 기존의 강대국과 주변국이 강대해지는 특정 국가를 강대국으로 인정하여 특정 국가의 강대국화에 순응하고 동의하는가에 달려있다.

2. 중국 내부 관점의 강대국화 조건

중국의 학자들은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중국의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여 문제와 해결책을 도출하였다. 중국 사회학자 허리궈(何礼果), 허친잉(何琴英), 웨이수민(魏樹民)은 세계 500년 역사의 강대국 궤적을 분석하여 중국의 강대국화 조건으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뛰어난 국가 리더십, 일류수준의 핵심 과학기술, 적정한 민주주의와 공평성, 사회의 장기적 안정을 제시하였다.

〈표 2〉중국 내부 관점의 강대국화 조건¹³⁾

구 분	세부내용
뛰어난 국가 리더십	① 군사능력 ② 정부 장악력 ③ 외교능력
일류 수준의 핵심 과학기술	① 문화 ② 교육 ③ 과학기술 ④ 인력자원 ⑤ 국내와 세계에 대한 경제활동 능력
적정한 민주주의와 공평성	① 민주주의 ② 법률제도 ③ 자유 ④ 공정성·공평성 ⑤ 사회복지 ⑥ 공공서비스
사회의 장기적 안정	내란, 침입 미발생 ⇨ 경제건설 활동 ⇨ 전념 여건 조성 ⇨ 외부로 굴기

가. 국가 리더십

중국은 국가지도자의 선견지명과 현명한 정책 결정이 한 나라가 강대해지는데 핵심 조건으로 꼽고 있다. 역사적 사례를 들어보면, 네덜란드·영국·미국의 국가지도자들은 자신의 국가가 강성한 시기에는 강한 지도자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프랑스·독일·일본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갖추고 있었지만, 국가지도자의 선견지명 부재와 실책으로 인해 강대국이 될 기회를 놓쳤다. 구소련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매우 빠르게 미국과 대등한 세계 일류의 강대국이 되었지만, 국가지도자가 현명하지 못하여 몰락하였다.

나. 핵심 과학기술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군사력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전제조건이었으나, 오늘날은 종합국력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강대국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이며, 시장을 지배하는 비결은 가장 핵심적이고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창조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과거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가장 먼저 원양 항해 기술과 총포 기술을 확보하고 가장 먼저 정복의 여정을 시작함으로써 세계 강대국이 되었다. 대영제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세계 제1의 공업국이

13) 허리귀, 『강대국의 길, 중국의 길 :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의 역사와 중국의 세계패권 전략』이재연 역(서울: 다른생각, 2017), pp. 300~306을 재구성

되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발전하였다. 중국은 패권국 미국이 핵심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의 우수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19세기 말 이후 오늘날에도 핵심 과학기술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 민주주의와 공정성

허리귀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관념이라고 강조하면서, 적절한 민주주의와 공정성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고위층 민주주의가 중간층과 기층의 민주주의보다 잘 이행되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은 민주주의 수준이 낮아서 중국의 이미지와 응집력,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은 공정성을 규범화하여 개혁개방의 성과를 인민이 누리는 방안 마련을 시급한 문제로 식별하고 있다. 시진핑은 제18차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차 집체 학습 연설에서 공평(公平)과 정의(正義)를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제도 개선과 체계 개발을 역설한 바 있다.

라. 사회적 안정

허리귀는 한 나라가 외부적으로 굴기(崛起)를 하는 것은 그 내부 역량의 외연(外延)이라고 주장하였다. 세계 역사상 영국, 미국 등 강대국들이 강력한 기세로 힘을 외부로 투사한 시기에는 커다란 국가적 내란이 없었고, 강력한 외적의 침입도 없었기에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이 아편전쟁부터 약 100년간 외세의 침략과 내란으로 오랫동안 허약하고 가난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사회가 불안정하면 국가는 반드시 쇠락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하였다.

3. 두 가지 관점의 비교분석

국제질서 관점의 강대국화 조건은 능력(Capabilities), 의지(Will), 인식(Perception)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중국 내부 관점의 강대국화 조건은 뛰어난 국가 리더십, 일류수준의 핵심 과학기술, 적절한 민주주의와 공정성,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두 가지 관점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가지 관점 모두 각 범주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면서 상호 촉진 시키고 있다. 둘째, 두 가지 관점의 조건

을 범주의 영역으로 재배치해서 연관성을 살펴보면, 중국 내부 관점의 네 가지 조건 모두가 국제질서 관점의 능력의 범주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관점의 차이점은 국제질서의 관점에서는 의지와 인식의 조건을 핵심조건으로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중국 내부의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핵심조건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내부의 관점에서 추론해 보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능력의 조건이 실현되면 이 두 가지 조건도 자연스럽게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지(Will)와 인식(Perception) 조건은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규범을 거부하고 있어서 중국이 능력이라는 첫 번째 강대국화 조건을 달성한 이후에 직면하게 될 장기적인 난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질서의 관점과 중국 내부의 관점에서 제시한 강대국화의 조건을 비교하여 상호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두 관점 모두 과거 강대국들의 흥망성쇠 역사를 기본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방향성에서는 상당한 공통점들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관점의 공통점으로 도출된 군사력, 경제력, 내부통제력, 대외환경에 대한 적응력, 연성권력 등 5개 핵심조건으로 중국을 평가하고 고찰함으로써, 중국의 패권화 가능성을 전망하겠다.

Ⅲ. 중국의 패권화 의도와 미국의 대응

1. 중국몽과 강대국 정체성의 발현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 이후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천명하였지만, 과거부터 강대국으로서의 부상을 국가목표로 지향하고 있었다. 장쩌민은 2002년 11월 제16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문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제시하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은 역사와 시대가 부여한 엄중한 사명임을 강조한 바 있다. 후진타오 또한 2007년 제17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사에서 중화민족의 부흥을 피력하였다.¹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후 중국은 강대국화의 열망을 숨겨오면서 국력 신장

14) 모준영, “중국이 해양을 통해 추구하는 강대국 상(像): 지역 강대국인가, 세계적 강대국인가,”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0권 10호(2017), p. 89.

에 박차를 가해왔다. 20세기 말까지 소강사회¹⁵⁾를 건설하고 2049년까지 대동사회의 건설을 열망하였다. 마오쩌둥 시대(1945~1976)에는 미국과 소련의 체제경쟁 사이에서 상황에 맞추어 파트너를 바꾸는 핑퐁식 외교정책을 통해 경제적·군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고, 덩샤오핑 시대(1978~1983)에는 도광양회(韜光養晦)¹⁶⁾를 핵심 외교정책으로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해 1984년 개혁·개방의 천명과 삼보주전략(三歩走戰略)¹⁷⁾을 제시하였다. 장쩌민 시대(1993~2003)에는 중국의 경제력과 국력의 급격한 성장으로 미국 및 국제사회가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중국위협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후진타오 시대(2003~2013)에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경제발전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 화평굴기(和平崛起)¹⁸⁾를 채택하였다. 후진타오 집권 2기(2007~2012)에는 유소작위(有所作爲)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과 동시에 군사·안보 분야의 영역 확장을 시도하였으나,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의심을 받게 되자 원래의 도광양회(韜光養晦)로 복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이어온 중국의 강대국 정체성은 시진핑 집권 이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은 국력의 신장에 맞게 적극적으로 국제문제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 발휘와 글로벌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숙원을 중국몽으로 계승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또한, 시진핑은 2017년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까지 첫 번째 100년 목표를 달성하고, 그 여세를 몰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일부터 두 번째 100년 목표를 향해 진군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하였다.¹⁹⁾

15) 경제발전, 정치 민주, 문화 번영, 사회 통합, 주거와 생활환경의 개선, 강력한 국력 등 경제, 정치,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의미한다.

16) 빛을 감추고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 즉, 어려운 시기에 칼날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17) 제1보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로 GDP가 2배가 되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제2보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로 또다시 GDP가 2배가 되는 소강(小康)에 도달하는 것이며, 제3보는 2049년까지 중진국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18) 냉정하게 관찰하고, 진영을 공고히 하며, 침착하게 대응하고,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며, 낮은 태도를 취하고, 절대 우두머리가 되지 말며, 어느 정도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의미이다.

19) 박기일, “중국의 중화사상과 중국몽의 연계성 연구,”『공군평론』제146호(2020), p. 72.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추진한 국가전략을 분석하면, 마오쩌둥은 새로 창건된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는 마련된 기반 위에 경제발전에 치중하였으며, 시진핑은 경제성장의 토대 위에 군사와 외교에 집중하여 강대국 지위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진핑이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공식 천명하면서 미국과 동등한 세계적 강대국 지위를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었다는 사실이다. 시진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는 자신감과 미국과의 상대적 국력의 격차 축소와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서구 중심적 국제질서의 구도가 약화되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신형대국관계를 제안하고,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넓다”라고 강조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유와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진핑의 이와 같은 행보는 과거 미국에 수세적이었던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입장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공세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⁰⁾

시진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개혁과 새로운 국제질서 구성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정계에서도 시진핑이 궁극적으로 중국 중심의 지역 및 세계 구도, 제도와 규범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²¹⁾ 시진핑은 중국몽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중국의 꿈은 반드시 중국의 길을 걸으며, 중국의 정신을 선양하고, 중국의 힘을 결집해 실현한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기존에 서구가 창안한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이 아닌 중국식 표준(Chinese Standard)으로 중국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²²⁾

2.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중국의 시진핑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을 통해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3년 태동한 일대일로 전략(One Belt, One Road Strateg

20) 서정경, 원동욱,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대국 외교와 미중 무역분쟁,” 『국가전략』 제 25권 제1호 통권 제87호(2019), p. 42.

21) 최강, “미국 우선주의 처 중국몽의 충돌,” 『미래한국』, 2019년 3월 28일

22) 송홍근, “전인갑 교수가 말하는 현대중국의 제국몽,” 『신동아』, 2018년 3월 1일

y)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에 이르는 범세계적 영역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함으로써 중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일대(一帶/One Belt)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육상으로 연결하는 계획으로 시안(西安)에서 시작하여 란저우(蘭州), 우루무치(烏魯木齊)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및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지나 이탈리아의 베니스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일로(一路/One Road)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동남부 지역인 푸젠성의 푸저우에서 시작하여 남부 연해 도시를 거쳐 마라카 해협,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와 이집트의 수에즈운하를 거쳐 지중해와 유럽에 이르는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을 도로와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로 연결하고,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지대를 조성함으로써, 경제지대 국가에 중국의 국내 사양산업을 이전시켜 중국의 산업구조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중국 중심의 국제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초래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중국 산업구조의 전환, 지역 균형발전 도모, 안정적인 에너지 수송로 확보, 경제 공간 확대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5통(通)²³⁾을 통해 관련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을 기점으로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를 연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외교·안보 차원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이다. 만일 일대일로 전략이 성공한다면, 중국은 경제적 위상뿐만 아니라 안보·군사적 위상에서도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으며, 중국 방식대로 세계질서를 재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군몽과 해양굴기를 선포하고 군사력 증강과 확장, 지구적 전력투사를 추진하고 있다.

3.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글로벌 세력균형 변화의 핵심 행위자로 주목하고 대중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개입정책을 추진하였고,

23) 5통(通): ① 정책구통(정책소통), ② 시설연통(인프라 연결), ③ 무역장통(무역소통), ④ 자금용통(자금교류), ⑤ 민심상통(인적교류)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맞섰으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 견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하고, 미 국방부도 2019년 6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IPS) 공표하여 인도-태평양을 미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표명하였다. 미국은 중국을 권위주의 국가로 평가하면서 중국이 군사력 증강, 공세적 군사 활동, 경제 착취 등으로 역내 국가들을 강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현재의 법과 규범, 질서 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2021년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며 미국의 지위 재건과 리더십 회복을 위해 과거보다 더욱 강력한 대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3월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국을 국제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국(Only competitor)으로 규정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을 지지하고, 동맹국과 협력국을 결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유럽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분쟁을 막기 위해 존재하듯 인도-태평양에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인도-태평양사령부에 가장 넓은 책임지역(Area Of Responsibility, AOR)을 부여하였고, 전략자산의 60% 이상을 증강 배치 등 중국의 패권화 전략인 일대일로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중국을 견제 봉쇄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중국을 지역 국가로 한정시키기 위해 포위전략을 유지하면서 패권 안정을 위해 일본 등 동맹국과 우방국과 협업하여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쿼드(Quad)와 미국·영국·호주의 오커스(AUKUS)를 중심으로 중국의 원해방위를 차단하고 군사적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올해 8월 19일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은 상호 군사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대만 방어 의지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패권 유지와 핵심이익 수호뿐만 아니라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역내 군사력을 확장하고, 역내 동맹국 및 우호국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중국에 대응하여 군사력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4. 미·중의 패권경쟁 확대 가능성

미국과 중국은 안보,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패권경쟁에 몰입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 가능성이 큰 분야는 남중국해 분쟁,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경쟁, 홍콩국가안보법, 신장위구르 인권탄압, 대만 이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남중국해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핵심이익이 충돌하는 양보할 수 없는 곳이다. 남중국해는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이중 말라카해협(Malacca Straits)을 통과하는 원유는 하루 천만 배럴 이상이다. 중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남중국해는 지역 패권화는 물론 세계 패권화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는 동남부 지역의 외침에 대비하여 전방 방어가 가능한 천혜 요충지이다.²⁴⁾ 또한, 말라카(Malacca), 바사(Bashi) 등 주요 해협은 일대일로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의 기점으로서 중국 해군이 대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남중국해는 아시아의 군사기지와 중동, 인도양을 연결하는 환승역의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남중국해는 미 7함대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를 왕래하는 전략적 해상로로 군사작전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1986년 미 해군이 선포한 세계 해양지역에서 반드시 통제해야 하는 16개의 전략적 요충지 중에 말라카해협, 순다해협, 마카사르해협이 남중국해 해역에 포함되어 있다. 남중국해 항로의 자유로운 통행은 미국의 군사력이 아시아지역으로 원활히 진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태평양 해상우세 장악과 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해로이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격차가 급속하게 축소되고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면서 양국 간의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1,300개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최대 25% 관세부과와 기술이전 제한을 담은 대통령각서에 서명하였다. 2019년 8월 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다.²⁵⁾ 또한, 미 상무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통제하는 무역확장법 제23

24) 변창구, “미·중 패권경쟁과 남중국해 분쟁: 실태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79호 (2016), p. 29.

25) 신현철, “美,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환율전쟁 본격화,” 『매일경제』, 2019년 8월 6일, <https://www.mk.co.kr/>

2조에 근거하여 수입 규제를 단행하고, 양국 간의 무역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관세장벽도 설치하였다.²⁶⁾ 중국 시진핑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대두, 자동차, 화공약품 등 106개 수입품을 대상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부과를 결정하는 등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단행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반대하고 일방적인 무역제재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통상전쟁에 강경한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경제 질서를 좌우할 첨단기술과 신산업분야의 기술패권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화웨이(Huawei) 수출규제, 틱톡(TikTok)/위챗(Wechat)의 미국 시장 퇴출 등 중국의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제재를 단행하고 있다.²⁷⁾ 미국은 중국의 천인(千人)계획 등 첨단기술 산업분야 인재 흡수 전략에 의해 2017년 기준으로 약 7천 명의 미국 연구원과 과학자들이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인재 흡수 전략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중국 유학생과 연구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등 인적교류 금지 법안을 마련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양국의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직접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세력 전이에 대해 양국 간의 경쟁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셋째, 미중 간의 갈등 전선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국가보안법’을 의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홍콩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 및 ‘홍콩자치법’에 즉각적으로 서명함으로써 홍콩 특별대우 박탈²⁸⁾과 홍콩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중국 기관과 인사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였다.²⁹⁾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국제법을 위반한 내정간섭으로 단정하고

26) 김관옥, “미중 무역전쟁 연구: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1집 1호(2018), pp. 70-72.

27) 손열,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한국은 어디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상정책 설계도 마련 필요” 『EAI 스페셜 리포트』 (2018년), p. 2.

28) 이세영, “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중국 보안법 통과에 보복,”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 (검색일자: 2022.8.1.)

29) 홍콩 여권소지자 미입국 특혜 중지, 미 수출관리규정(EAR) 상의 홍콩 허가예외 중지, 미국-홍콩간의 범죄인 인도협정 폐기, 홍콩자 치권 훼손 기관과 개인에 대한 조사와 미국내 금융거래와 자산취득 금지

홍콩 문제에 관련된 미국 인사 11명에 대한 중국입국 제한과 중국 내 자산동결을 단행하였다. 최근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장위구르 인권탄압문제³⁰⁾에 대해 미국은 위구르 인권정책법안을 통해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인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하였다. 현재 중국은 위구르인 집단 수용소 운영, 강제노동을 통한 면화와 인견의 생산, 공산당원의 성폭행과 고문 자행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제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항의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향후 이 문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의 고립을 가속화 할 수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 중시 외교전략에 따라 신장 지역을 둘러싼 문제는 미중 갈등의 새로운 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대만 이슈는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영역이다. 대만의 분리독립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과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반대하는 대만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 3월 ‘대만동맹 국제보호강화법’을 유효화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만침공방지법’, ‘2020 대만관계강화법’ 등 중국 압박전략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주요 무기 수출도 확대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이 제기한 ‘대만의 국제 외교 활동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親 대만정책을 대중 견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강대국화를 꿈꾸고 있는 중국이 기존의 질서를 수용할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현상유지론)과 패권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 필연적으로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할 것이라는 비관적 시각(중국위협론)으로 양분되고 있다.³¹⁾ 저명한 국제정치 학자들은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힘의 확장과 기존 국제 질서의 수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기존 패권국이 새로운 패권적 도전을 받는 경우 평화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물려준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자연스러운 패권 국가 교체는 동일한 이념과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다른 체제와 이념을 가진 중국에게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내어줄 가능성은 예

30) 류지영, “우위 지키려는 美, 발판 포기 않는 中...‘패권 전쟁터’된 신장,” 『서울신문』, 2021년 4월 6일, <https://www.seoul.co.kr/>

31) 남궁영, 양일국, “중국의 부상을 보는 두 시각: 현상유지국인가, 도전국인가?,” 『21세기정치학회보』 제22집 2호(2012), p. 268.

측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을 넘어선 세계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야심과 패권화 의도가 내포된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세적인 행보를 밟고 있다. 결국, 막강해진 중국은 불만스러운 국가가 될 것이며, 더 호전적이고 과격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투자 현상과 미국과의 분쟁은 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IV. 중국의 패권화에 대한 평가

1. 군사력에 대한 평가

중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세계 일류군대 창설을 표방하면서 2035년까지 군대 현대화의 기반을 구축하여 2050년 세계 일류군대를 완성하는 강군 육성목표를 구체화하였다.³²⁾ 중국은 군사력평가기관 GFP가 발표한 2023년 군사력 순위에서 1위 미국, 2위 러시아에 이어 3위로 평가되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GDP와 국방비 지출 면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0년 미국의 11% 수준에서 2019년 미국의 26%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21년 4월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서 발표한 2021년 세계 국방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의 39% 수준으로 중국을 포함한 상위 8개국의 국방비 총액보다 많다. 중국은 전략핵잠수함,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사이버·우주전력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략핵잠수함은 2010년 3척에서 2014년 4척으로 증강하였고, 항공모함은 2018년 1척에서 2020년 2척, 전략폭격기는 2020년 176대로 증강하고 있다.

지구적 투사능력에서 미국은 중앙, 유럽, 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등 6개 지역사령부를 통해 태평양과 대서양을 망라하는 글로벌 차원의 군

32) 이정남,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강대국 중국의 21세기 미래 비전과 전략 제시,” 『안보현안분석』 Vol. 136(2017), p. 4.

사력을 운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태평양지역에 국한된 군사력 투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해군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군사역량으로 해군력을 꼽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해양굴기(海洋掘起)에 주력하기 어렵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많은 인접국과 약 2만 2천 km의 국경선(Shared Border)를 두고 있어서 많은 국방자원이 필요하다.³³⁾ 미국이 동맹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 군사강국과 국경분쟁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 수준의 육군력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2019년부터 국방예산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단기간 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군사강국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질적으로도 미국의 군사력에 도달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경제력에 대한 평가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약 30년간 연평균 10%대의 고속 성장을 이룩하여, 2011년 일본의 GDP를 추월하고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중국경제 성장률은 2010년 10.4%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최저치인 6.6%를 기록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이 2019년 6.1%, 2020년 2.3%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중국경제도 저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³⁴⁾ 반면에 2020년 12월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³⁵⁾와 일본경제연구센터(JCER)³⁶⁾ 등 선진국의 경제 싱크탱크는 중국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서 2028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

33) 중국은 러시아, 인도, 북한 등 14개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국가들까지 포함하면 19개 국가와 인접해 있다.

34) 차대운, “중국 2020년 경제성적 18일 발표..‘코로나 속 주요국 유일 성장,’” 『연합뉴스』, 2021년 1월 17일, <https://www.yna.co.kr/>

35) 이택현, “중국 미국 경제 추월 5년 앞당겨졌다…英연구소 분석,” 『국민일보』, 2020년 12월 26일, <http://news.kmib.co.kr/>

36) 김기혁, “中GDP, 2028년 美넘어서..코로나가 추월시기 8년 앞당긴다,” 『서울경제』, 2020년 12월 11일, <https://www.sedaily.com/>

제 대국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상반된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외형적으로 미국을 추월하느냐보다는 경제 체질의 성장이 더욱 중요하다. 2021년 기준 1인당 GDP에서 중국은 미국의 1/6 수준이고, 미국의 1인당 실소득은 중국의 8.4배, 소비지출은 15.2배이다. 추가하여 미국의 노동생산성도 중국의 12배로 경제 체질에서 상당한 수준차를 보이고 있다.³⁷⁾ 중국은 이러한 경제성장률 감소 원인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뉴노멀(New Normal)로 규정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일대일로 전략'과 '핵심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를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³⁸⁾

중국은 미국의 핵심경쟁력으로 핵심 과학기술을 들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병행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 육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사진핑은 2013년 9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9차 집단학습에서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 실행'을 강조하고 국가 전반의 혁신개혁에 매진하고 있다.³⁹⁾ 2020년 세계 128개 국가의 혁신 요소를 비교 평가한 세계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2021)에서 미국은 3위, 중국은 12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6년 미국 4위, 중국 25위와 비교할 때 중국의 혁신개혁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 중국의 연구개발비는 약 2,600억 달러로 미국의 5,400억 달러 대비 약 절반에 불과하였다. 과학기술 투자비 증가율은 2011년과 비교하여 미국은 4,152억 달러에서 약 30%가 증가한 반면, 중국은 1,344억 달러에서 약 2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1.84%로부터 2018년 2.15%로 상당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미국 대비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으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의 부흥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⁴⁰⁾

37) 구정은, “중국 경제, 8년 뒤 미국 추월... 문제는 ‘내부 격차’,” 『경향신문』, 2020년 8월 25일, <https://www.khan.co.kr/>

38) 허홍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전략: 발전과 한계,” 『한국콘텐츠학 회논문지』 제19권 제7호(2019), p. 336.

39) 먼홍화, 푸샤오위, 『세계, 중국의 길을 묻다: 전 세계 싱크탱크가 본 중국』(서울: 성균관대학교, 2014), p. 37.

4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https://www.kistep.re.kr> (검색일: 2023.8.1.)

〈표 3〉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비중⁴¹⁾

구 분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영국
연구개발비 (억\$)	2011년	4,151.9	1,344.4	492.2	1,998.0	431.0
	2018년	5,432.5	2,604.9	779.0	1,561.3	438.9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011년	2.77	1.84	4.36	3.39	1.77
	2018년	2.79	2.15	4.81	3.21	1.66

중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성대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첫째, 연구개발 인력 배출에서 미국 과학재단(NSF)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가별 현황에서 중국이 1위로 2위 인도와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고급 연구개발인력 획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우수한 연구인력 배출은 많은 연구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별 SCI에서 중국은 2019년 세계 총 논문의 24.4%를 점유하여, 처음으로 논문 수에서 미국을 추월하였다. 또한, 질적 평가로 논문의 피인용 횟수도 2019년부터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중국의 연구성과는 특허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2015년 중국의 특허출원은 미국의 52% 수준에 그쳤으나 2019년부터는 미국을 추월하였으며 2020년 16.1%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여 2019년부터 고급 연구인력 배출, 과학기술 논문발표, 특허 등에서 미국을 추월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경쟁력과 기술 선도 등 질적 핵심 과학기술에서 미국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미국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267명으로 2위 영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역대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3명에 불과하며 중국의 집중투자 이후 배출한 수상자는 1명뿐이다.

4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통계브리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2013년과 2019년 보고서 내용을 재구성

〈표 4〉 국가별 노벨과학상 수상자 현황⁴²⁾

순위	국가명	합계(명)	물리학상(명)	화학상(명)	생리학상(명)
1	미국	267	94	69	104
2	영국	88	26	31	31
3	독일	70	24	29	17
4	프랑스	34	14	9	11
5	일본	23	11	7	5
:	:	:	:	:	:
19	중국	3	2	-	1
계		626	219	185	222

미국이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단기적 성과 위주의 노력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부문에 있어 세계를 선도할만한 핵심기술을 창출하지 못하고, 서구의 기술을 습득하거나 개량하는 수준으로⁴³⁾ 질적으로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내부통제력에 대한 평가

강대국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지도자들은 국내 정책을 결정할 때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왔다. 체제가 불안정한 국가는 리더십 발휘를 통해 대내적 안정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내부통제력의 핵심으로 정부 장악력, 적정한 민주주의와 공평성, 사회의 장기적 안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먼저, 정부 장악력은 중국 특유의 강점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통해 국가 권력을

42) 한국연구재단(NRF) 『노벨과학상 종합분석 보고서: 수상 현황과 트렌드를 중심으로』 (2019년 10월)를 참조하여 작성(<https://www.nrf.re.kr/>)

43) 배영자, “미중 패권 경쟁과 과학 기술혁신” 『국제지역연구』25권 4호(201), p. 33.

행사하는 집단지도와 일당 집권 체제는 권력의 집중과 책임이 명확하여 효율성이 높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은 중국의 정치적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을 거치면서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누적된 불균형과 부조화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는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의 동부와 남부지역은 수출입에 유리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자원과 노동력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서부와 중부지역은 낙후가 지속되고 있어서 사회적 안정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화이사상(華夷思想)⁴⁴⁾에 입각한 소수민족 와해정책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이 분리독립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서 국가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대내적 안정은 각종 사회 지표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3년 언론자유지수에서 중국은 세계 180개국 중에서 179위로 최하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2년 기준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⁴⁵⁾에서 중국은 세계 180개국 중에서 65위, 2023년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 FSI)⁴⁶⁾는 178개 대상국 가운데 101위로 경고군(Warning),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 발표한 세계행복지수에서 중국은 137개 대상국 중에서 64위로 평가되었다.⁴⁷⁾ 시진핑이 반부패 개혁과 척결을 천명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국가청렴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 공신력이 있는 평가기관에서 발표한 각종 지표는 중국 내부가 건강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고 미국과 비교해도 많은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특성상 정부의 장악력 부분은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빈부격차, 부정부패, 독재와 중국식 민주주의의 한계 등은 국가발전의 장애로 노정될 수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내부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44)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자신들이 최고이며 증원 밖의 모든 나라는 우매하고 몽매한 야만인이라는 사상이다.

45)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2> (검색일: 2023.8.16.)

46) FRAGILE STATES INDEX ANNUAL REPORT 2023, <https://fragilestatesindex.org>

47) SDSN, World Happiness Report 2023, (검색일: 2023.8.16.)

https://happiness-report.s3.amazonaws.com/2023/WHR+23_Ch0.pdf

성공적인 외연으로 이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권국 미국에 대한 도전도
녹록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대외환경에 대한 적응력에 대한 평가

중국 외교와 안보의 최우선 임무는 경제·사회건설에 순조로운 전개를 보장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중국의 부상을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비우호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강대국 정체성에
기반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에 노력해왔
다.⁴⁸⁾ 중국은 과거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하면서 중국의 경제발전에
우호적인 국제 환경조성에 매진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
서에 대한 불만과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 대항하여 미국과의 세력균형과 반
중국 봉쇄망을 약화시키기 위해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⁴⁹⁾를 연계한
중국식 동맹⁵⁰⁾ 확장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⁵¹⁾

중국은 다자외교나 다자안보협력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규범 제약에서 벗어
나기 위해 강대국보다는 상대적 약소국, 중견국, 신흥경제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⁵²⁾ 중국은 급부상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신흥경제국인 BRIC
S⁵³⁾ 국가들과 함께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이 설계하고 추진한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대응하는 브릭스 新 개발은행(BRICS NEW Developme

48) 중국은 18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책임대국'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고, 19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새로운 시대 당의 역사적 임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며,
이를 위해 공산당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면서 대외적으로 '책임대국'의 역할
을 발휘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과 건설에 참여한다."고 강조하였다.

49)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은 '신형국제관계'와 함께 다양한 국제사회의 현안들에 대해 책
임대국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중국의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
인류공동의 문제로 정의하는 전략적 개념이다.

50) 국제질서에서 '양극체제'로의 평화적인 세력 전이를 희망하는 중국은 미국과의 국력
차이를 고려, 정면 도전보다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반자 관계(Partnership)'라는
타국과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유사 동맹 관계를 추구하는 다자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

51) 이기현, "중국의 불만족 증대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세력전이이론에 대한 재탐색"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8집 제4호(2020), p. 24.

52) 이신화, "유엔 다자주의 틀에서의 강대국 정치: 안보리 결의안과 미중 안보경쟁" 『신
흥 무대의 미중 경쟁: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 (경기: 한울엠플러스, 2018), p. 247.

53) 브릭스(BRICS)는 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를 통칭하는 용어로
이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nt Bank, NDB)을 설립하고, 미·일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에 대응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⁵⁴⁾을 출범시켰다. 또한, 미국 주도의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에 대항하여 2020년 11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⁵⁵⁾에 최종 서명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동력으로 AIIB, RCEP 등 경제적 다자협력기구를 활용하고 있고 대외직접투자(Outbound Direct Investment, ODI)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해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은 2016년 중동 순방 간 일대일로 참여를 조건으로 86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14개의 협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자국 공급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최대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해당 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⁵⁶⁾ AIIB, NDB, RCEP와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의도대로 진전될 경우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에 중요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 시도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여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중국은 패권화 실현을 위해 역사적으로 역내 국가들에 각인된 중국위협론 불식과 동아시아 지역의 미국 동맹체제 약화, 국제적 고립 회피 등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ASEAN+3 등 지역 다자안보대화를

54) AIIB는 아시아지역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여 공동의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설립되었고 미국은 중국의 행보를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 동맹국들이 가입하지 않도록 설득하였으나, 한국, 인도, 독일, 영국 등 5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55) 오수현, 라미령, 연원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3 No.36 (2020), p. 3.

56) 하영선, 김상배, 『신흥 무대의 미중 경쟁』(경기: 한울엠플러스, 2018), pp. 364~365.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⁵⁷⁾ 이와 같은 중국의 시도는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들 대부분이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 또는 우방국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대만 등지에서 핵심이익 수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일본과도 동중국해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서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은 19차 당대회 이후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외교전략으로 중국의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내세우고 있으나, 중국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인해 주변국들과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5. 연성권력에 대한 평가

조지프 나이(Joseph S. Nye)는 국력을 경성권력(Hard Power)과 연성권력(Soft Power)으로 구분하였다. 경성권력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활용한 회유와 위협에 의존하며, 연성권력은 무력행사나 경제제재와 같은 위협 없이 자국의 목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타국을 설득하는 영향력을 중요시한다. 경성권력은 명령하는 힘이며 연성권력은 자발적으로 동조하게 하는 힘으로 정의될 수 있다.⁵⁸⁾

중국은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를 초래한 미국의 평화적 체제 전복(Peaceful Evolution)을 회피하기 위해 경제력, 군사력 등 경성권력과 함께 화평굴기에 기반한 중국의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등 연성권력 강화에 매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강대해지는 국력을 앞세워 과거 규범 수용자에서 규범 창출자로 중국의 정체성을 급격하게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식시키고 있다. 중국은 상황이 여의치 못할 경우 소프트 파워보다는 하드파워에 편승하는 경향이 많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문화·동북공정 등으로 주변국들과 각을 세워왔고, 신장위구르 등 소수민족 인권문제와 홍콩 민주화운동 탄압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태도는 서구 중심

57) 먼홍화, 『세계, 중국의 길을 묻다: 전 세계 싱크탱크가 본 중국』 성균중국연구소 역(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p. 238.

58) Joseph S. Nye, 『소프트 파워』 홍수원 역(서울: 세종연구원, 2004), p. 31.

의 국제질서 인식 기반과 철학적 가치의 변환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질서와 소프트파워가 공고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강대국의 정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긍정적 인식과 자발적 수용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역내 패권화를 실현하기 위해 ASEAN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느껴왔던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면서 평화적인 협력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의 유력 평가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1년 국가브랜드 평가에서 중국의 브랜드가치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과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내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Soft Power⁵⁹⁾의 발표에 따르면 30개국 중에서 중국은 여전히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다. 'Soft Power 30'은 중국의 문화, 교육 및 기업 분야의 성장을 강점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외교정책과 인권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계속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창출하는 연성권력은 인권, 자유 등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국가이익에 편중되어 있어서 국제사회와 주변국가에 반감주고 있으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단기간에 소프트파워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이 강대해지는 과정에서도 연성권력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6. 종합평가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기 위한 강대국화 전략과 패권화 의도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행보를 걷고 있으나 당분간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군사력 측면에서 도전국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매년 증액하고 있으나 양적·질적 군사력에서 패권국 미국보다 현저하게 뒤처져 있다. 또한, 중국은 '해양강국'과 '강군몽'을 천명하면서 해군력 강화와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으나 미국처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지구적

59) Soft Power 30은 2015년부터 매년 정부·대외관계·기업·교육·디지털·문화 등 총 6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25개국 1만 2500명을 대상으로 국제 여론조사를 시행하여 30개국의 Soft Power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투사능력이 없어서 단기간 내 미국을 위협할 수준의 군사력 확보는 힘들 것이다.

둘째, 경제력 측면에서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보여준 경제성장은 경이로운 수준이나 질적인 부분에서 중국의 2020년 1인당 GDP는 미국의 1/6 수준으로 미국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한, 중국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나 미국처럼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만한 핵심기술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내부통제력 측면에서 중국은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 소수민족과 충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언론자유지수 177위, 부패인식지수 80위, 취약국가지수 92위, 세계행복지수는 94위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중국 내부가 건강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넷째, 외교·안보 등 대외환경에 대한 적응력 측면에서 중국은 급부상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를 연계한 중국식 동맹 확장에 주력하여 신개발은행(N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수의 다자협력 기구들을 출범시키고, 대외직접투자(ODI)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중국식 국제협력체계는 시작 단계로 단기간에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성과 여부도 불확실하다. 또한, 중국은 주변국 외교에서 중국의 핵심이익, 주권, 영유권 등의 수호를 위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아서 주변국의 안보 불안 증대와 외교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정당성이 없는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전개하고 있어서 향후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성권력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취약한 상태이다. 중국은 패권 실현을 위해 중국위협론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한다. 그러나 중국은 규범의 창출자로서 강대국의 정체성을 연성권력으로 발전시키지 못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Soft Power 30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최하위이며 중국에 대한 호감도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채무외교, 부채합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과 남중국해 분쟁

에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훼손시키는 행위, 권위주의적 중화사상과 공격적 민족주의 표출, 소수민족 인권 탄압 등은 반중감정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감을 확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전국 중국은 패권국 미국과의 상대적 국력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하드파워 위주의 양적 증가에만 치중하여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외교력과 소프트파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높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에 맞서 세계 정치경제와 안보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을 따라가야 하며,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개혁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성 의지를 표방하고 중국몽(中國夢)을 통해 패권화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은 확고한 세계 유일의 패권국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의 리더이다. 현재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강대국화와 패권화 노력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역사적으로 패권국이 새로운 패권 도전국에게 전쟁 등 대가를 치르지 않고 패권국 지위를 양보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중 패권 경쟁의 서막을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패권국 미국은 자신의 쇠퇴에 대해 위기감과 두려움을 부정하면서 도전국 중국의 부상에 압박과 제동을 가하고 있다. 향후 미국은 더욱 적극적인 견제와 봉쇄정책을 추구할 것이고 중국은 역내에서 자신의 핵심이익 수호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에서는 강대국으로 변모해가는 중국이 과연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5개의 강대국화의 핵심조건 도출하여 분석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중국은 미국과의 국력 차이를 상당한 속도로 좁혀가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과 공고한 지위에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주변국은 여전히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 구도 속에서 강대국화를 실행하고 패권화를 실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중국은 패권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주변국의 동의와 동조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미국에 필적할만한 양적 능력뿐만 아니라 질적 능력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중국이 계획대로 경제력으로 미국을 능가하더라도 미국 수준의 군사력, 대내통제력, 외교력, 연성 권력 등은 단기간 내 구축될 수 없어서 중국의 패권화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패권화는 불가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안보적 이익과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지속 유지되는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전략적 선명성(Strategic Clarity)에 따라 분명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견국 위상에 맞는 군사력을 건설하여 독자적 국가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억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 보호,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증진, 동아시아의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은 동아시아 안보의 린치핀(Linchpin)⁶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러시아, 일본, 중국과 같은 패권적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대국들의 전쟁터였다. 미국과 중국은 역내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동맹국과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과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에 앞서 국가이익 차원에서 한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Plus)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미 의회도 한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지하고 있다.

셋째,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2022년 한국의 수출 비중은 중국이 23.4% 1위, 미국이 15.4%로 2위이다. 중견국 외교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경제적 협력을 통한

60) Linchpin은 마차나 수레,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으로 외교적으로 '꼭 필요한 동반자'를 의미한다.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대상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이익공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분산시켜 2016년 사드(THAAD) 문제로 중국에 당했던 곤욕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증강된 군사력과 다변화된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관성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관리해나가야 한다.

중국의 패권국 미국에 대한 도전은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략적 선명성을 바탕으로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위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논문투고일 : 2023.08.24]

[논문심사일 : 2023.08.30]

[논문수정일 : 2023.09.10]

[게재확정일 : 2023.09.11]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부. 『202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0년 12월.
- 먼홍화, 푸샤오위, 『세계, 중국의 길을 묻다: 전 세계 싱크탱크가 본 중국』 성균중국연구소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2014.
- 이신화, “유엔 다자주의 틀에서의 강대국 정치: 안보리 결의안과 미중 안보경쟁” 『신흥 무대의 미중 경쟁: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 경기: 한울엠플러스, 2018.
- 정재호. 『중국의 강대국화: 비교 및 국제정치학적 접근』. 서울: 길, 2006.
- 하영선, 김상배. 『신흥 무대의 미중 경쟁: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 경기: 한울, 2018.
- 허리귀. 『강대국의 길, 중국의 길: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의 역사와 중국의 세계 패권 전략』 이재연 역. 서울: 다른생각, 2017.
- John J. Mearsheimer.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이춘근 역. 서울: 김앤김북스, 2017.
- Joseph S. Nye. 『소프트 파워』홍수원 역. 서울: 세종연구원, 2004.

2. 학술지

- 김관옥. “미중 무역전쟁 연구: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1집 제1호(2018), pp. 70-72.
- 남궁영, 양일국. “중국의 부상을 보는 두 시각: 현상유지국인가, 도전국인가? 미·중 국제구조의 현재와 미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2집 제2호(2012), pp. 267-297.
- 남궁영, 양일국. “국제정치 구조와 극(polarity) 체제: 변화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19권 제3호 통권72집(2014), pp. 153-178.
- 모준영. “중국이 해양을 통해 추구하는 강대국 상(像): 지역 강대국인가, 세계적 강대국인가.”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0권 제10호(2017), p. 82-115.
- 박기일. “중국의 중화사상과 중국몽의 연계성 연구.” 『공군평론』 제146호(2020), p. 55-92.

- 박상연. “강대국 경쟁의 재부상과 미국의 군사 전략 패러다임 전환: 미국의 군사부문 혁신이 억제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략연구』통권 제77호(209), pp. 57-105.
- 반길주. “미중 패권전쟁의 충분조건 분석: 결정론적 구조주의 한계 보완을 위한 행위적 촉발요인 추적.” 『국제정치논총』제60집 제2호(2020), pp. 7-51.
- 배영자. “미중 패권 경쟁과 과학기술혁신” 『국제지역연구』제25권 제4호(2016). p. 31-59.
- 변창구. “미·중 패권경쟁과 남중국해 분쟁: 실패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Vol.176 No.2(2016), p. 27-46.
- 서정경. 원동욱,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대국 외교(大國外交)와 미중 무역분쟁.” 『국가전략』 제25권 1호 통권 제87호(2019), pp. 33-61
- 손열.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한국은 어디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상정책 설계도 마련 필요.” 『EAI 스페셜 리포트』 (2018년), p. 2.
- 오수현, 라미령, 연원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세계경제 포커스 2020』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3 No.36(2020).
- 이기현. “중국의 불만족 증대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세력전이 이론에 대한 재탐색.” 『세계지역연구총론』제38집 제4호(2020), pp. 23-47.
- 이정남. “중국이 구상하는 세계질서 상(像): 중국내 국제정치학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논총』 제57권 제4호(2017), pp. 121-161.
- 유동원. “중국의 강대국 역할: 형성, 특징과 영향요인.” 『중국학연구』 제84집 (2018), pp. 157-183.
- 유희복. “신흥 강대국 중국의 국제질서 인식과 실천.” 『아태연구』제24권 제3호(2017), pp. 137-174.
- 허홍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추진과 중국경제 위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19권 제11호(2019), pp. 297-313.

3. 기타

- 김기혁. “中GDP, 2028년 美넘어서...코로나가 추월시기 8년 앞당긴다.” 『서울

경제』, 2020년12월 11일, <https://www.sedaily.com/>

구정은. “중국 경제, 8년 뒤 미국 추월..문제는 내부 격차.”『경향신문』, 2020년 8월 25일, <https://www.khan.co.kr/>

류지영. “우위 지키려는 美, 발판 포기 않는 中...‘패권 전쟁터’된 신장.”『서울신문』, 2021년 4월 6일, <https://www.seoul.co.kr/>

신현철. “美,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환율전쟁 본격화.”『매일경제』, 2019년 8월 6일, <https://www.mk.co.kr/>

송홍근. “전인갑 교수가 말하는 현대중국의 제국몽.”『신동아』, 2018년 3월

이세영. “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중국 보안법 통과에 보복.”『조선일보』, 2022년 8월 1일, <https://www.chosun.com/>

이택현. “중국 미국 경제 추월 5년 앞당겨졌다...英연구소 분석.”『국민일보』, 2020년 12월 26일, <http://news.kmib.co.kr/>

차대운. “중국 2020년 경제성적 18일 발표..‘코로나 속 주요국 유일 성장’.”『연합뉴스』, 2021년 1월 17일, <https://www.yna.co.kr/>

최강. “미국 우선주의 對 중국몽의 충돌.”『미래한국』, 2019년 3월 28,

란코프. “소련 붕괴의 원인.”『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0월 23일.

하지나. “한국 부패인식지수 59점 ‘역대 최고’.....9년만에 30위권 진입.”『이데일리』, 2022년 6월 1일. <https://www.edaily.co.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https://www.kistep.re.kr>.

한국연구재단(NRF)『노벨과학상 종합분석 보고서 : 수상 현황과 트렌드를 중심으로』, <https://www.nrf.re.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통계브리프. 2021년 한국의 과학기술 논문 발표 및 인용 현황. <https://www.kistep.re.kr>.

특허청. 국가별 특허국제출원(PCT) 현황. <https://www.kipo.go.kr/>.

RSF(국경없는기자회). 2023년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보고서. <https://rsf.org/en/ranking/2023>

SDSN(UN산하기구). World Happiness Report 2022, <https://www.sdsn-mediterranean.unisi.it/>.

The Soft Power 30, <https://softpower30.com/>.

Abstract

An Analytical Assessment of China's Prospects for Hegemony

Park, SangJung Ph.D.

Professo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Jang, Mi-wha

Public Servant Class 5, ROK Air Force Headquarter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s clearly expressing the intention to gain recog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ajor power on par with the United States (U.S) through the Chinese Dream. Thr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e has declared the dreams of a strong military and maritime expansion, aiming to enhance China's maritime military capabilities and build a robust economic foundation, driv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centered around China.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fulfillment of the five key conditions for China's rise as a major power and forecast the possibility of future hegemony. Firstly, from a military perspective, China ranks as the world's third-largest military power and is dedicated to strengthening and modernizing its naval capabilities through its pursuit of "maritime power" and the "strong military dream." However, securing global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akin to the U.S. in the short term would be challenging. Secondly, in terms of economic power, China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through its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 up. Nevertheless, as of 2020, China's per capita GDP stands at about

one-sixth of the U.S.', and it has not yet developed key cutting-edge technologies in fields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o lead the world.

Thirdly, from the perspective of domestic control, China faces a multitude of issues to address, including regional disparities in wealth, conflicts with ethnic minorities, and other challenges stemming from imbalances. Furthermore, China's global rankings reveal internal vulnerabilities, as it stands at the lowest tiers in various indices: press freedom (177th), corruption perception (80th), fragile states index (92nd), and world happiness index (94th). Fourthly, in terms of adaptability to the external environment, China has initiated several mult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s such as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It seeks to expand its influence through Outward Direct Investment (ODI)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owever, achieving results substantial enough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in the short term is challenging, and there is a significant likelihood of worsening strategic relations with the U.S. as China's influence grows. Lastly, in terms of soft power, China's failure to develop its identity as a major power through normative influence is raising concerns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result, while China is indeed narrowing the power gap with the U.S. this has predominantly been achieved through a quantitative increase in hard power. Consequently, China's influence in diplomacy and soft power on the international stage remains limited. Moreover, China faces difficulties acquiring the capacity to lead the global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order in the short term against the U.S. interests and its Indo-Pacific strategy. Therefore, even in the future, China will need to continue

following the lead of the U.S. and attaining the level of capability required to pose a significant threat to the U.S. will demand substantial effort and time. Therefore, considering national interests and security, Republic of Korea (ROK) should develop its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China based on strategic clarity.

Key words : The Korean Veterans Association, Identity, National security, Veterans' organizations, Security activities

MZ세대 장병 중복세력 인식 및 대적관 교육 방안

- 공군용사를 중심으로 -

손 창 현 *

- I. 서론
 - II. 본론
 - III. 결론 및 제언
-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 박사과정

논문요약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현재 대학원 북한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자가 2017년 공군장교(대위)로 근무하던 당시, 소속 부대 기지방호전대 예하 용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복세력과 관련한 제반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들에 대한 중복세력 실체인식 교육방안을 절차 및 단계별로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교육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국가 안보관 변화를 확인 하는 데 있다.

중복세력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공군용사들은 중복세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의 필요성 또한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복세력에 대한 인식은 대 다수(90.1%)가 안보에 해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유로는 남한 내 남-남 갈등 조장(50%)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또한 중복세력 교육요구 분석결과, 군내에서의 중복세력 교육에 대한 만족도(satisfaction)는 대부분의 용사들이 보통 이하의 불만족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강의내용과 학습교재의 부실, 교관의 강의능력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중복세력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한 교육과정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또한 주의 깊게 살펴 본 결과는 바로 중복세력 교육 필요성에 대한 답변인데 응답자 중 중복세력 교육이 필요 없다고 답한 용사는 단 한명도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 내 불필요한 남-남 갈등, 특히 안보문제에 관한 국론 분열에 중복세력이 관여한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도출이 불가능한 결론일 것이다. 이처럼 공군용사들이 중복세력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 중복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한 분석결과,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따른 세부 교육내용(contents)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시해야 할 교육내용은 중복세력의 의도이며, 중복세력의 식별방법과 중복세력 활동현황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배우고 싶은 교육내용은 중복세력 식별방법, 중복세력 활동현황, 중복세력의 의도 순 이었다. 가장 중시해야 할 교육내용과 가장 배우고 싶은 교육내용은 서로 상이했는데 이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교육내용과 개인적 관심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며, 두 가지 의견을 적절히 절충하여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중복세력, 공군용사, 교육방안, 남남갈등, 국가안보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종북세력들은 북한의 3대 혁명 역량강화의 주 수단으로써 남한 내 반미 여론을 조성하고 주요 국가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반기를 드는 등의 방법으로 반국가 여론을 형성하여 국가 정체성 및 기반을 통째로 흔들려 하고 있다. 이들은 선의의 목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용어혼란과 선전선동을 통해 친북·반미시위에 참여시키려는가 하면 평화적 집회를 공격한 폭력시위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특히 ‘반미’, ‘자주’, ‘평화’라는 세 가지 구호를 내세워 남-남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통해 우리의 국방력과 국력을 약화시킨 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종북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과거 자유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의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경제력, 군사력도 아닌 월맹 간첩 5만 명이었다. 베트남 사례에 비추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정권과 이들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은 추호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선진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을 후손들을 위해 굳건히 지켜나가고, 보다 발전된 선진 최 일류국가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투철하고 하나 된 안보 의식으로 결집해야하고 그 중심에 우리 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7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군인)>에 의하면 국방부/합참 및 각 군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간부 64%에 비해 용사 41.9%로 병사들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며, 남북 분단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서도 남북분단의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고 응답한 용사들은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47.6%에 불과 했다. 또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병사의 비율이 간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MZ세대 용사들이 언론의 보도와 오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군내에서 그들에 대한 정신교육 시 활용되는 현 종북세력에 대한 교육방법 또는 프로그램 등 이 적절치 못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강한 대적관 교육이야말로 곧 최고의 군사대비인바, 본 논문에서는

신세대 용사들의 중복세력 인식도 교육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복세력 실제 인식 교육방안을 도출하였다.

2. 연구 목적 및 문제

가.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공군 소속 MZ세대 용사들을 대상으로 중복세력의 실제에 대한 인식도 분석을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다 합리적인 중복세력 실제 인식 교육방안을 절차 및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수립하는데 있다.

나. 연구 문제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군 소속 MZ세대 용사들의 중복세력 실제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둘째, 그들이 원하는 중복세력 실제에 대한 교육요구(needs)는 무엇이며 필요성은 어떠한가?

셋째, 그들에 대한 중복세력 실제에 대한 합리적 교육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II. 본 론

1. 이론적 배경

가. 중복세력 개관

1) 중복세력의 실제

가) 從北세력은 누구인가?

“從北세력”이란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이른바 ‘주체 사회주의’ 노선을 전폭적으로 신봉·추종하는 세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從北세력은 북한의 주체사상, 先軍사상, 사회주의 건설노선, 강성대국 노선, 對南혁명노선을 신봉하면서 대한민국 憲政체제를 파괴·전복하

려는 투쟁을 국내/외에서 집요하게 수행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이는 맑스·레닌주의 노선을 수용하는 좌파세력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으로써 ‘從北’은 소위 ‘左派’ 내부에서 노선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는데, 북한을 추종·옹호하는 세력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용어이다.

2) 從北세력 현황

가) 從北세력 규모

종북세력의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다수 종북세력은 스스로 종북세력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고, 대체로 좌경세력과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나 개념적으로는 좌익세력과 좌경을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종북세력들은 크게 핵심(核心)세력, 동조(同調)세력, 부동(不動)세력 등 세가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핵심(核心)세력은 주체사상이나 맑스·레닌주의로 무장된 전위(前衛)세력으로 이들은 각 좌파조직의 주도세력(간부급)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불법 집회나 시위 등을 배후에서 계획하고 조종한다.

동조(同調)세력은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수준에 있는 자들로 공개조직의 간부급이나 좌파 조직의 조직원, 선동대로 활동하면서 각종 시위나 집회 시 직접 참가하여 불법 투쟁을 행하는 적극적 추종세력이다. 한 보수성향의 한 언론은 국내에서 암약하는 종북세력의 규모를 두고 핵심세력 1만2000명, 동조세력 32만명, 부동(不動)세력 400만여 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어디까지를 종북세력으로 볼 것인지 진영 논리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이는 객관적 자료가 되지는 못하지만 1975년에 자유월남이 전 국민의 0.25%인 약 5만여명의 간첩과 좌익세력들에 의해 힘없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유사시 이들은 충분히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수 있는 규모의 세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종북세력 단체

종북세력의 활동은 독자적인 단체를 조직하여 전개하는 활동과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하여 전개하는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독자적인 단체를 조직하여 전개하는 활동에는 정당, 시민운동단체, 통일 전선기구 등을 열거할 수 있다.

3) 從北세력의 사상적 토대와 지향목표는?

국내 從北세력의 사상적 토대는 북한식 공산혁명 사상인 주체사상이며 좌파세력은 정통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맑스·레닌주의와 트로츠키(Leon Trotsky)사상 등을 신봉하고 있는데 從北左派세력의 신봉사상이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라는 사실은 이들의 지향목표가 공산혁명 사상에 입각하여 ‘전 한반도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종북세력의 최종목표는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과 연계하여 주한미군 축출, 자유 민주주의 정권 타도, 연방제 통일의 단계를 거쳐 ‘전 한반도를 적화 및 주체사상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從北左派세력은 이러한 목표를 은닉한 채 ‘독재타도와 민주화 쟁취’, ‘민중(또는 노동자 계급)이 주인이 되는 사회건설’, ‘노동해방사회’, ‘억압과 착취가 없는 새 사회 건설’, ‘통일강성대국 건설’ 등을 운운하며 마치 자신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세력인양 양면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하겠다.

나. 종북세력 실제 인식 교육관련 문헌 분석

1) 종북세력 실제 인식 교육 지침

가) 정신/정훈 교육 일반 지침

군내에서 용사들에 대하여 종북세력 실제에 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 정훈문화 활동 훈령 제1323호”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정훈활동의 목표는 투철한 국가관·안보관 및 필승의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정예장병을 육성하는 데 있으며, 정훈활동은 크게 “정신교육”과 “정훈교육”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다.

먼저 정신교육은 가치관, 태도, 신념, 도덕성 확립 등 인간정신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교육으로 이는 가치관 교육, 생활교육, 각종 훈련, 환경조성 활동 등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임무에 대한 정당성과 사명감의 제고를 위한 교육이며 병사들에 대한 정신교육은 군인정신 6대 요소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군인정신 교육’을 통해서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정훈교육은 국가관·안보관 확립, 군인정신 함양을 위해 정훈교과 시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기본 정훈교육’과 ‘시사안보 교육’으로 구분

되는데 ‘기본 정훈교육’은 장병의 국가관, 안보관을 확립하고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이며, ‘시사 안보교육’은 장병의 안보관을 확립하기 위해 주요 시사·안보 내용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교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2022년 정훈공보 활동 지침(공군)

2022년 정훈공보 활동 지침(공군) 각급 공군부대에 적용할 정훈공보 활동 지침을 수록하고 있으며 위 정훈공보 활동의 목표는 전투력 창출 중심의 정신교육체계를 통해 대적필승의 안보(대적)관, 올바른 국가관 및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군인다운 군인 육성 및 강한 정신력을 고양시키기 위함이다.

위의 목표에 따라 신병 정신교육은 전사기질을 갖춘 ‘군인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신병 기본교재’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라고 다음과 같이 지침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 2-1>과 같다.

<표 2-1> 신병교재 12개 과제

강의를 통한 심화 학습과제	영상교육을 통한 이해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과 군의 특성과 복무자세 ·제4과 군인정신 6대 요소 ·제6과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 ·제9과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제11과 북한의 실상과 군사위협 ·제12과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과 군생활의 의미와 보람 ·제2과 국군의 이념과 사명 ·제5과 국가와 나 ·제7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 ·제8과 군복 입은 민주시민 ·제10과 6.25전쟁과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

출처 : 2022년 공군 정훈공보 활동 계획

부대정신 교육은 일일·주간·집중·수시 기회(초빙교육, 특별 정신교육 등)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한다. 일일 정신교육은 매일 일과시작과 동시에 10분 내외로 시행하며, 주간 정신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시행하며, 경계부대일 경우 국군 TV 방송(녹화 분)을 시청하고 국방일보에 게재된 정신 교육 자료를 참고 및 활용하여 토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 국군방송 정훈교육 방송시간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수요일	09:00 ~ 09:20	정훈교실	본방송
	10:00 ~ 10:30	명강특강	
	11:00 ~ 11:20	정훈교실 / 명강특강	재방송
	11:20 ~ 11:50	정훈교실 / 명강특강	
	15:00 ~ 15:20	정훈교실	
	15:20 ~ 15:50	명강특강	
	20:00 ~ 20:20	정훈교실	
	20:20 ~ 20:50	명강특강	
금요일	14:00 ~ 14:20	정훈교실 / 명강특강	
	14:20 ~ 14:50	정훈교실 / 명강특강	

출처 : 2022년 공군 정훈공보 활동 계획 p25

2) 중복세력 실체 인식 교육 현황

일일 정신교육 및 주간 정신교육 실시현황을 토대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일일 정신교육 시 실시된 중복세력과 관련된 주제는 모두 11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제목에서 중복세력이 직접 언급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주간 정신교육은 총 19개의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반복교육을 실시하는데 그중 중복세력과 관련된 주제는 단 1건 밖에 없었다. 수시/집중 실시하는 정신교육(사계 초청강연회, 상병 진급캠프)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1. 6), 우주발사체 광명성호 발사 사건(2. 7), 북 경비정 서해 NLL침범(2. 8), 백령도 북방 해안포 수발 발사(2. 20), 원산 단거리 발사체 발사(3. 29),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4. 2), 신포급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4. 24), 화성 10호(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제5차 핵실험(9. 9)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 강화지시가 하달된 영향 등에 의해 다소 많은 총 5회의 교육이 이루어 졌으며 세부내용은 〈표 2-3〉 ~ 〈표 2-5〉와 같다

〈표 2-3〉 중복세력 관련 일일 정신교육 현황

주 제	일 자	제 목
중복세력	2017.09.19	중복세력의 실체를 바로 알자!
	2017.09.26	사이버 공간의 악성 바이러스, 중복세력
	2017.10.05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안된다
	2017.10.11	당신의 SNS는 안전하십니까
	2018.01.16	군인복무규율을 생활화하자!
	2018.02.07	북한의 3대 세습과 철권통치
	2018.03.14	딱정벌레의 딜레마
	2018.05.01	중복의 실체를 직시하자!
금요일	2018.06.11	나의 조국 자랑스런 대한민국!
	2018.12.16	대한민국 내부의 적, 중복 좌파의 실체

출처 : 국군방송(KFN) 인터넷 홈페이지

〈표 2-4〉 중복세력 관련 수시/집중 정신교육 현황

일 자	과 정	주 제
2017.09.06	상병 진급 캠프	한반도 정세와 국가안보
2017.10.18	상병 진급 캠프	한반도 정세와 국가안보
2017.11.15	사계 초청 강연회	중복세력의 실체와 대응
2017.12.03	상병 진급 캠프	북한의 3대 세습과 미래
2017.12.17	상병 진급 캠프	북한의 3대 세습과 미래

출처 : 공군 제16투비행단 정훈공보실

〈표 2-5〉 주간 정신교육 현황

제 목	비 고	비 고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중복세력 관련	군복 입은 민주시민
나는 왜 군복을 입고 있는가?		6.25 특집 다큐 - 6.25를 종군하다.
국군의 이념과 사명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대한민국을 지켜온 국군		대한민국의 건군과 정통성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		유구한 우리의 역사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해양영토 수호의 중요성과 우리의 과제
6.25전쟁과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군인정신 6대 요소
21세기 안보환경		손자병법을 통해서 본 정통적 상무정신
통일 조국의 미래상		손자병법을 통해서 존 군 조직의 특성

출처 : 국군방송(KFN) 인터넷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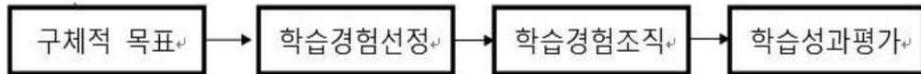
다. 교육과정 개발 절차 및 모형

1) 교육과정 개발 절차 및 모형

교육과정의 목적과 세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우선 학습자와 교수자의 교육 요구분석(needs analysis)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국가 또는 지역사회 등의 요구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그 절차상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그래도 교육과정 목적(goal)과 목표(objective)의 설정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 또는 과정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앞에서 설정되는 목적과 목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Tyler, 1949)며 세부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Tyler모형의 4단계



다음으로, 교육목적을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킨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선정(selection)해야 한다. 교육내용 선정의 원리는 유의미성, 타당성, 유용성, 교수-학습 가능성, 사회가치 적합성, 경제성 등을 들 수 있다(권영성, 2011).

이러한 단계를 거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선정된 내용은 또한 잘 조직(organization)되어야 한다. 교육내용 조직의 원리는 수직적 원리로 계열성(sequence)과 계속성(continuity)이 있고 수평적 원리로는 통합성(integration)과 범위(scope)의 원리가 있으며 이 두 가지 차원을 두루 잘 고려해야 할 균형성(valance)의 원리 역시 중요하다.

여기까지 잘 선정되고 조직된 내용을 가지고, 개별 수업목표에 따라 실제 교실상황에서 수업(instruction)이 진행된다. 이는 그동안 개발된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단계(teaching & learning process)인 것이다. 수업은 일반적으로

‘도입-전개-정리’의 순서(3단계)에 따르고, 개별 수업 역시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와 유사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작은 교육과정(small curriculum)’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마지막 평가(evaluation) 단계를 시행한다. 이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총합평가(summative evaluation)라 하는데 이는 각 단계를 점검하기 위한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평가단계를 통해 다시 목적과 목표에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과정의 이러한 특징을 ‘순환적 일관성’이라 하는데 이를 통해 교육과정이 단순히 문서와 계획, 결과 등만을 다루는 과정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게다가 바로 앞 뒤 단계에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각 단계가 보다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작용성’ 역시 유지되어야 한다. 이 두 특성이 잘 발휘될 때 교육과정 개발은 비로소 최적화되는 것이다.(이형행, 2009)

따라서 중복세력 교육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와 모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중복세력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조직하여 이를 잘 가르치고 배운 후 최종적으로 중복세력 교육의 목적이 잘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감으로써 중복세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공군 제16전투비행단(경북 예천) 기지방호전대 소속 용사 111명(출신지역 : 전국, 나이 : 20~25세, 학력 : 전원 대학 휴학 중)을 대상으로 하였고 시기는 2021년 2월 16일 오후에 전대원을 대상으로 한 전체 집체교육 시에 실시하였는데 이는 북한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자가 2021년 당시 해부대 기지방호전대 소속 참모인 기지작전과장으로 근무

하던 시절에 기지방호전대 예하 각 부서(대대)인 정보통신대대, 헌병대대, 시설대대, 대공방어대, 화생방지원대, 기지방호전대 본부 소속 용사들 중 휴가·외박, 입원/입실자 및 필수 근무자 및 Crew 근무 후 취침/휴식자 등을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조사대상

구 분	인 원	소 속	연 령	학 력	출신지역
공군 제16전투 비행단(예천)	111 명	기지방호전대 예하 부서(대)대	20~25세	전원 대학 휴학 중	전국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설문 대상자를 16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소속 용사로 한정된 이유는 본 연구자가 설문대상자들을 직접 모아서 대면하고 취지를 설명하여 이해시키기 위함이었다. 단, 용사의 계급은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계급별로 세분화하기에는 중복세력 실체인식 교육의 역사가 매우 짧고, 그에 따라 계급별 분석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연구자의 사전설명을 듣고 응답자들이 직접 작성하는 자가 설문방식을 채택하였다. 각 문항의 구성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선행연구 통일설문지(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작성)를 토대로 수정·보완하고, 용사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3개 분야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중복세력에 대한 인식분석,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 요구분석, 중복세력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다. 자료 분석 방법

중복세력에 대한 인식분석,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 요구분석, 중복세력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총

130부의 설문결과 중 답변이 부실하다고 판단된 19부를 제외한 111부의 설문지를 SPSS 18.0K로 통계분석 하였다.

설문 문항(3개 분야 총 20문항)들 중 중복세력에 대한 인식도 조사는 8문항 중 6문항을 Likert 5점 척을 사용하여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평균 .768로 대체로 양호하였다.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요구 조사는 2개 문항만이 적용되었는데 상호 연관성이 없는 문항으로써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351을 나타냈다.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 요구조사는 Likert 5점 척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세부내용은 <표 3-2>와 같다.

<표 3-2> 설문 문항의 신뢰도

순서	설문 문항	cronbach α
1	중복세력에 대한 인식 정도	.768
2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 요구	.351
3	교육과정 개발 요구조사	사용안함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3. 연구결과

공군용사들의 중복세력에 대한 의식과 중복세력 인식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복세력에 대한 의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1절에서 다룬 후, 2절에서는 중복세력 인식 교육 요구 분석 결과를,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중복세력 인식교육 교육과정 개발의 요구 및 방향을 분석한 결과를 각각 기술하였다.

가. 중복세력에 대한 인식 분석

먼저 공군용사들의 중복세력에 대한 관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귀하는 평소엔 중복세력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약 73% 이상의 공군 용사가 중복세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내용은 <표 4-1>과 같다.

〈표 4-1〉 중복세력에 대한 관심 정도

구 분		① 전혀 관심 없음	② 관심 없음	③ 보 통	④ 관심 있음	⑤ 매우 관심 있음	전 체	평 균
전 체	빈도	5	25	56	19	6	111	2.96
	비율	4.5	22.5	50.5	17.1	5.4	100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중복세력에 대한 군의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 “중복세력에 관해 주변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63.9%의 공군용사가 중복세력에 대해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 4-2〉와 같다.

〈표 4-2〉 중복세력에 대한 대화 빈도

구 분		① 전혀 해본적 없음	② 거의 해본적 없음	③ 보 통 (반기 1회)	④ 가 끄 (월 1회)	⑤ 자주 (주 1회 이상)	전 체	평 균
전 체	빈도	27	44	27	10	3	111	2.26
	비율	24.3	39.6	24.3	9.0	2.8	100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중복세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중복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90.3%가 중복세력은 해로운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내용은 〈표 4-3〉과 같다.

〈표 4-3〉 중복세력에 대한 인식

구 분		① 안보에 매우 이로운 존재	② 안보에 다소 이로운 존재	③ 안보에 별 영향을 못주는 존재	④ 안보에 다소 해로운 존재	⑤ 안보에 매우 해로운 존재	체
전 체	빈도	0	3	8	33	67	111
	비율	0.0	2.7	7.2	29.7	60.4	100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중복세력이 이로운 존재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1.8%는 진보적 성향 때문에, 두 번째로 1명만이 기타 의견을 내놓았으며 세부내용은 <표 4-4>과 같은데 이는 대체로 중복세력의 유해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지만 2.7%의 병사는 중복세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표 4-4> 중복세력이 이로운 존재인 이유

구 분		① 사회의 다양한 의견 조성	② 진보/ 개혁적 성향	③ 사회적 약자의 편이기 때문	④ 북한이 정당하고 주체적인 국가라서	⑤ 기 타	전 체
전 체	빈도	0	2	0	0	1	3
	비율	0.0	1.8	0.0	0.0	0.9	2.7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반대로, “중복세력이 해로운 존재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남한 내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50%), 두 번째는 국론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26.5%), 세 번째로 북한 정권 자체가 해로운 존재여서(12.7%)라고 답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 4-5>와 같은데 이러한 결과는 공군용사들 또한 최근 남-남 갈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5> 중복세력이 해로운 존재인 이유

구 분		① 국론 분열을 조장	② 남한 내 남-남갈등 조장	③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	④ 북한정권 자체가 해로운 존재이므로	⑤ 기 타	전 체
전 체	빈도	27	51	7	13	4	98
	비율	26.5	50.0	6.9	12.7	3.9	100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다음으로, 중복세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중복세력의 정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공군용사 59.4%가 조금 알거나 잘 안다고 답변하였고, 공군용사 30.7%는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 4-6>과 같다.

<표 4-6> 중복세력의 정의

구 분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 이다.	④ 조금 안다.	⑤ 매우 잘안다.	전 체
전 체	빈도	2	21	22	53	13	111
	비율	1.8	18.9	19.8	47.7	11.7	100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중복세력의 규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에 대해 73%가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 4-7>과 같다.

<표 4-7> 중복세력의 규모

구 분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 이다.	④ 조금 안다.	⑤ 매우 잘안다.	전 체
전 체	빈도	8	63	13	15	2	111
	비율	16.2	56.8	11.7	13.5	1.8	100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국내 중복세력의 최근 활동 현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63.9%가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위의 세 가지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한 공군 용사가 52.5%를 차지하여 대체적으로 중복세력의 개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부내용은 <표 4-8>과 같다.

〈표 4-8〉 중복세력의 최근 활동 현황

구 분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안다.	⑤ 매우 잘안다.	전 체
전 체	빈도	27	44	24	12	4	111
	비율	24.4	39.6	21.6	10.8	3.6	100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나.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 요구분석

먼저 중복세력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을 알아본 결과, 중복세력에 대한 학교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61.3%가 받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 4-9〉와 같은데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휴전 중인 국가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규 학교과정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 세대와 일맥상통하다고 판단된다.

〈표 4-9〉 중복세력에 대한 학교 교육 경험

구 분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전 체
전 체	빈도	35	68	8	111
	비율	31.5	61.3	7.2	100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군에서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 90.1%가 받았다고 〈표 4-10〉과 같이 답하였는데 이를 통해 군 내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 자체는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0〉 중복세력에 대한 군 교육 경험

구 분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전 체
전 체	빈도	100	8	3	111
	비율	90.1	7.2	2.7	100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군 교육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8.8%)한다는 답변에 비해 매우 불만족(12.7%) 또는 불만족(51.0%)으로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표 4-11>처럼 조사되었다.

<표 4-11> 중복세력 관련 군 교육 만족도

구 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 통	④ 만 족	⑤ 매우 만족	전 체	평 균
전 체	빈도	13	52	27	9	-	101	2.32
	비율	12.7	51.0	27.5	8.8	-	100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군 교육을 불만족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강의내용 부족이 54.5%, 학습 교재 부족 및 교관의 강의능력 등이 18.2%인 것으로 <표 4-12>와 같이 나타났다.

<표 4-12> 중복세력 관련 군 교육 불만족 이유

구 분		① 학습 교재 부족	② 교관 강의 미흡	③ 주입식 강의 내용	④ 학습 장소 불편	⑤ 기 타	전 체
전 체	빈도	2	2	6	0	1	111
	비율	18.2	18.2	54.5	0.0	9.1	100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중복세력에 대한 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7.8% 이상이 필요하며 41.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해서 대부분(89.2%)의 공군용사가 교육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고 있음이 <표 4-13>과 같이 나타났다.

〈표 4-13〉 중복세력에 대한 군 교육 필요성

구 분		① 절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전 체	평 균
전 체	빈도	0	0	12	53	46	111	4.31
	비율	0.0	0.0	10.8	47.8	41.4	100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다.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앞서 언급했듯이, 중복세력에 대한 군의 교육은 문서상 상위 지침이 없고 주기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 개발(curriculum development)의 일반적 절차 및 모형에 따라, 통일교육 목표(goal), 내용(content), 교육방법(teaching method) 및 평가(evaluation) 순으로 확인하고 분석하였다.

1) 중복세력 교육 목표

중복세력 교육의 목표에 대해 공군병사의 37.9%가 ‘중복세력의 의도 파악’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꼽았고 두 번째로 30.6%가 ‘북한에 대한 건전한 이해와 안보관 확립’을 선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8.8%가 ‘중복세력 식별능력 함양’으로 나타났으며 세부내용은 〈표 4-14〉와 같다.

〈표 4-14〉 중복세력 교육의 일반 목표

구 분		① 중복 세력의 의도 파악	② 중복 세력의 식별능력 함양	③ 북한에 대한 이해와 안보관 확립	④ 기 타	전 체
전 체	빈도	42	32	34	3	111
	비율	37.9	28.8	30.6	2.7	100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2) 중복세력 교육 내용

가장 중시해야할 교육 내용과 가장 배우고 싶은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문하였다. 가장 중시해야할 교육 내용에 대해서 60.4%가 ‘중복세력의 의도’를 꼽았으며 두 번째로 48.6%가 ‘중복세력 식별방법’, 세 번째로 46.8%가 ‘중복세력 활동현황’이라고 응답했으며 세부내용은 <표 4-15>와 같다.

<표 4-15> 중시해야 할 교육 목표

구 분		① 중복 세력의 정의	② 중복 세력의 규모	③ 중복 세력 식별방법	④ 중복 세력 활동현황	⑤ 중복 세력의 의도	전 체
전 체	빈도	46	33	54	52	67	252
	비율	41.4	29.7	48.6	46.8	60.4	-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다음으로, 가장 배우고 싶은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49.5%가 ‘중복세력 식별방법’로 답했으며 두 번째로 48.6%가 ‘중복세력 활동현황’, 세 번째로 32.4%가 ‘중복세력 의도’라고 <표 4-16>과 같이 응답하였는데 가장 중시해야 할 교육내용과 가장 배우고 싶은 내용은 서로 상이하였는바, 이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시해야할 교육내용과 개인적 관심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이 두 가지 의견을 잘 절충하여 향후 교육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6> 배우고 싶은 교육 내용

구 분		① 중복 세력의 정의	② 중복 세력의 규모	③ 중복 세력 식별방법	④ 중복 세력 활동현황	⑤ 중복 세력의 의도	전 체
전 체	빈도	32	29	55	54	36	206
	비율	28.8	26.1	49.5	48.6	32.4	-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3)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 방법

먼저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시청각 자료 활용 수업(55.0%)을 원했으며, 약 20%가 현장 견학 및 체험학습, 강의식 수업이 11.8%, 그리고 토의/토론식 수업도 10.8% 정도로 응답한 반면,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은 상대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2.7%) 것으로 <표 4-17>과 같이 나타났다.

<표 4-17>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 방법

구 분		① 강의식 수업	② 토론식 수업	③ 시청각 자료 활용 수업	④ 현장견학/ 체험학습	⑤ 온라인 교육	전 체
전 체	빈도	13	12	61	22	3	111
	비율	11.7	10.8	55.0	19.8	2.7	100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다음으로, 강사는 누가 적합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각각 전문 강사가 48.6%, 탈북자 및 전향자가 33.4%, 정훈장교가 16.2%로 <표 4-18>과 같이 조사되어 중복세력 관련 교육은 중복세력 전문가나 탈북자 및 전향자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표 4-18> 중복세력 교육 시 희망 강사

구 분		① 정훈 장교	② 외부 전문강사	③ 부서장 또는 부서관부	④ 탈북자 또는 전향자	⑤ 기 타	전 체
전 체	빈도	18	54		37	2	111
	비율	16.2	48.6	0.0	33.4	1.8	100

출처 : 연구자 개인 연구결과

4)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 평가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약 70%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에 대한 평가 방식에 대한 질문에

설문조사가 48.7%, 동료 상호평가가 21.8%를 차지하고 있어 동료 상호간 자율적 동기부여 및 평가와 만족도 조사가 병행되길 원하고 있었다.

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중복세력에 대한 인식 분석

우선 공군용사들은 중복세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의 필요성 또한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복 입은 태극전사로서 현재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과 중복세력에 대해 높은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관심도에 비해서 중복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중복세력에 대한 인식은 대다수(90.1%)가 안보에 해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유로는 남한 내 남-남 갈등 조장(50%)을 가장 높은 이유로 꼽았다. 신세대 공군 용사들도 대부분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안보관련 국론분열사건들에 대해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목소리로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을 중복세력에서 찾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관심도 및 올바른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중복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의 수준이 너무 얇은 것은 부정적인 현실이다. 중복세력의 정의, 중복세력의 규모, 중복세력의 최근 활동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빈도는 30% 수준을 채 넘지 못했다. 따라서 공군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은 보다 높은 빈도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중복세력 교육 요구분석

먼저 입대 전 정규 학교교육 과정을 통한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많은 병사들이 교육 경험 자체가 없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휴전중인 국가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또 다른 특수성인 지나친 교육열에 이에 따른 입시위주의 수업편성 등이 그 이유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졸업과 동시 졸업생 전원이 100% 공군 정

비사 등 기술부사관(직업군인)으로 임관하는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는 물론 해학교가 안보 관련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일반 고등학교들과는 달리 대학 진학이라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보니 중복세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각종 안보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다양한 개설했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군 중복세력 교육에 대한 만족도(satisfaction) 부분인데 대부분의 용사들이 보통 이하의 불만족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강의 내용과 학습교재의 부실, 교관의 강의능력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중복세력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이 긴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주의 깊게 살펴 본 결과는 바로 중복세력 교육 필요성에 대한 답변인데 응답자 중 중복세력 교육이 필요 없다고 답한 용사는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남한 내 불필요한 남-남 갈등, 특히 각종 안보 관련 이슈들에 관한 국론 분열에 중복세력이 관여하고 있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지 않다는 불가능한 결론이라 판단된다. 이처럼 용사들이 중복세력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절감하고 있다면 중복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모든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목적과 목표(goal & objective)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중복세력 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거시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건전한 이해와 안보관 확립으로 시작해서 미시적으로는 중복세력의 의도, 중복세력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통한 건전한 안보관 확립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따른 세부 교육내용(contents)과 관련해서 가장 중시해야 할 교육내용은 중복세력의 의도이고, 중복세력의 식별방법, 중복세력 활동현황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가장 배우고 싶은 교육내용(중복세력 식별방법이고, 중복세력 활동현황, 중복세력의 의도 순)이었는데 가장 중시해야 할 교육내용과 가장 배우고 싶은 내용은 서로 상이한바, 이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교

육내용과 개인적 관심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 두 가지 의견을 적절히 절충하여 교육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효과적인 중복세력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teaching & learning method)으로는 강의식 수업보다는 시청각 자료 활용 수업을 선호하였고 현장견학/체험학습 및 토의/토론식 수업 등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단순 구(口)두식 강의 보다는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한 수업을 통해 중복세력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실제 분단의 현장과 안보견학 등을 병행하는 교육 방법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중복세력 교육 강사로는 주 업무가 정해져 있어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정훈장교나 부서 간부 보다는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연구하고 가르칠 전문 강사의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및 수혈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탈북자 및 사상 전향자 등을 초빙 강사로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복세력 교육 평가(evaluation)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는바, 단순암기 정도를 평가하는 지필평가 방식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함께 동료 상호간 자율적 동기부여 및 평가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라. 종합적 논의

본 논문은 공군 용사들의 중복세력에 대한 실제인식과 교육요구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 중복세력 실제인식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향후 중복세력 실제 인식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군용사들은 중복세력이 우리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에 중복세력의 정의, 목적, 규모, 활동현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군 정신교육을 통해 시행되어온 중복세력에 대한 교육은 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긴 했지만, 교육적 효과 차원에서는 공군용사들의 중복세력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셋째, 이에 군 교육당국은 교육과정(curriculum)의 개발의 절차에 따라, 국

가와 사회, 그리고 학습자들의 요구(needs)를 정확히 분석하여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세부 교육내용을 합리적으로 선정 및 조직(selection & organization)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교육 시행 후, 최종적으로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를 통해 교육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편의상 분석 대상을 공군 제16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예하 부서(대대)들에서 복무 중인 일부 공군용사로 한정하였음에 따라서 본 분석결과를 전 軍의 모든 병사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표집(random sampling)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습자 뿐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강의)자 및 각 신분별 관리자급(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등)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교육과정 개발 요구 분석도 일반적인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따른 분석이었기 때문에 이를 모든 중복세력 교육과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세밀한 요구분석과 구체적인 개발절차 준거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군 전체에 적용 가능한 중복세력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 軍, 전 계급의 장병들로 연구(설문)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군사들만을 위한 교육과정이 아닌 전체 군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의 틀을 설계한 후 먼저 모든 신분의 장병(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및 군무원에게 적용 가능한 공통(general) 교육과정과 각각의 개별 군(육·해·공군, 해병대), 계급 및 신분에 맞는 세부(specific) 교육과정 등 두 가지 모두가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남북 평화기류가 형성됐다고 하여 모든 방위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잠정적 평화를 어떻게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킬 것이냐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복세력 실체인식 교육과정의 개발과 시행 및 평가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변화하

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부심히 수정 및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23.04.05]

[논문심사일 : 2023.04.18]

[논문수정일 : 2023.04.30]

[게재확정일 : 2023.09.11]

〈참고문헌〉

1. 논문

- 권두영, 2016, “한국군의 정훈교육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영성, 2017, “공군대학 통일교육 교육과정 요구분석”, 『합동군사대학교(공군대학) 교관/교수 논문』.
- 박창규, 2012, “중북세력에 대한 인식의 정리와 대응자세” 『해병대 전략연구소 전략논단』 제15호(봄·여름호).
- 유형년, 2016, “장교 통일의식 분석을 통한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저서

- 양동안, 2012, 『중북세력 실체인식 교육 강화방안』, 제3회 국방정신전력 세미나.
- 이희천, 2016, 『대한민국 내부의 적, 중북 좌파의 실체』, 2016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안보학술 세미나.
- 송대성, 2015, 『한국사회 안보현실』, 2015 세종연구소 안보학술 세미나.
- 공군교육사령부, 2017, 『나의 조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신교육교재.
- 유동열, 2012, 『중북좌파세력들에 대한 대처방안』, 한국보훈학회.
- 이규원, 2011, 『중북세력의 위험성과 베트남 사례가 주는 교훈』, 월간 자유통권 460호.

3. 기타자료

- 정훈교육 자료실: <http://oper2.hp.af.mil:8888>
- 국군방송 정훈교실: <http://www.dema.mil.kr/wep/home/education>
- 대한민국사이버 통일안보 국민연합: www.cyberhmw.org
-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http://www.uniedu.go.kr>
- 선진 통일교육센터: <http://www.afec.go.kr>
- 인터넷통일학교: <http://www.tongile.moe.go.kr>

Abstract

Educational method of new era soldie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confirmation of need for the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through analyzing congition of pro-North force which are subordiante to the North Korea, and change of sense of national security by educating for it to airmen in the new generation, with devising concrete programs.

It is found that airmen take an interest in pro-North force, and feel strongly the necessity of the education. 90.1% of airmen awares it as damage to national security, and half of its reason is they regards pro-North force that it aggravates domestic conflicts in the South.

Most soilders are not satisfied wih military instruction about pro-North force below the average. That's because the lecture and teaching material are not earnest and shortage of instructors' ability to give a lecture . It is time to develop contents through checking the whole course of the program. Officers, the core of national security, have responsibility to discharge its role. It is remarkable that answer of the question is asking for education about pro-North force. There is no one in the respondent who denied the need of education about pro-North force. It proves that there is conviction that it evolves in issues especially about national security in order to make spilt in South Korea. If soldiers admit substance of it and feel need for instruction about it like this, it would be necessary of developing course to educate them about it.

As a result of studying the course for the program, these are the aim and contents to the purpose. It is the intention of pro-North force which is the most significant contents in the instruction. Also methods to discriminate and the present state of it are also analyzed as important content. The most attractive content to airmen, however, is discrimination method. state and intent of it orderly come after that. It shows that the matter which is to be accounted is not the one which are desired to be taught. This reveals that there is discrepancy between individual matter of concern and interest and content which attaches importance. It should be considered to planning the education, compromising these two opinions.

Key Words: Pro-North force, Airmen, Educational method, Domestic conflict in the South, National security
--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발전방안

최 승 우 *

- I. 서 론
- II. ‘워싱턴 선언’의 배경과 내용, 다양한 주장과 여론
- III.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분석과 평가
- IV. ‘워싱턴 선언’의 보완, 진화 방향, 본질적 대안
- V. 결 론

* 육군 전투지휘훈련단 전문관, 한반도 선진화재단 북핵 대응연구회 전문 연구위원,
e-mail: swooch@hanmail.net

논문 요약

‘워싱턴 선언’은 점증하고 고도화하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국 국민의 안보 우려와 지혜에 대한 한미 정부와 통수권자의 응답으로 확장억제 전략의 최고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언에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교리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만들 것이다. 한미 공동으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즉각 실행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고 민첩하게 이행함으로써 대북 억제력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공동으로 구축한 낙동강 방어선이다. 6.25 전쟁 시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해 북진했듯이 한미 정부는 북한 핵 위협 대응 전략을 공세적으로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은 한반도 내에서 핵에 의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연합연습에 반대하고 전략자산의 전개를 교란하는 등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군사, 정치, 심리적인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한미는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선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여 정권의 교체나 외부 세력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북핵 억제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용산 또는 인천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로 실패한 역대 한국정부의 전철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핵 대응 3단계 전략은, 1단계 시행 대안으로 핵잠재력 확보, 2단계 예비 대안으로 한국식 핵 공유 추진, 3단계 최후 대안으로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회는 가칭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법’을 제정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국방 분야 종사자들은 전문성에 입각해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북한 핵 위협을 논외로 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임을 자각해야 한다.

주제어 : 워싱턴 선언, 북한 핵 위협, 확장억제, 핵잠재력, 핵 공유, 핵무장

I. 서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70년이 지난 2023년 4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혈맹으로 맺은 한-미 동맹은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을 지향하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한미는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경제동맹-기술동맹-문화동맹-정보동맹의 다섯 개 기둥을 자리잡게 할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 다가오는 70년을 향해 출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중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 워크’,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확인’에 관한 정상 공동성명, ‘양자과학 기술협력 공동성명’, ‘한미 우주탐사 협력 공동성명’ 등의 합의 문서를 체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적 방미 성과는 ‘워싱턴 선언’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를 담은 엇갈리는 주장들이 난무하였으나 그 열기가 서서히 식어 국민과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제 차분하고 냉철하게 ‘워싱턴 선언’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북한 핵 대응 정책을 진화시켜야 할 적절한 시점이 되었다. 2장에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다양한 평가와 여론에 대해 균형감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온 역사 속에서 선언이 갖는 의미와 위상,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억제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3장에서는 선언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선언 이후의 구체적 이행실적은 어떠했으며 그 실적이 북한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언의 한계는 일반적인 입장의 분석과 북한 입장에서의 분석을 더한다면 명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장에서는 선언이 갖는 한계를 토대로 보완하고 진화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역대 정부의 북한 핵 대응 정책이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에 있었음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워싱턴 선언’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세 전환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공세로의 진화를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추진할 단계별 추진전략을 시행 대안, 예비 대안, 그리고 최후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북한 핵 위협의 당사국인 한국의 국회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제정하려는 시도나 노력도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유엔의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대북 제재법을 마련해야 할 당위성과 그 대략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북한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국방 분야 종사자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 핵 위협을 논외로 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라든지 ‘군사적 신뢰구축’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을 속이는 일임을 밝히고자 한다.

II. ‘워싱턴 선언’의 배경과 내용, 다양한 주장과 여론

1.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가. ‘워싱턴 선언’의 배경

(1)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

북한의 핵무장은 김정은 집권 후 가속화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표 1] 북한 핵실험 현황을 보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김정은은 2013년 북한이 핵무장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핵 교리를 수립하였다.

[표 1] 북한 핵실험 현황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시기	'06.10.9.	'09.5.25.	'13.2.12.	'16.1.6.	'16.9.9.	'17.9.3.
규모(mb)	3.9	4.5	4.9	4.8	5.0	5.7
위력	약 0.8kt	약 3-4kt	약 6-7kt	약 6kt	약 10kt	약 50kt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228.

2017년에는 6차 핵실험에 이어 ICBM을 포함한 다종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였고 2022년 3월에는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2018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지 선언’을 사실상 파기하였다.¹⁾

같은 해 9월,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여 핵무기의 사명과 구성, 핵무기의 사용조건, 지휘통제, 소극적 안전보장, 비확산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핵 교리를 완성하고 핵능력과 핵태세, 그리고 핵교리의 일치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²⁾ 또한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은 선제 핵사용과 전술핵 운용을 시사³⁾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무력정책법 제정 후 김정은은 북한 핵 무력의 “제1의 사명”은 미국의 확장억제 또는 핵우산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 무력을 증강하는 것이고, “제2의 사명”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한반도의 공산화를 이룩하는 의도임을 노출하였다.⁴⁾

김정은 등 지휘부가 위협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핵 타격이 된다고 명시함으

1)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2). p.21.

2) 김보미, “북한 핵전략 및 핵태세 평가와 대응방안”, 『안보현안분석』 제204호. 2023. pp.2-4.

3)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대통령실, 2023). p.24.

4) 한반도 선진화 재단 북핵대응연구회, 『북핵: 방관할 것인가?』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2023). pp.7-8.

로써 핵무장의 근본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무기의 사용조건을 구체화해 핵 전 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쟁에서의 핵 사용 의도와 선제적인 핵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 대남 핵 위협을 실효적으로 제고하였다.⁵⁾

[표 2] 북한 핵무력정책법 핵무기 사용조건(제6조)

- 핵무기 또는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 감행/임박
- 국가지도부와 국가 핵 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핵 및 비핵공격 감행/임박
-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감행/임박
- 유사시 확산 및 장기화 저지, 전쟁 주도권 장악 위한 작전상 필요
-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발생

북한의 핵탄두 재고량에 대해 미국의 D. Albright 박사는 이전보다 구체화하고 근거를 명확히 하여 3개 유형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모든 경우를 확률적으로 통합 추정된 핵탄두 수를 35-63발로, 중간값 46발을 대표값으로 제시하였다.⁶⁾

최근의 연구에서는 기존 Albright의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연간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별 연간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량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여 북한의 핵탄두 수량을 최소 178에서 최대 447개까지 생산 가능하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⁷⁾

북한은 핵무기 장거리 투발 능력 수단 또한 꾸준히 발전시켜 상당한 역량을 갖추어 왔다. 김정은 정권은 222회의 미사일 개발 시험을 했고, 이 횟수는 김

5) “北 핵무력 법제화에 담긴 뜻”, 『KBS 뉴스』, 2022.9.21.

6) 3개 유형은 ①모두 단순 무기급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원자탄으로 생산했다면 신뢰도 95% 범위 내 추정된 탄두 수는 55~96발이며, 그 중간값을 72발로 제시 ②만약 우라늄탄 내부에 플루토늄을 혼합·구성하는 유형의 복합 핵분열탄(composite-core fission weapons)만으로 생산했다면 주원료 물질 플루토늄 생산량 한계를 고려하면 17~23발 정도로 그 중간값을 20발로 제시 ③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1단계 열핵무기(one-stage thermonuclear weapons)와 단순 핵분열(simple fission) 및 복합 코어 핵분열(composite-core fission) 탄두를 생산했다고 가정하면 31~74발이며, 그 중간값 49발을 대표값으로 제시. David Albrigh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rsenal: New Estimates of its Size and Configuration”, ISIS Report, 2023.4.10., pp8-10.

7) 박진호, “국방혁신 4.0과 북핵 위협대응 능력의 일치성 여부”, 『북핵 대응과 국방혁신의 합치성』 한기호 의원-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 안보세미나. 2023.5.11.

일성 시대의 20배, 김정일 시대 대비 4배가 넘는다. 통치 기간을 고려한다면 김정은은 더욱 핵실험과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 노력에 온 힘을 기울여 집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⁸⁾

(2) 한국의 정권교체와 국민의 핵무장 여론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빠져서 북한의 핵전력 증강을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핵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은 한국군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응징”할 것을 주문하였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핵무기의 개발이나 미 핵무기의 전진 배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⁹⁾

문재인 정부는 ‘운전자론’을 주장하며 미-북 관계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여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2018.6.12.) 공동성명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공약”하도록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두 번째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2019.2.27.-28.)이 결렬(합의 없이 종료)되었다.¹⁰⁾

이후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다시 만났으나(2019.6.30.)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핵무장 대응 정책은 비핵화 목적이 명확하고 열정을 가지고 추진했으나 근본적인 대응 수단(대안)의 한계로 정상 간의 ‘만남’과 ‘선언’의 화려함 속에 실질적인 진전은 없이 과거 경험해 왔던 악순환의 궤도로 재진입하였다.¹¹⁾

이러한 변화는 단지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문

8) <https://missilethreat.csis.org/north-korea-missile-launches-1984-present/>,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검색일: 2023.8.4.

9) 한반도 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 앞의 책. pp.5-6.

10) 외교부, 『외교백서』(서울: 외교부, 2019). pp.36-37.

11) 최승우,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연구-엘리슨 모형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pp.117-118.

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명확하다고 국민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려 노력하였으나 국민은 현명하게도 북한과 김정은은 핵무장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은 60%대에서 70%대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가 발표한 「한국인의 대미국인식조사」 및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의 여론조사 결과 역시 통일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통일연구원이 2022년 12월 실시한 「한국인의 대미국인식조사」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6.8%, 2021년 12월 CCGA의 조사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였다. 핵무장을 원하는 국민의 비율은 오랜 기간동안 60% 이상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¹²⁾

이 연구에 의하면 국민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방위 공약을 신뢰할수록 핵무장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안보에 대한 우려와 해결에 대한 지혜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억누르고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정권이 교체되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국민의 우려와 지혜는 비로소 대한민국의 대외관계에 있는 그대로 전달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방미 전에 국민의 안보 우려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렸고 세계의 여론과 미국은 비상하게 반응하였다.¹³⁾

나. '워싱턴 선언'의 내용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확장억제 공약, 확장억제 공동 기획 및 실행, 한국의 역할 확대, 소통 및 협의, 그리고 미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2) 박주화, “핵무장을 원하는 국민인식의 세 가지 특징”,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323. pp.1-3.

13) “한국은 왜 핵무장 원하나”...BBC, 윤 대통령 방미 앞두고 조명, 『연합뉴스』, 2023.4.23.; WP “한국인, 미 안보 약속에 의구”...한국내 자체 핵무장론 조망, 『연합뉴스』, 2023.2.8.

[표 3] '워싱턴 선언'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확장억제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간 확장억제를 통한 강력한 상호방위 및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확인 •미국: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시 압도적, 결정적 대응, 한국과의 즉각적 협의/지원, 핵 포함 모든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강조 •한국: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 모든 역량을 한미 연합방위 체제에 기여해 나갈 것을 확인
확장억제 공동기획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는 핵 억제 관련 보다 심도있고 협력적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선언 •NCG: 확장억제 강화, 핵 및 전략기획 토의,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 관리 •핵 위기 시 공동기획 강화를 위한 범정부 도상연습 시행
한국의 역할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시 미국의 핵 운용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관한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 •한반도에 대한 핵 억제 적용 관련 연합 훈련 증진
소통협약	▶한미는 관련 협의 촉진을 위해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
미전략 자산전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한미 양국 군간 관련 공조 심화

한미 정상은 “동맹은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상응하는 향상된 대화와 정보공유 증진을 포함하여 핵 억제에 관해 심화되고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동맹은 유사시 미국의 핵 운용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관한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시행을 위한 연합 연습 및 훈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약속(확장억제)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2. 국내의 평가와 여론¹⁴⁾

가. 정부, 여당의 평가

정부와 여당의 평가는 초기에 사실상 핵 공유라고 평가하였으나 논란이 일고 이에 대한 미국 백악관의 논평이 있자 확장억제 강화를 주장하며 한미동맹이 핵 동맹으로 발전했음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실의 안보실 1차장은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라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의 현장에 참여했던 외교부장관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간 협력보다 더욱 심도있고 유연한 핵 억지력 계기가 만들어졌다", "워싱턴 선언은 유사시 핵 억지력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우리와 미리 정보를 공유, 협의하고 공동기획, 실행할 수 있다는 매커니즘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핵 포함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업그레이드 된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한미동맹이 핵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였다.

여당인 국민의 힘 원내대표 의원은 "우리 자체 핵무장보다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 힘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의원은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 "김정은이 한미를 핵으로 이간하겠다는 시도는 부질없게 되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나. 야당의 평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워싱턴 선언'에 한미 간의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등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던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고 한국 정부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기로 한 결정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은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14) "'워싱턴 선언'은 한국 재도약과 신냉전 승리 방정식", 『문화일보』, 2023.4.30.; "'워싱턴 선언'에 아픈 곳 찢리자...북, 중.러 업고 사흘째 흠집내기", 『중앙일보』, 2023.5.1. 등.

야당인 정의당 대표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분명히 부정된 점은 다행"이라며 "이번 회담이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느냐는 점에서는 낙제점"이라고 평가하였다.

다. 국내의 여론 및 전문가 평가

국내의 여론은 최초 국민의 안보 우려와 기대가 최대한 반영되지 않은 것에 실망한 평가가 있었으나 이후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언의 의미와 시사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조선일보는 "한국에 대한 족쇄가 강화됐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억지하는데 중점을 둔 것 같다"라고 주장하였다.

중앙일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충분한 안전판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해석하며 실무적인 후속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CBS 노컷 뉴스는 "'워싱턴 선언'이란 화려한 포장을 얻는 반대급부는 사실상의 자체 핵무장 포기 선언이며 미국이 한국에 거의 아무것도 주지 않고 손쉽게 핵 비확산 원칙을 관철시켰다"라고 평가하였다.

한국의 핵 전문가들도 논평을 하였는데,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 간에 협의 횡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전략자산이 조금 더 오는 것 말고 달라지는 게 없다", "양적 변화는 있지만 질적 변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핵에 관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대응을 천명한 것으로써 북핵에 대한 억제, 나아가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번 선언을 통하여 "한미 양국은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공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3. 해외의 평가와 반응¹⁵⁾

가. 미국의 평가

미국에서도 다양한 평가와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미국 기업연구소 잭 쿠퍼는 "'워싱턴 선언'은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뿐 아니라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됐다"라고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자

15) "In Turn to Deterrence, Biden Vows 'End' of North Korean Regime if Attacks", *NY Times*, April 25, 2023.; "Biden commits to South Korea's security amid rising threat from North", *The Washington Post*, April 26, 2023. etc.

하는 서울의 외도가 동맹에 위협 요인인데, 이번 선언은 (미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영리한 노력"이라고 평가하였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대가로 핵무기 이용을 위한 전략 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핵전력 이용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발언권을 강화해주면서도 미국의 핵 실행 통제권도 유지했다"라고 언급하였다.

허드슨 연구소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 태평양 안보 석좌는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핵 능력을 공유하는 수준이 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워싱턴 선언은 상징적이며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한국 대중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약속'이 군사적 가치는 없다"라고 분석하였다.

평화연구소 프랭크 엄 박사는 "양국이 확보한 정치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의 결과는 대북 억제 차원에서 실질적인 안보 효과를 제공하거나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나. 북한과 중국의 반응

북한과 중국의 반응은 일반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워싱턴 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폄훼하였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 전략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위험천만한 핵전쟁 책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중국의 관영 통신인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전개하는 것은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해 극도로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평가하

며 "이로 인해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 차원의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 "또 다른 역내 핵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라고 위협하였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은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군사 개발을 핑계 삼아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더 많은 전략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미국이 한반도 핵 문제를 이용해 아시아의 또 다른 위기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핵공유 논란

한국 대통령실의 '워싱턴 선언'에 대한 발표는 핵공유 논란을 일으켰다. 언론에서 다양한 논평이 진행되고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은 한국 특파원단과의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단언하며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주장하며 서둘러 논란의 확산을 진화하였다.

Ⅲ.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분석과 평가

'워싱턴 선언'은 점증하는 북한 핵 위협 대응에 상당히 진전된
한-미 확장억제 전략의 최고봉

1. 한국 국민의 안보 우려에 대한 한-미 정부의 응답

- 한국과 미국의 공동보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함 -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희망적 집단사고에 갇혀 국민의 안보 우려와 지혜를 외면한 결과, 자체적인 해결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동맹에 알리지도 않았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매우 부족했다.

경직된 사고로 일관하던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가로막혀 폭발 직전까지 갔던 한국 국민의 목소리와 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미국에 알리고 해결책을 찾자 함께 노력한 결과물로서의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위협에 한-미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정상적인 방향으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는 믿음을 확신시켜 준 양국 상호 간의 약속으로서 의미가 크다.

북한의 핵전략은 최소 억제·확증 보복에서 비대칭 확산·전 범위 억제와 유사한 형태로 변하고 있어 공세적 핵 태세를 채택했다고 보아야 하며¹⁶⁾ 북한 핵 위협은 한국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고 사람으로 말하면 암과 같은 치명적인 병을 갖게 된 상황으로¹⁷⁾ 이에 대응하는 결의와 실천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미국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확장억제 제공 공개 약속

미국의 핵우산 공약(Nuclear Umbrella, 1978년 SCM¹⁸⁾), 확장억제 공약(Extended Deterrence 2006년 SCM),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2013년 SCM) 등 이전까지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 관련 안전보장을 국방부 장관이 약속해 왔다.¹⁹⁾

2022년 5월 서울에 온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확장억제를 처음 언급하여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의 신뢰를 격상시킨 후 한미 양국의 협력과 노력의 결실로 이번 워싱턴 선언에 성문화하여 약속을 공식화하였다.

미국의 핵사용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양국 최고 리더십의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제고하여 한미 동맹은 핵무기를 포함

16) 김보미, 2023. pp.1-3.

17) 박휘락,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한미 북핵 억제태세 강화를 환영하며” 『데일리안』, 2023.4.28.

18)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1968년부터 시작된 한-미 국방 장관 회담으로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1989). pp.153-161.

19) 국방부, 『2006 국방백서』와 『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6/2014). 각각의 부록 SCM 합의문 참조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사동맹으로 진화하게 되었다.²⁰⁾

3. 북한의 핵 교리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만든 한-미의 공동노력

워싱턴 선언의 내용 중 북한이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문구일 것이다. 이전 정부의 한-미 SCM에서 “(미국 국방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왔다.²¹⁾

윤석열 정부의 한-미 SCM에서는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북한에 명확히 경고했다.²²⁾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꼭 짚어 명시함으로써 북한이 2022년 9월 핵무력 법제화를(교리로 만들고) 완성하고 대한민국에 서슴지 않고 핵 위협을 가해오던 행태에 차질을 빚게 하였고 역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한다.

4. 즉각 실행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함으로써 대북한 역제의 신뢰도를 향상

한-미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미국이 핵을 운용하고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토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의 권한이나 활동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견해도 있으나 한-미 양국이 북한 핵 위협이라는 단일 의제에 집중하여 자주 협의하고 통수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그 구체성과 실효성 면에서 대북 역제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

핵협의그룹(NCG)에서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기획 및 실행하

20) 국가안보실, 앞의 책. pp.30-31.

21) 국방부, 『2018 국방백서』와 『202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2020). 각각의 부록 SCM 합의문 참조

22)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p.361-362.

는 전 과정은 한국과 미국의 억제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수단의 측면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운용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핵-재래식 통합에 기여하고 공간적 측면에서는 미 본토와 한반도 사이의 공간을 전략자산이 채울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능력의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ence)’에 기여할 수 있다.²³⁾

한국은 핵협의그룹(NCG)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국과 연성 핵공유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닦아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핵협의그룹의 정례화와 정책협약이 활성화되는 것을 뒷받침하고 견인해 나갈 수 있는 한국형 핵 작업실을 제도적으로 구비해야 할 필요²⁴⁾ 또한 검토해볼 만하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현시를 한층 더 증진시킬 것을 선언에 포함하였고 곧바로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구체 일정을 언론에 발표하였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²⁵⁾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워싱턴 선언’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언급된 모든 내용들이 현실화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IV. ‘워싱턴 선언’의 보완, 진화 방향과 본질적 대안

한-미가 한 계단 상향시킨 확장억제 전략은 상당한 진전을 가져와 가치 최고봉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 여기고 안주할 수는 없다.

‘워싱턴 선언’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선언의 직접적인

23) 손한별,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향후 과제”, 『안보현안분석』 (대전: 국방대학교, 2023). p. 7.

24) 이수형, “나토 핵기획그룹(NPG)의 설립 배경과 초창기 운용 방식이 핵협의그룹(NCG) 구축에 주는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pp.3-11.

25) “핵공격 가능한 美 전략핵잠수함, 42년만에 부산 왔다 - 한미 첫 핵협의그룹 회의 맞춰 기항... 美, 워싱턴 선언 약속 이행”, 『조선일보』, 2023.7.18.; “北잠수함 침투 막자...해군, 미 핵추진잠수함과 제주서 연합훈련”, 『연합뉴스』, 2023.7.29.

대상이 되어 선언을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에서 분석, 평가하고 보완 내용을 염출해야 근본적인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명확히 그 실효성과 한계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북한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UN)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제시, 추진하고 있다. CVID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11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 북한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²⁶⁾

북핵 당사자인 대한민국도 당연히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멈추어서는 안되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 핵 위협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안에는 행정부, 특히 대통령실에서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와 입법부인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익에 우선권을 두고 법제화해야 할 입법과제, 그리고 북한 핵 위협에 최일선에서 대항하고 있는 국방분야 업무 종사자들의 의식전환을 포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우선 보완해야 할 사항

김정은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은 한국이 여전히 핵을 가질 수 없고 핵 개발도 시도할 수 없다(하지 않겠다)는 점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한반도 내에서 핵에 의한 힘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김정은은 이미 2022년 12월 제8기 6차 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을 당 정책으로 채택했다.²⁷⁾

북한은 한때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 불(不)사용’ 운운하다가 2022년 말부터 대남 ‘핵 선제공격’을 위협하면서 각종 미사일 도발을 빈번하게 전개했고 2023년 들어서는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협박 수준을 넘어 3월 중 잇단 ‘전술핵 공격 훈련’으로 실제 결행 의지를 보이며 위협했으며, 4월 13일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시험

26) 외교부, “北 CVID는 국제법상 의무...선택 여지없어”, 『news1』, 2023.7.18.

27) 한반도 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 앞의 책. p.8.

발사하는 등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²⁸⁾

2023년 들어 5월 중순까지 쏘아올린 15차례의 미사일(초대형 방사포 포함) 가운데 화성-15형(2.18), 17형(3.16), 18형(4.13)을 제외한 나머지 12차례는 사거리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남한을 타격하기에 적합한 미사일 등에 북한은 전술핵 표현을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다.²⁹⁾

김정은은 한반도 내에서 핵 무력에 의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한-미 간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 연합연습 반대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교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 정치, 심리적인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약화 또는 와해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워싱턴 선언’의 구체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정치, 심리적인 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1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한미 양국의 국가안보실이 7월 18일 서울에서 개최하여 핵 관련 협의와 통신망 구축, 인력 파견까지 논의한 사실은³⁰⁾ 동맹의 견고함과 민첩성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핵에 대한 억제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고 볼 수 있다.

2. ‘워싱턴 선언’의 진화 방향

‘워싱턴 선언’에서 김정은이 가장 아파할 부분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문구일 것임은 앞서 살펴보았다.

2022년 9월 북한은 핵무장 법제화 내용을 대폭 개선하고 이 교리에 따라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으로부터 중대 전투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원이 참가한 가운데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의 선제타격이 포함된 핵 운용 연습 및 훈련을 하였다.

28) 한기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전술핵 훈련 실태 및 특징”, 『북한』 2023년 5월호, pp.18-33.

29) 장철운, “북한의 전술핵 개발 현황과 전략적 의도”, 『안보현안분석 203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3. pp.1-2.

30) “한미 첫 NCG 개최, 통신망 구축에 인력 파견까지 합의”, 『파이낸셜 뉴스』, 2023.7.18.

보도된 훈련과정을 분석해 보면, 이는 법제화된 핵전 교리에 따라 치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진행한 훈련으로 보인다. 훈련 말미에 북한이 100여 대의 전투기를 띄운 것을 보면서 한국의 전문가들 대부분이 허풍, 거짓말 등으로 폄하하는 헤프닝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시나리오를 정밀 분석해 보면 섬뜩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북한 핵 무력 제2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저수지(또는 잠수함, 터널, 열차 등을 활용)에서 기습적인 전술핵 타격으로 한국의 지휘부, 군 수뇌부, 각 군 작전사령부, 그리고 한국의 압도적 대응능력 중 하나인 공군력(비행단)을 모두 타격한 결과 한반도에서의 제공권은 당연히 북한이 갖게 될 것이다. 김정은은 이 모든 표적을 타격하는데 충분한 수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후 '7일 전쟁계획'에 따라 전방 군단과 사단의 전술적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의 항공 전력 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이나 일본과 동남아에 산재한 주일미군 기지, 나아가 미국 본토를 핵으로 타격하거나 미국의 증원 전력을 수용할 한국의 항구를 타격하는 순서로 훈련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간의 SCM에서 모호하게 흐려놓았던 확장억제 내용의 틈을 북한이 이용하려 했던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바로잡고 바이든 대통령이 명확하게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핵 운용에 차질을 빚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늘 그래 왔듯이 '워싱턴 선언'의 허점을 찾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할 것이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워싱턴 선언'이 선언이라는 점이다. 한-미 간의 조약이나 국내법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여 정권이 교체된다면 변화를 예상해도 좋다는 뜻이다.

김정은은 미국 내 정치 여론의 흐름을 살피면서 변수에 상응하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가 북핵 대응에서 초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워싱턴 선언'을 조약으로 발전시키던지 선언의 내용이 의회 내에서 국방수권법이나 대북 제재법 등에 반영되어 법적 효력을 갖도록 추진하고 향후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워싱턴 선언'이 최초의 목적과 의도대로 동일한 확장억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한-

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명확히 인식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3. 북한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안

가. 대통령실 : ‘용산 또는 인천 프로젝트’ 시행

(1) 역대 한국 정부의 북한 핵 대응정책 실패 원인 :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

북한 핵에 대해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북핵 1차 위기 시의 노태우 정부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는 비핵화라는 합리적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왔으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시켜 왔다. 역대 정부가 북핵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남-북 간 대화, 대북 경제지원, 핵우산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은 북한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 남-북 관계에서 북은 핵을 개발하고 고도화하여 점차 주도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는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가 가져온 당연한 귀결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³¹⁾

(2)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낙동강 방어선 구축

6.25 전쟁 시 한-미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생존의 위기에서 구해내고 소생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미는 낙동강에 계속 머물러 있을 이유도 당위도 없었고 최종 승리를 위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고 북진하였다. 방어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전쟁의 원리를 따른 지극히 자연스러운 진전이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 현실화하고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는데 따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최후의 방어선을 한-미가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최종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 또는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자국민의 피를 덜 흘리고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목표로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과 같이 - 대통령실은 전략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칭 ‘용산 프로젝트’ 또는 ‘인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워싱턴 선언’에 만족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난한 진전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되며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부단히

31) 최승우, 2021. pp.108-110, 119-121.

전략과 정책을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선의만 믿고 경직된 집단사고에 갇혀 안주했던 전철을 윤석열 정부는 결코 밟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3) 3단계 전략 시행³²⁾

① 1단계 전략(시행 대안) :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

가칭 '인천 프로젝트'는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의 최종 승리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공세적인 수단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공세를 준비하되 그 추진과정은 손자병법에서 제시한 대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온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³³⁾ 추진해야 한다. 첫째, 1단계로 프로젝트는 북한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①시행대안으로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추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원전 사용 후 폐기물 재처리 문제는 산업 차원에서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로 일본, 호주 등을 포함시켜 핵협의그룹(NCG)을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추진된다면 이는 한국의 시행 대안을 달성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21세기 들어서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근거리의 임박한 핵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북한 핵 위협에 30여 년간 시달리면서도 국제평화를 위해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고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철저히 이행해 온 한국의 평화적 태도는 국제사회로부터 존중받아야 하고 이제 한국의 고통에 대해 세계가 귀 기울이고 해결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일본 수준의 재처리시설을 허용해 달라고 세계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도 충분히 수용할만한 것이다.

32) 최승우, 『3중 딜레마에 빠진 김정은의 핵무장, 대한민국의 전략은?』 (서울: 박영사, 2021). pp.340-396 요약 정리.

33) 손자는 싸우지 않고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① '입어불패지지(立於不敗之地) 이불실적지패야(而不失敵之敗也)' ②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 패병선전이후구승(敗兵先戰而後求勝) ③ 기전승불특(其戰勝不忒) 불특자기소조승(不忒者其所措勝) 승이패자야(勝已敗者也)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손자병법 제4편.

②단계 전략(예비 대안) : 한국식 핵 공유 추진

북한이 핵보유국 행세를 하면서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핵 위협을 하거나 재래식 도발 사전 또는 사후 대응 과정에서 핵 위협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프로젝트는 2단계 ②예비대안으로 한국식 핵 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한-미 간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식 핵 공유는 핵 공유 협의의 대상을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 그룹(NCG)을 발전시켜 한-미 양자간의 핵 공유 협의를 하는 것이다. 또한 핵 공유 장소를 한반도 내 또는 동남아의 미군 주둔지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유연한 핵 공유 방안이다.

③ 3단계 전략(최후 대안) :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

북한을 국제사회가 핵보유국으로 묵인하려는 것이 확실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또는 북한이 중대한 재래식 도발을 핵 위협하에 하거나 도발 후 대응과정에서 심각한 핵 위협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프로젝트는 3단계 ③최후대안으로서 핵무장을 최단기간 내에 경제적, 외교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완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는 북한 비핵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국민에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전략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기초로 3가지 대안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조정해 나가야 한다.

3단계 북한 핵 대응 전략은 북한 비핵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현실적 조건에 기반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나 영향 요인 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적 순차 추진, 단계별 별도 추진, 그리고 단계 간 조합 추진할 수 있으며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는 즉시 폐기 절차에 돌입하는 한시적 전략이다.

나. 국회 :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법 제정

(1) 북한 핵 위협 해결을 위한 미국 의회의 역할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자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상임이사국의 동의하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하였는바 2017년에만 2371호, 2375호, 2397호 등 3번의 결의문을 속속 발표하였다.³⁴⁾ 유엔 안보리가 북한

34) 구본학, “북한의 딜레마와 한반도 통일 2030”, 『신아시아』 제26권 3호, 2019.

에 대해 결의문을 속속 발표하자 북한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미국 의회는 자국의 관점에 따라 별도의 제재를 본격적으로 취해 나갔다.

미국 의회의 H.R.757은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 단체와 개인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제재 법안이며 H.R.3364는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대량 현금이 북한에 밀반입되는 것을 막는 것에서 나아가 대량현금이 거래되거나 이전되는 것과 북한의 각종 거래(교통, 광물, 에너지, 금융서비스)에 개입하는 행위, 북한 근로자의 해외파견에 관여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미 의회가 제정한 법에 근거해 이를 구체화하여 행정명령 13722호, 13810호를 발령해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³⁵⁾

(2) 북핵 당사자인 한국 국회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어떤 법을 제정하였는가?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그동안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 협력기금법」 등을 제정하였다. 또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관계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과 핵 무력 고도화가 지속된다면, 평화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으며 교류협력과 관계발전은 얼어붙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의회와 정부에 존재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법령이 북한 핵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에는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제정한 내용들이 국내에서 준수되고 위반자들이 법에 의해 단죄를 받도록 한국 국회는 대북 제재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 관련 법령들과 함께 북한의 핵 고도화를 방지하는 법령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는 서둘러야 한다. 유엔과 국제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한 시간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편이 될 수 없다.

p.185.: 국방부,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p.246.

35) 서보혁 등, 『대북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35, 47-48.

(3) 가칭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비핵화 촉진법」제정

가칭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비핵화 촉진법」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구, 사이버 포함 전 분야에서 제재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 법에 근거한 시행령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통해 제정하되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북한 비핵화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야 한다.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포함한 사이버 첨단영역, 공해상 환적 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위반 사항들을 모두 차단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 국방 분야 종사자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

(1) 북한 핵 위협을 논외로 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을 추구해선 안돼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은 존재할 수 없으며 북한 핵으로 인한 군사-정치적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은 북한이 비핵화하거나 한반도에 핵 균형을 이루는 길 외에는 없다는 단순하고 상식적인 안보 기반을 국방 분야 종사자들이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한 상식적 결론에 따라 구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심지어 북한이 핵무장의 길로 갔다는 사실을 국방 분야 종사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 “과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은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과 9.19군사합의 체결 등으로 군의 교육·훈련과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군비통제’ 정책 추진으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의

미이다.³⁶⁾

(2) 북한 핵 위협 관련 남-북 간 비핵화 합의의 모범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대 정부의 북한 핵 위협 대응 정책은 실패의 길로 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장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다.

중국이 포함된 6자회담의 결과물인 ‘9.19공동성명(2005년)’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준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³⁷⁾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에서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목록에서 이것을 제외 또는 누락시켰다.³⁸⁾ 이와 같이 중요한 합의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북한이 2009년 이 선언을 폐기했다고 발표한 것을 수용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도 이 선언을 이미 폐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 발행된 2022 국방백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이다.³⁹⁾ 국방부는 즉시 이 오류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한 핵 위협을 정치와 군사에서 분리하지 않고 국방 분야 종사자들이 원칙에 입각해 대응한 결과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3) 재래식 전력으로 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위해 5t에 달하는 현무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환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게임체인저’라든지 ‘북핵 위협을 해결할 한방’이라고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기본 원자탄은 20,000t으로 현무의 4,000배의 위력이다. 방사능, 낙진, 열폭풍 등을 제외하고 화력만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이다.

36) "文정부서 軍 골병들어"...사문화 된 9.19군사합의[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2023.5.14.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시작으로 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군비축소를 지향했다.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위한 것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외면하고 ‘남-북한 신뢰구축’,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37) 외교통상부, 『참여정부 외교정책 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07). p.15.

38)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247.; 국방부, 『202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0). p.293.

39)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337.

군사전문가들은 누구보다 깨어서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3차 상쇄 전략은 핵을 보유한 미국의 전략이며 동맹의 일원으로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그러나 상쇄전략은 북한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한민국의 전략이 될 수 없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무책임하게 상쇄전략으로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을 가벼이 여기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손자는 적을 가벼이 여기고 대비가 소홀하게 되면 필시 적에게 사로잡히게 될 수 있음을 “夫惟無慮而易敵者 必擒於人”(부유무려 이이적자 필금어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V. 결론

김정은의 핵무장 고도화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을 향해 전술핵을 사용한 핵 위협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정찰위성을 발사하고(5.31.),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며(6.16, 7.12, 7.24.) 전술핵 탑재가능한 순항미사일 도발(7.22.) 지속하고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을 발사(7.12.)하여 고도 6,000Km까지 치솟아 역대 최장 74분간 1,000Km를 비행하여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음을 과시했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제재를 위반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하였다.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전략의 최고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 국민의 안보 우려에 대해 미국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확장억제 제공을 공개 약속한 것이며 즉각 실행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고 민첩하게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핵 교리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언이 갖는 한계를 직시하여 연합연습을 반대하고 전략자산의 전개를 교란하기 위한 북한의 군사, 정치, 심리적인 활동들을 사전 예방하고 차단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가면서 ‘워싱턴 선언’의 취지를 법제화하는

등 항구적인 산물로 만들어 한미 양국의 정권교체나 외부 세력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작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은 가칭 ‘용산 또는 인천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시행 대안으로 핵잠재력 확보, 예비 대안으로 한국형 핵공유, 최후 대안으로 독자 핵무장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회는 가칭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법’을 제정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국방분야 종사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에 입각해 북한 핵 위협을 논외로 하고 ‘남-북 간 긴장완화’,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구해선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래식 전력으로 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임을 자각해야 한다.

[논문투고일 : 2023.08.16]

[논문심사일 : 2023.08.28]

[논문수정일 : 2023.09.07]

[게재확정일 : 2023.09.11]

〈참고문헌〉

-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대통령실, 2023.
- 국방부, 『200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6.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 국방부,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 국방부, 『202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0.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2.
-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1989.
- 서보혁 등, 『대북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외교부, 『외교백서』 서울: 외교부, 2019.
- 외교통상부, 『참여정부 외교정책 백서』 서울: 외교통상부, 2007.
- 최승우, 『3중 딜레마에 빠진 김정은의 핵무장, 대한민국의 전략은?』 서울: 박영사, 2021.
- 한반도 선진화 재단 북핵대응연구회, 『북핵: 방관할 것인가?』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2023.
- 홍원식 역, 『손자병법 대전』 서울: 일증사, 2000.
-
- 구본학, “북한의 딜레마와 한반도 통일 2030”, 『신아시아』 제26권 3호, 2019.
- 김보미, “북한 핵전략 및 핵태세 평가와 대응방안”, 『안보현안분석』 제204호, 2023.
- 박주화, “핵무장을 원하는 국민인식의 세 가지 특징”,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23.
- 박진호, “국방혁신 4.0과 북핵 위협대응 능력의 일치성 여부” 『북핵 대응과 국방혁신의 합치성』 한기호 의원-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 안보세미나, 2023.
- 박휘락,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한미 북핵 억제태세 강화를 환영하며”, 『데일리안』 2023.4.28.
- 손한별,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향후 과제”, 『안보현안분석』 대전: 국방대학교, 2023.
- 이수형, “나토 핵기획그룹(NPG)의 설립 배경과 초창기 운용 방식이 핵협의그룹(NCG) 구축에 주는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장철운, “북한의 전술핵 개발 현황과 전략적 의도”, 「안보현안분석 203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정보장문제연구소, 2023.
최승우,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연구-엘리슨 모형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한기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전술핵 훈련 실태 및 특징”, 「북한」 2023년 5월호.

“文정부서 軍 골병들어”...사문화 된 9.19군사합의[김관용의 軍界一擧], 『이데일리』, 2023.
“北 핵무력 범제화에 담긴 뜻”, 『KBS 뉴스』
“北잠수함 침투 막자...해군, 미 핵추진잠수함과 제주서 연합훈련”, 『연합뉴스』, 2023.
“한국은 왜 핵무장 원하나”...BBC, 윤 대통령 방미 앞두고 조명, 『연합뉴스』, 2023.
“한미 첫 NCG 개최, 통신망 구축에 인력 파견까지 합의”, 『파이낸셜 뉴스』, 2023.
“핵공격 가능한 美 전략핵잠수함, 42년만에 부산 왔다 - 한미 첫 핵협의그룹 회의 맞춰 기항... 美, 워싱턴 선언 약속 이행”, 『조선일보』, 2023.
WP “한국인, 미 안보 약속에 의구”...한국내 자체 핵무장론 조망, 『연합뉴스』, 2023.
외교부, “北 CVID는 국제법상 의무...선택 여지없어”, 『news1』, 2023.

David Albrigh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rsenal: New Estimates of its Size and Configuration”, *ISIS Report*, 2023.

<https://missilethreat.csis.org/north-korea-missile-launches-1984-present/>

Abstract

Analysis, Evaluation, and Development Plan of the 'Washington Declaration'

Chey Seung woo

The "Washington Declaration" can be regarded as the highest point of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in response to the South Korean people's security concerns and wisdom about the growing and advance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y stating in the declaration that "any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South Korea will face an immediate,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it would cause considerable setbacks in North Korea's nuclear doctrine. South Korea and the U.S. jointly established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and the effectiveness of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was enhanced by specifying and implementing specific measures to be implemented immediately.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a defense line of the Nakdong River jointly established by South Korea and the U.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Just as the Korean War fought back from the Nakdong River defense line and advanced north,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should aggressively evolve their strategies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North Korea will take the initiative based on its superiority in nuclear power on the Korean Peninsula, conducting military, political and psychological provocations to weaken the alliance by opposing joint exercises and disrupting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ssets.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strengthen their alliance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declaration" to maintain a solid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hich will not be swayed by change of government or interference from outside forces.

In order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presidential office should implement tentatively named the 'Yongsan or Incheon' project to get out of the footsteps of previous South Korean governments that failed due to mismatches of goals and means. The three-stage strategy for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s to secure nuclear potential as an alternative to the first stage, promote Korean-style nuclear sharing as a preliminary alternative to the second stage, and promote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as a final alternative to the third stag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enact the tentatively named "North Korea Sanctions Act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Defense workers who will lea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should change their perception based on their expertise. They should be aware that it is deceiving the people to claim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an be suppressed with conventional forces. Except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neither they should not to push for "relaxing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nor "building military trust."

Key words : Washington Declaration, North Korea nuclear threat, extended deterrence, nuclear potential, nuclear sharing, nuclear armament

저자소개(가나다순)

▶ 김성진

통관적(洞觀的) 인식의 저자는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 박사),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ROTC중앙회 논설위원, 국민정책평가신문 책임논설위원, (前)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초빙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기관리·통합방위·대테러 전문가다. 국방·안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군사학 총서 8권을 저술하였고, 학술 논문은 30여 편을 게재하였다. 2021~2022년 대한민국을 이끄는 오피니언 혁신리더상(안보부문, 한국언론기자협회) 등을 수상하였다.

▶ 박동순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탈 냉전기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제분쟁사부장을 역임하였고,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과 숙명여대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 주임교수이다. 최근에는 북한대학원 통일미래최고위과정을 수료하였고, 통일실천교수협회 아카데미사업단장 및 사단법인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 박상중

현재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로 국가안보, 국방개혁, 한미동맹, 국방우주, 적극행정 등을 강의하고 있고 한미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정치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육군사관학교,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천

대학교에서 국방외교, 협력안보, 리더십개발, 조직관리, 전장리더십, 지상작전 등의 강의를 하였으며, 세종사이버대학교 '스트레스 관리와 의사소통'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등재학술지 우수논문상을 7회와 '참국방대인상(지성 부문)'을 수상하였다.

▶ **손창현**

해병대 병으로 2년 6개월 만기전역 후 군이 좋아 공군장교로 재입대하여 총11년간 군사경찰 병과에서 복무하며 대테러작전팀장, 수사계장 등의 보직을 이수한 후 대위로 전역하였다. 2017년 전역 후에는 현재 일반행정사 및 정책분석평가사로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중앙정부 규제혁신 모니터단에서 부단장직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 학력은 고려대 행정학과 학사(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공안행정학 석사(졸업), 고려대 일반대학원 정책학 박사(수료) 이다.

▶ **장미화**

현재 공군본부 공병실 국유재산사업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군본부 우주센터 우주대외협력담당을 역임하고 국방대학교 중견리더교정을 수료하였다. 국방부장관 표창을 3회 수상하였다.(모범군무원, 채용 및 인사 유공, 동원업무 최우수 등)

▶ **최승우**

한반도 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 전문연구위원으로 육군 전투지휘훈련단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정책 전공) 석사, 아주대 공학(NCW 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34년간 육군에 복무하였으며 27보병사단 79보병연대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기획과장, 국방대학교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3중 딜레마에 빠진 김정은의 핵무장, 대한민국의 전략은?』(박영사, 2021), 「국방분야 AI/SW 및 정보보호 인재양성 지원방안 연구」(2021, 과기정통부), 「국방 인공지능센터 창설 및 운용방안」(2023, 국방부) 등 10여 편의 논문과 보고서를 저술하였다.

연구윤리규정

□ 목 적

향균학술지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

□ 적용대상

향균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투고논문 및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

□ 연구자의 윤리의무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향균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연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함.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함.
-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함. 연구결과를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연구자는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함.

□ 부정행위 방지목적

이 규정은 향균학술지에 게재 및 게재신청 된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

□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연구개발 과제 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함.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
-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당원구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행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음.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함.
-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기타 연구 부정행위의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규정에 준하여 적용.

□ 심사주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담당함.

□ 절 차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 절차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함.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됨.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편집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함.

- 연구 부정행위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제 재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혹은 복수의 제재)를 내릴 수 있음.

- 본 학술지에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및 학술지 온라인판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부정행위 및 게재취소 사실 공시

□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연구 윤리규정 위반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논문의 집필자가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편집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 재심위원회 구성

- 재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은 편집위원회의 구성 자격요건과 동일함.
- 재심위원은 최초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새로운 인원이어야 함.

□ 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 및 공지의무

-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공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윤리소위는 이를 성실히 보장하여야 함.

논문투고 및 심사 / 집필요령

□ 논문심사

1. 심사절차

- 가. E-mail 접수(korvass0201@naver.com) 또는
우편접수(우)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구축 후에는 시스템 활용
- 나. 논문 심사(3인) 의뢰 / 심사(2주)
* 제목 또는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 다. 논문심사 결과 접수 및 판정
- 라. 심사결과 투고자 통보
- 마. 수정논문은 1주 이내에 수정 제출 / 접수

2. 심사기준

- 가. 내용의 적절성 : 논문의 주제가 ① 외교 ② 국방 및 안보 ③ 통일정책 ④
향군 제도개선 분야 등에 관련된 주제
- 나. 내용의 창의성 : 논문의 내용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것
- 다. 전개의 논리성 :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
- 라. 향군 발전 및 학문적 기여도 : 논문의 내용은 향군의 제도개선 등에 기
여하거나 학문적 발전에 기여 할 수 있
어야 함
- 마. 형식의 적절성 : 논문양식을 준수
- 바. 연구 방법의 적절성 : 논문은 연구주제에 대한 문제제기, 연구방법, 연
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등에 타당성이 있어야 함.

□ 논문투고

1. 논문 투고자는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 및 그에 준하는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한다. 단 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는 지도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와 공동 연구자로서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는 ‘원고집필요령’을 따라야 하며, 논문주제는 외교, 국방/안보, 통일정책, 향군 제도개선 분야로 한정한다.
3. 투고논문 접수는 이 메일 혹은 출력물이 연구원에 도달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4. 투고원고는 국문요약, 핵심단어, 영문초록,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완전한 논문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제출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투고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하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6. 투고 논문은 연구원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7.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연구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8. 학술지의 발간횟수는 연 2회이며, 발간예정일은 4월 8일과 10월 8일 재향군인의 날로 하며 논문접수 마감일은 발행일 45일 전까지인 2월 25일과 8월 25일까지 수시접수 한다.

□ 확정 및 인쇄

1. 편집위원회에서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주일 이내의 저자 교정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받아 취합한다. 저자 논문은 편집간사의 ‘인쇄 형식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2.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저자의 교정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받아 취합한다. 게재논문은 편집 간사의 ‘인쇄 형식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 :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을 합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A4 약 20매)로 한다. 최대 150매(A4 약 25매)를 넘지 않는다.

2. 용지여백 기준

가. 용지여백(A4 기준) :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46mm	46mm	42.5mm	42.5mm	12.5mm	12.5mm	0mm

나. 본문 서체 : 글꼴 : 신명조 / 글자크기 12point(대제목 14point진하게, 중제목 12point 진하게) / 장평 100% / 자간 0% / 본문 글자크기 10.5point, 줄간격 160% / 첫줄 들여쓰기 10point

다. 각주 서체 : 신명조 / 글자크기 9point

3.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표기

가. 인용

- 1) 직접 인용은 “……”로 표시한다.
- 2)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문의 끝 부분 상단에 주 번호를 달고 그 인용원을 각주에서 밝혀 준다.
- 3) 재인용의 경우에는 누구의 어느 책에서 재인용한 것인지 그 인용원을 그대로 밝혀야 한다.

나. 각주 작성요령

- 1) 저서 및 역서(편저서, 학술지, 월간지 등) : 이중격쇠 『 』로 표기하고,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등 출판정보는 괄호 안에 표기하고, 그 뒤에 페이지를 표기한다. 영문의 경우 first 및 second name(이니셜), last name 순서로 표기하고, 책 제목은 이탤릭으로 표기하며,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등 출판정보는 괄호 안에 표기하고, 그 뒤에 페이지를 표기한다.

가) 박경서, 『국제정치경제론』(서울 : 법문사, 1985), p. 120.

- 나)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1986), p. 12.
- 다) Baylis, John. 박창희(역). 『현대전략론』(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p. 156-157.
- 2) 논문 : 학술지 게재 논문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가) 안병준, “민족주의와 한반도,” 『국제정치논총』 제23집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pp. 29-33.
- 나)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7, No1(1965), p. 627.
- 3) 학위논문 : 한글 학위 게재 논문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가) 홍길동, “조선시대 병영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4), pp. 25-26.
- 4) 세미나 및 학회 발표논문
- 김창수.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정책.” 『아태지역 국가리더십 변화와 안보 도전: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 안보문제연구소 제3회 국제공동학술회의(2013. 4. 11), p. 71.
- 5)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 출판정보 등이 생략된 저자명을 표기한 후 인용페이지를 표기한다. 서양권 저자 이름은 last name만 표기한다. 바로 위의 인용한 자료를 잇달아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p. 2.’, ‘ibid., p. 2.’로 표기한다
- 가) 황병무(2011), p. 300.
- 나) Nye(2013), p. 27. ibid., p. 90.
- 6) 인터넷 자료 : 웹주소의 검색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가) <http://www.technorealism.org>(검색일 : 2019.2.12)
- 나) 국방부(<http://www.MND.go.kr>), “국병의 현주소”(검색일 : 2019.2.12)
- 7)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 가) 황병무,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00일보』, 2003. 4. 19.
- 나) “안보의 현주소” 『연합뉴스』, 2003. 4. 19.

다. 참고문헌 작성요령

- 1) 한글문헌, 동양문헌, 영어, 기타 서양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한글 및 동양문헌은 저자의 성을 가,나,다 순으로 서양문헌은 저자의 성(참고문헌에는 last name을 맨앞에 표기하고 first 및 second name(이니셜)을 표기)를 알파벳 순으로 표기한다. 이때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등 출판정보는 각주에서와는 달리 괄호 없이 표기한다.
- 2)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3)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4) 참고문헌의 기본 양식은 각주 작성요령과 동일하다. 다만 마지막의 쪽수는 제외한다.

3. 기타 참고사항

- 가. 본문 속의 제목들(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에 사용하는 기호 체계는 I., 1., 가., 1), 가), (1), (가), ①, ㉠ 등의 순으로 한다.
- 나. 표 및 그림에는 제목을 붙여야 하고 <표 1>,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예) 출처: 한국은행, 「통계연감」(1985), pp.1-2.
- 다. 본문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는 저자명 우측 상단에 별표(*)각주로 기재하되, 공저의 경우에는 대표저자를 *, 제2공저자를 **, 제3공저자를***...순으로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대표 저자의 이름을 별표 각주에 다시 명기할 수 있다.
- 마. 논문 원고 순서는 ① 논문의 한글 제목 및 영어 제목, ② 저자 의 한글 성명 및 영문 성명, ③ 원고지 5매 이내의 한글요약문과 300단어(words) 내외의 영문 요약문, ④ 3~5개의 한글 및 영문 핵심어(Key Words), ⑤ 참고문헌, ⑥ 영문초록 순으로 작성한다. 논문게제시에는 별도로 200자 내외의 한글 '저자 소개문'(소속 및 지위, 주요 연구관련 경력, 최종학위 수여 기관 및 최종학위 논문제목, 전공분야, 저서 및 대표 논문들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투 고 환 영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연간 2회 학술지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는 재향군인회와 안보에 관련한 제반 문제를 이론적·실증적으로 연구자료를 수록하기 위한 학술지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등재학술(후보)지 등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군회원과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고를 바랍니다.

1. 다른 곳에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글이어서는 안되며, 순수한 창작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연구프로젝트의 요약이나 재정리 등)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2.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는 기고된 원고의 반환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보내실 곳 : E-mail 접수(korvass0201@naver.com) 또는
우편 : 우)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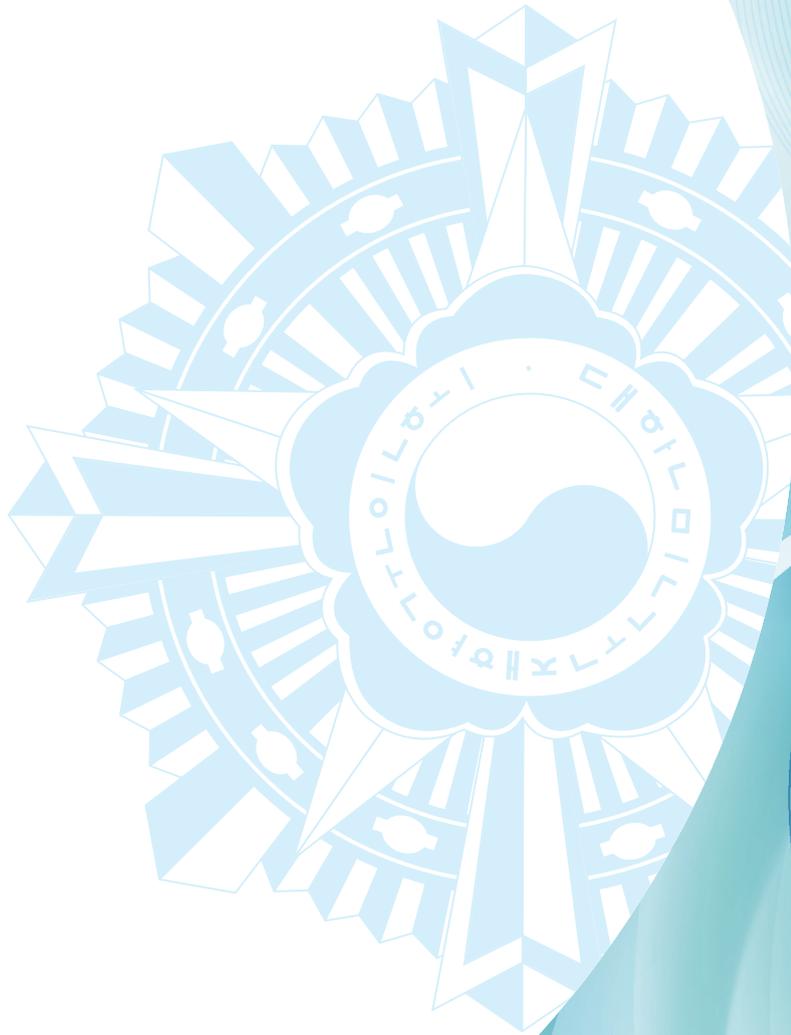
기타 사항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02-499-02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va.or.kr>

ISSN 2672-040X

안보전략연구

2023.10. (제10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